

| 태안종합학술대회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심리적 영향과 공동체 복원



일시: 2009년 5월 22일(금) 10:00 ~ 18:00

장소: 태안군청 중회의실(지하1층)

주최 | 한국환경사회학회,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한서대 내포지역발전연구소
주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서울내러티브연구소
후원 | 태안군청

| 태안종합학술대회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심리적 영향과 공동체 복원



일시: 2009년 5월 22일(금) 10:00 ~ 18:00

장소: 태안군청 중회의실(지하1층)

주최 | 한국환경사회학회,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한서대 내포지역발전연구소
주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서울내러티브연구소
후원 | 태안군청, 한국학술진흥재단

[전 체 일 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심리적 영향과 공동체 복원

□ 개회식 10:00 ~ 10:30

사 회: 구도완 한국환경사회학회 총무(환경사회연구소 소장)
개회사: 노진철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경북대 교수)
김검훈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소장(한남대 교수)
최납희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소장(서울간호대 교수)
축 사: 진태구 태안군수
이용희 태안군의회 의장

□ 제1분과 10:30 ~ 12:3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대응과 복원

좌장: 노진철(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논 문 발 표]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연구"
박재목(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2.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방제종료시점의 사회적 의미"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순애(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희선(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3.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 생태계 피해 및 복원과 향후 과제"
이평주(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토 론]

임효상(푸른태안 21 위원장)
김종인(한서대 내포지역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상환(충남도 환경사무관, 생태보전담당)
이기재(태안군 재난관리과장)

□ 점심식사 12:30 ~ 13:30

□ 제2분과 13:30 ~ 15:3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 영향과 공동체 회복

좌장: 김세호(한서대 내포지역발전연구소 자문위원, 행정학과 겸임교수)

[논 문 발 표]

1.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 재난' 연구"
이시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2.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홍덕화(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피해지역의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김검훈(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소장, 한남대 교수)

[토 론]

최한진(태안군 유류피해대책연합회 사무국장)
이상현(한신대 교양학부 교수)
배정환(한서대 행정학과 교수)
최광용(태안시대 편집국장)

□ 휴식 15:30 ~ 16:00

□ 제3분과 16:00 ~ 18:0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심리적 영향과 정신보건

좌장 : 최남희(서울 내러티브연구소 소장, 서울간호대 교수)

[논 문 발 표]

1. “재난으로 인한 생태계의 혼란과 공동체의 위기”
변주훈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2. “태안지역 어린이 심리지원 사례”
유정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연구원,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3. “재난이 태안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 시점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교현(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권선중(충남대 중독행동연구소 연구원), 김세진(충남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토 론]

허종일(태안보건의료원 원장)
 구분춘(태안군 모항리 어촌계장)
 허장(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철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18:00 폐회

[학생 포스터 발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어린이 재난안전 교육사례 : 미국의 FEMA”

고등학생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정주영

대학생 - 세종대학교 생명공학부 1학년 천호준 외 1명

<행사장 약도>



<문의처>

한국환경사회학회 www.ecosociety.org

총무 구도완 kudowan@korea.com 010-8704-7678

간사 임순광 soclsk@paran.com 010-6523-3572

간사 홍덕화 kritik@dreamwiz.com 011-772-9045

[목 차]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연구(박재목).....3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방제종료시점의 사회적 의의(윤순진, 박순애, 이희선).....33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 생태계 피해 및 복원과 향후 과제(이평주).....67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 재난’ 연구(이시재).....87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홍덕화, 구도완) 121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피해지역의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김검훈)147

- ◆재난으로 인한 생태계의 혼란과 공동체의 위기 -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를 중심으로(변주훈) 179

- ◆기름유출 피해자들의 외상경험과 심리적 충격에 대한 조사(유정).....199

- ◆재난이 태안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 시점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김교현, 권선중, 김세진)209

* 이 발표논문집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제1분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대응과 복원

좌장: 노진철(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논 문 발 표]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연구”
박재목(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2.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방제종료시점의 사회적 의의”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순애(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희선(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3.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 생태계 피해 및 복원과 향후 과제"
이평주(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토 론]

임효상(푸른태안 21 위원장)
김중인(한서대 내포지역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상환(충남도 환경사무관, 생태보전담당)
이상현(한신대 교양학부 교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연구

박재목(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I. 연구문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07년 12월 8일부터 2008년 5월말까지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1백3십7만여 명에 이른다. 공식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2008년 6월 8일에 종료된 후에도 소규모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5월말까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수를 전체 자원봉사자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¹⁾ 이 집계에 따르면 176일간에 걸쳐 하루 평균 7,821명의 자원봉사자가 태안으로 몰려든 셈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방제작업 참여로 사고 직후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던 연안 생태계가 예상을 뒤엎고 조기에 정화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성과가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자원봉사활동이 가져온 방제 성과를 논외로 하더라도 하나의 재난에 이처럼 대규모의 자원봉사자가 몰려든 것 자체가 매우 경이로운 일이었다.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의 기름 제거 작업을 ‘태안의 기적,’ ‘서해안의 기적,’ ‘세계 기록,’ ‘민족의 저력’ 등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자원봉사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태안의 기적’은 사회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많은 의문들을 남기고 있다. 태안의 자원봉사활동은 언론으로부터는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이창현·김성준, 2008; 이창현, 2008; 이시재, 2008; 윤순진, 2008; 박동균, 2008; 성기환, 2008)는 아직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중심 주제로 다룬 논문은 더욱 소수이다.

태안 자원봉사활동을 사회학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시재(2008)와 윤순진

(2008)의 글을 들 수 있다. 이시재는 태안으로 몰려든 자원봉사행렬이 시민운동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는 자원봉사 행렬은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알게 널리 퍼져 있는 공공의식”의 작용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시민의 공공의식을 어떻게 자극하여 사회변혁의 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바로 시민운동의 과제”라고 보았다.

윤순진(2008)은 현장 방문과 이 메일 조사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참여 활동(참여 동기·경로·형태, 참여 횟수와 시기 및 참여 소감), 자원봉사자의 봉사 경험과 미래의 선택, 사고 및 사고 관련 기관에 대한 인식과 평가, 자원봉사자의 환경의식과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자발적 참여자든 소속기관의 독려에 의한 참여자든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참여 후 “고통을 함께 나누는 데서 오는 연대의식을 느꼈으며 자원봉사 자체의 기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윤순진, 2008: 174). 또한 응답자들의 96.4%가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때 다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봉사활동이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직화와 전략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았다(윤순진, 2008: 175). 윤순진의 연구는 경험적 조사를 통해 태안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와 사건 해석을 밝히고자 한 최초 연구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시재 및 윤순진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로, 130만 명을 넘어서는 태안 자원봉사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자 집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동기와 생각으로 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을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사용될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모델은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분석 내용이 전체 자원봉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공식 집계 자료를 활용하여 태안 자원봉사활동의 윤곽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이 논문의 본론으로서 정보 전달 및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매스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적 속성 및 참여자의 효능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분석 틀

1.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사회적 기능

1) 2008년 5월말 경에 ‘어느 정도 방제작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행정 당국은 ‘6월 8일로 자원봉사자 접수 및 안내를 종료하고’ 그 후에는 ‘전문방제업체와 지역 주민들이’ 마지막 방제작업을 이행하게 하였다(태안군, 2008: 216). 공식적으로 행정당국이 자원봉사활동 접수와 안내를 종료한 후에도 자원봉사자의 방제활동은 계속되었지만 참여자의 수는 많지 않다.

자원봉사활동(volunteering, volunteer work)은 에타성(altruism), 자발성(voluntary work) 및 무보수성(unpaid work)을 특징으로 한다. 때때로 일에 대한 경험을 쌓거나 봉사 경력을 얻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윗사람이나 동료의 강권에 의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으며, 봉사자에게 식사, 교통비 등의 형태로 비용의 일부가 주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이념형적 자원봉사활동은 위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집단, 또는 대의(cause)를 위해 무보수로(freely) 시간을 투하하는 활동”(Wilson, 2000: 215) 또는 “타인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행정안전부, 2008b: 1)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와는 달리 자원봉사활동을 정의함에 있어서 활동의 지속성이나 조직적 맥락을 강조하는 학자도 있다. 오모토와 스나이더(Omoto & Snyder)는 “타인의 복리(well-being)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속적 활동”(Omoto & Snyder, 1995)이라고 정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페너(Penner)는 “자원봉사활동을 타인에게 이득을 주고 조직적 상황 내에서 일어나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친사회적인 행동(prosocial behavior)”이라고 정의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장기성(longevity), 계획성(planfulness), 의무화되지 않은 도움(nonobligatory helping), 조직적 맥락(organizational context) 등 네 가지를 들었다(Penner, 2002: 448-449).

그러나 오모토와 스나이더 그리고 페너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조직적 맥락을 강조했다고 해서 이들의 정의가 윌슨 등의 보다 일반적인 정의와 배타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오모토와 스나이더 그리고 페너의 정의는 단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조직적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음이다. 실제로 페너는 일회적으로(one-time basis) 이루어지거나 독립적으로(on their own) 이루어지는 자원봉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대부분의 자원봉사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조직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Penner, 2002: 448-449)을 강조했다. 여기에서는 전자의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자원봉사활동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통상적인 경제활동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독특한 경제적·사회적 결과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경제적 결과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또는 사회가 요구하기는 하지만, 사적 또는 시장 부문(private or market sector)이나 공공 부문(public sector)이 지불하지 않는 노동을 무보수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창출해 낸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독립 부문(independent sector)’이다. 독립 부문의 규모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시민문화(civic culture)가 발전한 국가의 경우 그 규모는 매우 크다. 2006년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20억 불에 이르며, 이는 같은 해 미국 GDP 131,784억 불의 1.2%에 해당된다.2) 이러한 비중은 2002년의 2.5%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3) 한국의 경우 2008

년 자원봉사활동의 총 경제적 가치는 7조 389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2007년 GDP의 0.93%에 해당된다(행정안전부, 2008b: 10; 59-61).

사회학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측면은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결과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그 자체가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면서 동시에 사회자본을 축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 잠재력을 완화하고, 나아가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의 기초를 닦아준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은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 자본의 지표라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자원봉사활동이 갖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의미 때문에 누가 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가는 중요한 이론적 관심사였다. 이러한 관심에서 출발된 많은 논의들은 자원봉사의 동기를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다. 자원봉사의 동기에 관한 이론적 탐구는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진해되었다. 그 하나는 일반 사회심리학의 이론을 자원봉사활동에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봉사활동 자체를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1) 일반 사회심리학 이론의 적용

일반 사회심리학 이론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연구에 적용되어온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아젠과 피시마인(Ajzen & Fishbein, 1980)의 이성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과 브룸(Vroom, 1964)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ET)이 있다. 이성적 행동이론은 행위를 의도의 산물이라고 본다. 그리고 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규범의 융합물이라고 본다. 이 이론을 자원봉사활동에 적용해 보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사회 이데올로기에 의해 결정되는 규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대이론은 어떤 행동이 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데 대한 주관적 가능성(기대)과 그 성과의 바람직함(가치)이 어떤 행동에 대한 동기를 결정해 준다고 본다. 이 두 이론은 일반 이론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을 밝혀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사회심리학 이론인 까닭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특수한 행위의 동기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가 2007년에 발행한 *Volunteering in America: 2007 State Trends and Rankings in Civic Life*, Washington에 따르면, 2006년에 6천1백20만 명이 81억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투하했다(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2007: 27). 이 봉사시간에 미국의 당시 비농업부문 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인 18.77달러를 곱하면 약 1,520억 불이 된다. 이는 2006년 미국 GDP가 13조 1,784억의 불의 1.2%에 해당된다.

3) 2002년의 미국인은 190억 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했고, 그 가치는 2,260억 달러에 이른다. 이 규모는 전 세계 국가의 85%의 GDP를 상회한다(Penner, 2004: 648).

2)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관한 이론

일반적인 사회적 행위가 아닌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에 초점을 맞춘 이론 또한 다양하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필리아빈과 캘러로(Piliavin & Callero, 1991)의 역할정체성모델(role identity model, RIM), 페너 등(Penner et al, 1997; Penner, 2004)의 자원봉사 의사결정모델(decision to volunteer model, DVM), 스나이더 등(Clary et al, 1998; Clary & Snyder, 1999, Omoto & Snyder, 1995)의 기능이론(functional theory, FI) 등이 있다.

필리아빈과 캘러로의 역할정체성모델(RIM)은 자원봉사활동의 이해에 있어서 역할 이론과 자원봉사활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다. 이 점에서 역할정체성모델은 앞의 이론들에 비하여 사회학적 접근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복수의 역할(multiple roles)을 갖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받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원봉사자 역할이 내면화되고, 자아의 한 요소, 하나의 정체성 또는 역할 정체성'이 된다(Piliavin & Callero, 1991; Piliavin, Grube & Callero, 2002: 472). 사람들은 변화된 자아 개념에 맞추어 행동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역할 정체성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역할정체성모델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의 동기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접근을 제공한다.

페너 등의 자원봉사 의사결정모델(DVM)은 역할정체성모델보다는 훨씬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한다. 페너 등은 초기 자원봉사 의사결정 요인으로서 인구학적 특징, 개인적 속성,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압력(volunteer social pressure), 자원봉사 촉구 요인(volunteer activator) 등의 네 가지를 들었다. 여기에서 인구학적 변수는 교육 수준, 소득 등의 변수를 말한다. 인구학적 변수는 그 자체로서 자원봉사활동의 결정 요인은 아니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자유로운 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친사회적 행동의 실천에 요구되는 문제의 인식, 동정, 자신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개인적 속성은 신념과 태도, 욕구와 동기 및 인성 특징을 말한다. 사회적 압력은 타인의 요청, 권유, 기대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촉구 요인은 애인의 상실에서부터 강한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이미지나 메시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종류의 자극을 말한다(Penner, 2004: 648-651). 앞에서 살펴본 역할정체성모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자원봉사 의사결정모델은 봉사활동의 시작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능이론(FI)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욕구 또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고 본다. 똑 같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다른 이유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한 개인이 자원봉사를 통해 충족시키게 되는 욕구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능 이론가들은 자원봉사의 동기로서 6가지를 들고 있다(Clary at

al: 1998). 여섯 가지 동기는 가치 동기(타인에 대한 애타적이고 인간주의적인 관심과 관련된 가치를 표출하기 위해), 이해 동기(새로운 학습 경험을 얻기 위해 그리고/또는 사용하지 않은 채 지나갈 수도 있는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사회적 동기(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력 동기(경력과 관련된 경험을 얻기 위해), 보호적 동기(자신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줄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상 동기(심리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등이다.

3. 재난 시 자원봉사활동의 특수성과 분석 모델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접근들은 모두 일상적 시기에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일상적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든 재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기본적으로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의 이론적 접근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재난 상황의 자원봉사활동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재난 시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둘러싼 상황과 조건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자원봉사활동을 결정하는 데는 추가적 요인이 개재하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한 상황은 긴급(emergency) 상황을 말하며 특수한 조건은 전달되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가 전달되는 장소 및 시기의 특정성을 말한다.

1) 긴급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의 동원

긴급 또는 위기(crisis) 상황에서는 평시와 다른 특수한 동기 형성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특수한 동기 형성 과정이란 평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원(mobilization) 과정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동원 과정은 문화적 지향의 영향을 받아 사회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로 긴급 상황으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을 자극하는 강렬한 메시지가 대중 매체 또는 인터넷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재난 후에는 친사회적 행동을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치와 규범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치료 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또는 '애타적 공동체'(altruistic community)의 출현(Fritz & Matheson, 1957; Barton, 1969)이라 한다. 이러한 심리적 공동체의 형성으로 사람들은 재난 시에 혼란, 무법성, 비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동 대신에 '친사회적이고,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이고 협력적이며, 도움을 주는 반응'(Michael, 2007: 634)을 보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재난 시의 자원봉사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 소통'(disaster communica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속하게 형성된 '애타적 공동체' 속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분위

가 확산되면, 조직화된 구호단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상황-특수적'(situation-specific) 봉사자들이 재난 현장에 출현하게 된다. 그 결과 재난 시 자원봉사활동은 일상적 시기의 봉사활동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페너가 지적한 자원봉사활동의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도움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성, 계획성, 조직적 맥락은 재난 시기의 자원봉사활동에서는 그대로 나타나기 어렵게 된다. 자원봉사활동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위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봉사자들은 재난 구호를 위해 적지 않은 준비를 하게 되지만 다른 일상적 계획을 크게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재난 시 자원봉사활동은 반(半)계획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일정 수준 조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조직들은 대부분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이며 느슨한 조직일 수밖에 없다. 재난에 대한 준비가 취약한 사회일수록 이러한 동원된 친사회적 행동이 자원봉사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2) 특수한 조건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선별

재난 시에는 노동력 및 재능의 제공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진다. 우선 재난 구호활동은 자원봉사자가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를 제한한다. 구호활동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육체노동이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도 재난이 일어난 현장으로 국한된다. 따라서 봉사자들은 현장으로의 이동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기도 재난 직후의 짧은 시기로 제한된다. 중요한 점은 일상적 시기에는 자원봉사자가 서비스의 종류, 제공 장소, 제공 시기를 선택하는 데 반하여 재난 시에는 구조 또는 복구 활동의 특수성이 자원봉사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3) 분석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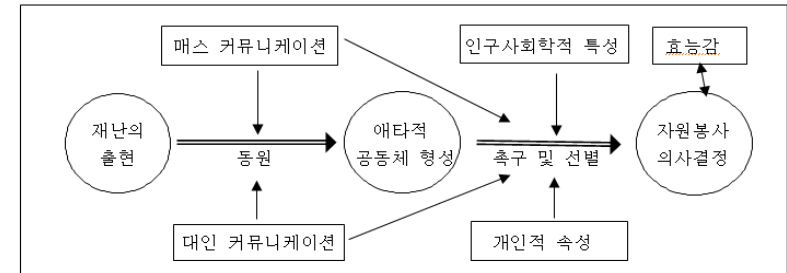
이 연구는 허베이 스프리트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전개된 자원봉사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일반의 의사 결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과 재난 상황에서의 자원봉사 의사결정에 특별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분석 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접근은 앞에서 살펴본 페너의 의사결정모델이다. 이 모델의 강점은 다른 접근에 비하여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의 강조점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자원봉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동원'과 '촉구 및 선별'의 2단계 과정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다. 동원은 행동을 위한 동원이 아니라 행동에 필요한 심리적 동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애타적 공동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타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 동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디어에 의해 전달되는 이미지와 메시지이다. 그러나 애타적 공동체가 형성되어도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다. 공동체 구성원은 결국 방관자와 자원봉사자의 2개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과정을 '촉구 및 선별' 과정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의 강조점은 '동원'과정, '촉구 및 선별'과정, 활동의 지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우선 '동원'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촉구 및 선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함께 페너가 의사결정모델에서 강조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적 속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차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는 효능감, 즉 보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2단계 과정과 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기름유출사고 방제작업 자원봉사 의사결정 모델



III. 태안 자원봉사활동의 개요: 공식 집계 자료를 중심으로

1. 자원봉사자의 규모

행정안전부의 공식적 집계(4)에 따르면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태안에서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총수는 연인원으로 1,376,569명이다(행정안전부, 2008: 442). 그러나 자원봉사자 관리체계 상의 문제와 자원봉사활동 자체의 특성 때문에

4) 여기에서 말하는 공식적 집계란 행정안전부가 2008년에 발행한 「자원봉사활동백서: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 방제작업」에 수록된 일자별 참여 단체 및 인원 현황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도 일자별 인원을 보고 자료의 형태로 발표한 바 있는데, 총계는 물론 일자별 인원이 행정안전부 집계와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집계를 기준으로 삼는다. 참고를 위해 해양경찰청의 집계 자료를 아래에 표로 제시한다.

이 집계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 직후에는 봉사활동 관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12월 13일에 이르러 비로소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때 재난상황실 인원이 70명으로 증가되었고, 업무 분담체계도 마련하였다. 이 인원도 부족하여 나중에는 110명으로 증가되었다(태안군, 2008: 214-215). 그 후에도 해양경찰청 방재대책본부와 태안군 간의 업무 분장을 둘러싼 혼선이 야기되다가 12월 24일에 가서 업무 분담이 확정되었다(행정안전부, 2008: 97). 관리체계가 마련된 후에도 한동안 매일 수만 명씩 자원봉사가 몰려들어 '접수 절차가 마비'(태안군, 2008: 216)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접수 절차 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또한 자원봉사자 중에는 처음부터 접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기관이나 단체 단위로 참여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또는 친구 또는 지인들과 함께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접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의 자원봉사자의 총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보다 많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2. 시기별 추이

자원봉사활동은 사고 이튿날인 2007년 12월 8일부터 2008년 6월 초순까지 이루어졌다. 태안군이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 접수 및 안내를 종료'한 시기는 2008년 6월 8일이다(태안군, 2008: 216). 그 후에도 봉사활동은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월별로 보면,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사고가 난 2007년 12월이었다. 12월에는 매일 수만 명에 이르는 봉사자가 태안으로 몰려들었다. 이 시기의 최소 인원은 연말인 12월 31일의 5,708명이고 최대 인원은 12월 27일의 51,055명이었다. 2007년 12월의 하루 평균 참여 인원은 27,172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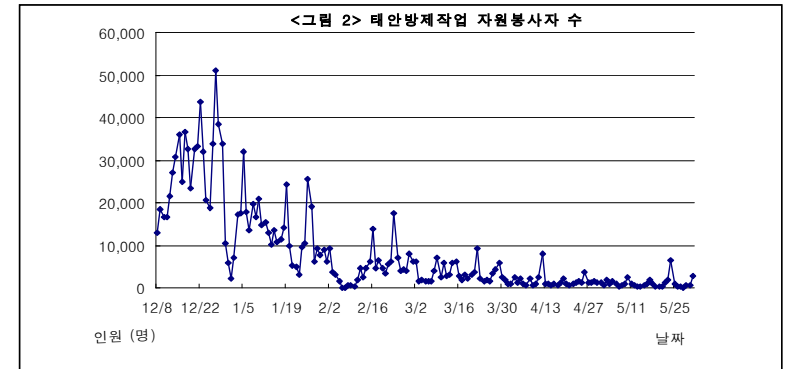
2008년 1월에는 전달에 비해 참여 인원이 크게 줄기는 했어도 자원봉사의 행렬은 여전히 길게 이어졌다. 연초인 1월 1일과 2일에는 봉사자 수가 천명대로 떨어졌지만,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매일 만 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몰려들었다. 2008년 1월의 하루 평균 자원봉사자 수는 13,289명이었다. 1월의 최소 인원은 1월 1일의 2,066명이고, 최대 인원은 1월 5일의 32,060명이었다.

2월 이후에는 봉사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2월의 경우, 1만 명 이상의 봉사자가 있었

구분	계	해양경찰	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주민	군인	업체	자원봉사	지자체
인원	2,130,772	17,460	32,356	6,663	562,935	152,695	55,249	1,226,730	76,684

자료 출처: 해양경찰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주간 방재 종합보고」(2008.9.13-9.19)

던 날은 2월 16일과 23일의 2일뿐이었다. 2월 7일 구정에는 104명만이 참여했다. 그러나 2월과 3월에도 1일 평균 봉사자 수는 각각 4,849명과 3,542명에 이르렀다. 4월과 5월에는 하루에 백 명대 인원이 참여하는 날이 점차 늘어났고 5월 28일에는 전체 자원봉사기간 중 가장 작은 인원인 62명이 참여했다(행정안전부, 2008: 442-444). 2007년 12월 8일부터 2008년 5월 31까지의 자원봉사자 수의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3. 자원봉사자의 지역별 구성 및 직종·단체별 구성

태안 자원봉사자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는 사회과학적으로 매우 흥미 있는 문제이지만, 공식 통계 자료는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공식 통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봉사자의 지역별 구성과 직종·단체별 구성이다. 직종·단체별 구성의 경우, 분류 체계에 직장 개념과 소속 단체의 개념이 섞여 있어 이를 통해 봉사자의 성격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참여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

1) 지역별 구성

봉사자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충남이 275,24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 경기, 경남, 대전, 인천, 충북의 순으로 자원봉사자가 많았다(<표 1> 참조). 수도권의 3개 시도에서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이들 시도의 인구 규모에 비춰 볼 때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경남으로부터 많은 자원봉사자가 왔다는 것도 인구 순위에 비춰볼 때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다만, 지역의 인구 규모에 비하여 충남, 대전, 충북에서 온 자원봉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들 시도가 태안과 같은 충청권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부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등의 봉사자 순위가 인구 비중의 순위에 비하여 낮은

것은 접근성이 불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태안 자원봉사 참여 결정에는 지리적 거리와 함께 심리적 거리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1> 시도별 자원봉사자

시도	봉사 인원	봉사자 순위	인구 순위	시도	봉사 인원	봉사자 순위	인구 순위
서울	269,537	2	2	충북	40,755	7	13
부산	27,086	12	3	충남	275,240	1	8
대구	27,981	10	7	전북	29,641	9	10
인천	54,237	6	6	전남	22,834	13	9
광주	20,724	14	12	경북	31,345	8	5
대전	56,489	5	11	경남	72,013	4	4
울산	17,425	15	15	제주	680	16	16
경기	186,652	3	1	기타	216,009	-	-
강원	27,921	11	14	계	1,376,569	-	-

출처: 봉사자 수는 행정안전부(2008: 445)에서 그리고 인구 순위는 통계청 통계DB 중 시도별

인구 구성비에서 가져옴

2) 직종·단체별 구성

<표 2>는 행정안전부 자료에서 직종 및 단체별로 구분되어 있는 범주를 부문 개념을 적용하여 재분류하여 부문별·직종/단체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부문 개념을 도입한 까닭은 부문별로 자원봉사 참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참여 방식에 따른 봉사자 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참여 방식에 있어서 공공부문은 '조직의 동원'을, 기업부문은 '조직의 권유'를, 민간단체부문은 '조직의 안내'를 그리고 개인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의 '자발성'의 수준은 뒤로 갈수록 높다.

이렇게 볼 때, 태안 자원봉사자의 32.7%에 해당되는 공공부문 참여자(449,824명)는 조직의 동원에 의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문 참여자 163,612명(11.9%)은 조직의 권유에 의해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55.4%를 차지하는 민간단체부문 및 개인부문 참여자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페너(Penner, 2002: 448-449)가 강조했듯이, 자원봉사활동이 기본적으로 조직적 맥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수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경직되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표 2> 자원봉사자의 부문별·직종/단체별 구성

부문	직종 또는 단체	인원	부문	직종 또는 단체	인원
공공 부문	경찰·군인·소방대	311,562	민간 단체 부문	여성단체·부녀회	8,195
	공무원	138,262		새마을단체	14,299
기업 부문	금융기관	30,613	개인 부문	장애인단체	215
	기업체	132,999		외국인	932
민간단체 부문	종교계	379,707	기타 자원봉사자		252,419
	학생	107,366		계	1,376,56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2008: 444에서 재구성

IV. 태안 자원봉사활동의 분석: 자원봉사자의 성격, 참여 경로 및 동기를 중심으로

1. 조사방법과 자료

1) 설문조사 대상 집단의 선택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조사대상자의 확보에 있다. 자원봉사자의 수는 많지만, 이들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들의 E-mail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인터넷 카페의 협력을 얻어 E-mail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태안 자원봉사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인터넷 카페는 '태안사랑봉사단'

<<http://cafe.daum.net/Taeanlove>>(아래에서는 '태사봉'이라 함)과 '사랑海 시커먼 기름뿔'을 걸어내고 바다 살려요<<http://cafe.naver.com/greesea>>(아래에서는 '사랑海'라 함)이며, 환경단체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다.

2) 조사 방법과 조사 기간

조사 대상자가 특정 단체 또는 카페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네 개 단체 및 카페별로 표본의 수를 할당하였다. 각 단체 및 카페별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인원의 10%를 표본으로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랑海'의 경우에는 회원의 수가 특별히 많기 때문에 표본을 500명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과정에서 할당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만 설문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모든 회원들에게 E-mail을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할당된 표본만큼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회신을 받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두 개의 환경단체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는 할당된 표본을 쉽게 확보하였으나, 두 개의 카페 회원들로부터는 할당된 표본만큼 응답을 받지 못했다.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였다. 조사대상자 즉 단체(카페)별 봉사활동 참여자 수, 할당된 표본의 수, 최종응답자 수는 <표 3>과 같다.

5) 다른 세 단체(카페)의 경우에는 E-mail로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나, 사랑海 카페의 경우, 웹설문지가 E-mail로 전송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지사항 창에 웹설문지를 올려 회원들이 조사에 응할 수 있게 하였다.

<표 3> 각 단체 및 카페별 표본과 분석 대상자

활동 단체(카페)명	조사대상자	할당된 표본	최종 응답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500명	50명	50명
대전환경운동연합	200명	20명	20명
태사봉	2,020명	200명	185명
사랑海	78,664명	500명	295명
계	81,384명	770명	550명

3) 질문 항목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포함해서 총 37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 영역은 참여 경로, 참여 후 활동 평가, 사고 관련 기관의 대응 평가, 봉사 경력과 재참여 여부, 안전수칙 인지 여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 대한 태도, 환경 문제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 등이었다. 구체적인 변수 내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설문문의 구성

변수의 범주	변수(질문 번호)	비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별(30번), 연령(31번), 거주 지역(32번), 직업(33번), 월평균소득(34번), 학력(35번), 종교(36번), 혼인 지위(37), 소속 봉사 주관단체(1번)	
참여 경로	참여 횟수(2번), 참여 시기(3번), 사고를 알게 된 경로(4번), 봉사 결정에 영향을 준 매체(5번), 참여 권유 여부(6번), 함께 참여한 사람(7번), 참여결정 과정(8번), 참여 동기(9번)	
참여 후 활동 평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10번) 자원봉사활동 개선 사항(11번) 자원봉사활동 후 개인적 어려움(12번) 사고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일(13번) 사고에 책임 있는 기관(14번)	*10번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
사고 관련 기관의 대응 평가	기관과 단체의 대응에 대한 평가(15번) 기관의 대응에 대한 비교 평가(16-1번, 16-2번)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평가(19번) 언론보도 부정 평가 이유(19-1번) 자원봉사에 대한 언론 보도 평가(20번)	*15번 문항은 5점 척도임 *16-1, 16-2번은 복수 질문임 *19-1번은 부수 질문임
봉사 경력과 재참여 여부	자원봉사 경력 소유 여부(17번), 재참여 의사(18번), 재참여 거부 이유(18-1번)	*18-1번 문항은 부수 질문임
안전수칙 인지 여부	참여 전 안전수칙 인식 여부(21번) 안전수칙 인식 경로(21-1번)	*21-1번 문항은 부수 질문임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 대한 태도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회원여부(22번) 참여할 의사 여부(22-1번)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활동 평가(23번)	*22-1번 문항은 부수 질문임
환경 문제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견해(24번),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견해(25번),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견해(26번), 정부와 민간기관의 대북지원에 대한 견해(27번),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에 대한 견해(28번), 소고기 관련 촛불집회에 대한 견해(29번)	*24-29번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

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 구성을 보면,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다른 조사의 결과에 비하여 여성의 비중이 약간 크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20대가 절반을 약간 넘는 51.3%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30대와 10대가 많다. 다른 조사의 응답자에 비하여 젊은 층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이것은 주로 카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사의 모집단 자체의 연령이 낮은 데 기인한다. 응답자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서울, 인천 및 경기를 합한 수도권이 64.9%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충청권(18.9%), 영남권(10.7%)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충청권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은 <표 1>에서 보듯이 충청권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탓이기도 하지만, 이 요인보다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70명이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것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학생이 4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기술직, 서비스직/판매직의 순서로 비중이 크다. 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집단 자체의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리직/전문직의 비중이 16.5%로 기대 이상으로 큰 것은 사무직의 일부가 관리직으로 응답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순진의 조사에서 사무직이 19.8%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통계에서도 사무직이 16.3%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하여 본 조사 결과에서는 사무직이 13.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 소득이 200-299만원인 응답자가 26.2%로서 가장 많기는 하지만, 300-399만원, 100-199만원, 400-499만원 및 500-1,000만원의 소득을 얻는 사람도 각각 10-20%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학력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졸과 대학원 졸을 합하면 58.1%에 이르고, 전문대졸 이상은 73.0%에 이른다. 이러한 학력별 구성은 윤순진의 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에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에서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다른 두 조사에서보다 크다. 응답자의 종교별 구성을 보면, 무종교가 5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순으로 많다. 윤순진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기독교 신자가 다소 적고, 그 대신에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혼인 지위 상으로는 미혼자가 84.4%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은 주로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 구성된 본 조사의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강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특성은 비단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한 반응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태안 자원봉사자 전체의 성격을 밝히기는 어렵다.

<표 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표

변수	범주	본 조사	윤순진 조사 ¹⁾	행안부 조사 ¹⁾	전국 통계 ²⁾
성별	남	258(46.9)	163(58.4)	46(59.7)	23,465,650(49.9)
	여	292(53.1)	116(41.6)	31(40.3)	23,575,784(50.1)
연령	19세 이하	104(18.9)	12(4.3)	조사 대상 제외	12,086,651(25.7)
	20대	282(51.3)	121(43.5)	19(24.7)	7,333,970(15.6)
	30대	116(21.1)	70(25.2)	14(18.2)	8,209,067(17.5)
	40대	31(5.6)	57(20.5)	18(23.4)	8,023,940(17.1)
	50대 이상	17(3.1)	18(6.5)	26(33.8)	11,387,806(24.1)
거주 지역	서울	209(38.0)	127(45.4)	변수 미 설정	9,762,546(20.8)
	인천·경기	148(26.9)	36(12.9)		12,858,686(27.3)
	강원	12(2.2)	2(0.7)		1,460,770(3.1)
	충청권	104(18.9)	87(31.1)		4,771,840(10.1)
	영남권	59(10.7)	20(7.2)		12,649,209(26.9)
	호남권	17(3.1)	6(2.1)		5,007,697(10.6)
	제주도	1(0.2)	1(0.4)		530,186(1.1)
	기타	범주 미 설정	1(0.4)		-
직업	관리직·전문직	91(16.5)	27(9.7)	3(3.9)	2,604,998(13.5)
	기술직	33(6.0)	30(10.8)	20(26.0)	1,732,246(9.0)
	사무직	74(13.5)	55(19.8)		3,144,419(16.3)
	서비스직·판매직	20(3.6)	10(3.6)	7(9.1)	3,980,343(20.6)
	농업직	1(0.2)	범주 미 설정	5(6.5)	2,052,884(10.6)
	기능직	5(0.9)	생산직:	2(2.6)	4,167,135(21.6)
	단순노무직	4(0.7)	53(19.1)	-	1,446,709(7.5)
	전업주부	9(1.6)	4(1.4)	13(16.9)	범주 미 설정
	학생	262(47.6)	84(30.2)	5(6.5)	범주 미 설정
	군인	1(0.2)	범주 미 설정	범주 미 설정	범주 미 설정
	자영업	범주 미 설정	4(10.4)	17(22.1)	범주 미 설정
	무직	20(3.6)	범주 미 설정	5(6.5)	범주 미 설정
	기타	30(5.5)	11(4.0)	범주 미 설정	148,636(0.8)
월평균 소득	99만원 이하	33(6.0)	20(7.4)	14(15.2)	10.01%
	100~199만원	98(17.8)	63(23.2)		18.28%
	200~299만원	144(26.2)	73(26.9)	12(13.8)	22.87%
	300~399만원	100(18.2)	51(18.8)	29(27.1)	19.63%
	400~499만원	86(15.6)	29(10.7)	9(18.4)	12.28%
	500~1,000만원	68(12.4)	35(12.9)	10(19.6)	16.94%
	1,000만원 이상	21(3.8)			
모름/무응답	범주 미 설정	범주 미 설정	3(3.9)		
학력	초졸	18(3.3)	2(0.7)	-	10,261,892(23.3)
	중졸	32(5.8)	4(1.4)	9(11.7)	5,520,830(12.5)
	고졸	98(17.8)	65(23.4)	26(33.8)	14,195,267(32.2)
	전문대졸	82(14.9)	41(14.7)	42(54.5)	4,307,616(9.8)
	4년대 졸	267(48.5)	134(48.2)		8,623,172(19.6)
	대학원 이상	53(9.6)	32(11.5)		1,133,196(2.6)
종교	기독교	129(23.5)	81(29.6)	26(33.8)	8,616,438(18.3)
	천주교	52(9.5)	29(10.6)	9(11.7)	5,146,147(10.9)
	불교	74(13.5)	46(16.8)	19(24.7)	10,728,483(22.8)
	무교	292(53.1)	106(38.7)	22(28.6)	21,865,160(46.5)
	기타 종교	3(0.5)	12(4.4)	1(1.3)	685,206(1.5)
혼인 지위	기혼	86(15.6)	범주 미 설정	19(24.7)	26,576,587(56.5)
	미혼	464(84.4)	범주 미 설정	58(74.0)	20,464,847(43.5)

주: 1)윤순진 조사는 윤순진(2008)에서 그리고 행안부 조사는 행정안전부(2008b)에서 각각 인용함.
2)소득 자료는 200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의 결과이고, 나머지 자료는 200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임. 학력 자료는 만 6세 이상을, 그리고 직업 자료는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임.

2. ‘에타적 공동체’로의 동원: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1)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설문조사 결과, 매스 미디어는 사고 정보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스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 방송 매체였다. 전체 응답자 중 방송을 통해 사고를 알게 된 사람이 66.9%로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매스 미디어 중에서 신문은 정보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신문을 통해 사고 소식을 접했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3.8%에 불과했다. 이러한 신문의 역할과는 대조적으로 인터넷은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을 통해 사고를 알게 된 사람은 응답자의 17.5%로서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다음으로 많았다.

방송의 영향이 모든 집단에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방송 의존도는 연령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방송 의존도는 40대 이상에서 77.1%로서 가장 높고 30대에서도 74.1%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하여 1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64.4%와 63.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방송 의존도가 가장 낮은 20대에서는 인터넷 의존도(22.7%)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다. 10대의 경우에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고 정보를 얻은 사람이 1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6> 사고 정보 획득과 자원봉사 결정에 미친 요인

질문 내용	반응	응답자	%
사고를 알게 된 경로	신문을 통해서	21	3.8
	방송을 통해서	368	66.9
	인터넷을 통해서	96	17.5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타인을 통해	58	10.5
	잘 기억 안남	7	1.3
	계	550	100.0
	자원봉사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매체	신문, 잡지 또는 방송의 뉴스기사 및 다큐멘터리	210
인터넷 기사 또는 인터넷에 실린 다른 사람의 글		149	27.1
가족, 친구, 직장동료,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유		68	12.4
직장, 학교, 교회 등 소속단체의 결정		24	4.4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46	8.4
기타		53	9.6
계		550	100.0

언론의 집중적 보도가 에타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응답자들이 사고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는 데는 방송이 두드러진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도 기름유출사고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사상 최대의 기름유출

6)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KBS와 SBS는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각각 91건과 61건을 보도했다. 같은 기간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각각 93건과 73건을 보도했다. 언론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이 시기에 자원

사고, 사상 최대의 피해의 규모 등의 사실 보도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였겠지만, 주로 방송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강렬한 이미지와 메시지는 ‘동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기름으로 뒤덮인 ‘검은 바다’의 풍경,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사경에 빠진 새의 사진, 인터뷰를 통해 전달되는, 경악과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생생한 모습 등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 연령별 사고 정보 획득 매체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이상
신문을 통해서	7(6.7)	6(2.1)	7(6.0)	1(2.1)
방송을 통해서	67(64.4)	178(63.1)	86(74.1)	37(77.1)
인터넷을 통해서	14(13.5)	64(22.7)	12(10.3)	7(12.5)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을 통해서	15(14.4)	31(11.0)	8(6.9)	4(8.3)
잘 기억나지 않음	1(1.0)	3(1.1)	3(2.6)	0(0)
합계	104(100.0)	282(100.0)	116(100.0)	48(100.0)
$\chi^2=20.628$ df=9, p<0.05		단위: 빈도(%)		

네티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인터넷에서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은 최고 인기 검색어의 하나였다. 네티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특히 영향을 미친 것은 UCC이다. 당시 다양한 UCC가 인터넷에 올라 있었지만, 환경운동가가 올린 "삼성 tell me", 혼성 트리오 8eight가 제작한 “태안 원유유출사고 자원봉사 및 헌옷 보내는 방법” 및 닉네임 ‘산신령’이 제작한 “태안 유조선 유류 유출 사고 복구 동영상” 등이 ‘누리꾼들을 감동’시킨 대표적인 UCC이다(이창현·김성준, 2008: 18; 행정안전부, 2008: 106).

사실 매스 미디어에 의해 사람들이 애타적 공동체로 동원되는 과정과 일단 동원된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나서게 하는 촉구 과정은 분석적으로만 구분될 수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사고를 알게 된 경로’와 ‘자원봉사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매체’는 다소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고를 알게 된 경로보다 다양하며, 특히 인터넷의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8.2%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매체로 ‘신문, 잡지, 또는 방송’을 지적하여 언론이 참여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인터넷의 영향을 지적한 사람이 27.1%나 된다. 매스 미디어 중에서는 역시 방송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서는 방송이 신문 및 잡지와 함께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방송만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응답자들이 주로 방송을 통해 사고 소식을 접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신문, 잡지 및 방송 중에서도 방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자는 주요 보도 대상이었다. KBS는 ‘자원봉사자’를 그리고 SBS는 ‘어린 및 성인’을 가장 많이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정부 및 지자체, 정치권’과 ‘자원봉사자’를 같은 빈도로 가장 많이 보도했으며, 한겨레신문은 ‘정부 및 지자체, 정치권’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었다(이창현·김성준, 2008: 12-13).

태안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소식이 “TV 속보를 통해 전국으로 실시간 방송”되었고, “뉴스를 본 국민들의 자원봉사 신청 문의가 쇄도했다”(태안군, 2008: 214).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매체는 성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에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집단과 학교, 교회, 다른 시민단체로부터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표 8> 참조).

<표 8> 성별 참여결정 영향 매체

	남성	여성
신문, 잡지 또는 방송의 뉴스기사 및 다큐멘터리	87(33.7)	123(42.1)
인터넷 기사 또는 인터넷에 실린 다른 사람 글	65(25.2)	84(28.8)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유	34(13.2)	34(11.6)
직장, 학교, 교회 또는 다른 소속 단체의 결정	14(5.4)	10(3.4)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	21(8.1)	25(8.6)
기타	37(14.3)	16(5.5)
합계	258(100.0)	292(100.0)
$\chi^2=16.078$ df=5, p<0.01		단위: 빈도(%)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친 매체는 연령별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40대 이상은 직장, 학교, 교회 또는 다른 소속 단체의 결정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영향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많이 받는다. 30대는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의 영향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크게 받고 있다. 20대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유로부터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표 9> 연령별 참여결정 영향 매체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이상
신문, 잡지 또는 방송의 뉴스기사 및 다큐멘터리	35(33.7)	109(38.7)	47(40.5)	19(39.6)
인터넷 기사 또는 인터넷에 실린 다른 사람 글	24(23.1)	81(28.7)	37(31.9)	7(14.6)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유	14(13.5)	38(13.5)	13(11.2)	3(6.3)
직장, 학교, 교회 또는 다른 소속 단체의 결정	9(8.7)	6(2.1)	4(3.4)	5(10.4)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	11(10.6)	18(6.4)	8(6.9)	9(18.8)
기타	11(10.6)	30(10.6)	7(6.0)	5(10.4)
합계	104(100.0)	282(100.0)	116(100.0)	48(100.0)
$\chi^2=31.523$ df=15, p<0.05		단위: 빈도(%)		

2)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페너는 그의 의사결정모델에서 가까운 사람의 봉사활동 권유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압력’이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압력’은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 다음으로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표 6>에서 보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타인을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한 사

람은 10.5%이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타인의 권유'의 영향을 받은 응답자는 12.4%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에는 매스 미디어, 인터넷, 주변 사람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의사결정은 스스로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9.5%가 스스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반면에 '주변의 다른 사람의 권유로 결정'했다고 한 사람은 6.5%에 불과했다(<표 10> 참조). 앞의 <표 6>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타인의 권유'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2.4%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5.9% 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은 받았지만, 참여 결정은 스스로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30여 명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스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현상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 즉 자기 결정임을 내세우고자 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페너는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주위로부터 자원봉사를 하도록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enner, 2004: 650).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난의 상황에서는 개인적 설득과 같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매스 미디어나 인터넷보다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표 10>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

질문 내용	반응	응답자	%
참여결정 과정	스스로 참여 결정	492	89.5
	주변의 다른 사람의 권유로 결정	36	6.5
	단체나 조직의 결정에 따라	22	4.0

3. '에타적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로의 이행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본 조사는 태안 자원봉사자 전체가 아니라 인터넷 카페 회원과 환경단체의 자원봉사자 모집에 응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태안 자원봉사자 전체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모집단을 달리하는 다른 태안 자원봉사자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표 5> 참조). 특히 본 조사와 행정안전부 조사 간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모집단 자체가 서로 다른 데서 기인한다.7)

7) 행정안전부의 조사는 모든 유형의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전체 자원봉사자를 모집단으로 삼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중 인구비례확률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1989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태안 자원봉사자 분석은 '1년 자원봉사자' 398명 중에서 태안에서 봉사활동을 한 77명을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표 2>의 분류 상 '기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태안 자원봉사자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조직에 의해 동원·권유·안내된 참여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조직적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참여를 결정한 '자원'봉사자들이다. 이처럼 '자원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은 '전형적' 자원봉사자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조사에서 드러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에서 분류된 공공부문 및 기업부문 참여자와는 크게 다르고, 일부 민간단체부문 참여자와도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반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정리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갖는 이론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변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보겠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원봉사자의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이 두 변수를 주목해 왔다(Wilson, 2000; Penner, 2002; 2004). 말하자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0%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수준과 자원봉사활동 간의 관계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내에서 학력과 봉사 횟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해 보았다. 상관관계는 -.052로 나타나(<표 14> 참조)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나 <표 5>에서 보듯이 봉사자의 교육 수준은 전 국민의 교육 수준에 비하여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할 경우에는 페너 등의 주장이 지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은 높지 않았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사람(26.2%)이 200-299만원의 소득 계층에 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소득 계층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표 5> 참조).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소득 수준은 전국 가구의 소득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8년 4/4분기 전가구의 평균 소득이 3,349,220원이었고 조사대상자의 평균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대체로 이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본다.8) 추가로 소득 수준과 봉사활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봉사 횟수 간의 상관계수를 알아본 결과(<표 14> 참조) 상관계수가 .066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소득 수준과 참여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는 .093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과 자원봉사활동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응답자의 91.3%가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 속한다는 점이다(<표 5> 참조).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행정안전부, 2008: 4). 윤순진은 환경단체가 확보하고 있는 E-mail 주소를 활용하여 시행한 E-mail 조사와 현장조사를 함께 시행하였다(윤순진, 2008: 150-151).

8) 조사 시 1,000만 원 이상의 범주를 주었기 때문에 평균값 계산이 불가능하다.

주된 이용자가 젊은 층이라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젊은 네티즌들이 사이버 상에서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라는 친사회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다는 점이다. 이것이 시사해주는 바는 우리 사회의 젊은 네티즌들은 적절한 대의와 동기가 주어질 경우 자신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촛불집회와 태안 자원봉사활동은 인터넷 카페라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젊은 층의 집합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응답자의 직업이 학생(47.6%), 관리직·전문직(16.5%), 사무직(13.5%)의 순서로 많다는 것도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이들 직업군의 적극적인 참여와는 대조적으로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의 참여는 극히 저조했다. 학생, 관리직·전문직, 사무직의 활성화된 참여는 결국 대인 관계를 빈번하게 갖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조직에 의한 동원·권유·안내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젊은 층, 학생 및 사무직·전문관리직 종사자, 고학력층, 미혼자 등이 재난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원봉사자로 선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달리 소득 수준 및 종교의 변수는 선별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개인적 속성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속성은 다양한 지표들 통해 접근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의 동기와 참여자의 태도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자의 태도는 다시 환경 쟁점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참여 동기

태안 자원봉사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참여 동기이다. 왜 130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 날씨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태안으로 달려갔을까 하는 의문은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설문에서는 기타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다양한 동기들을 제시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지적한 참여 동기는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3.1%에 해당하는 292명이 파괴된 생태계 복원을 봉사 참여의 동기로 들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들(24.9%)이 참여 동기로 지적한 것은 '피해 입은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로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이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9.8%)와 '자원봉사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7.5%)였다.

참여 동기 분석에서 발견된 사실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응답자들의 참여 동기가 소수의 동기 유형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동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보는 기능이론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참여 동기가 이처럼 소수 유형으로 집중된 것은 응답자들이 고학력, 저연령 등의 측면에서 매우 동질적인 집단이고, 이들이 참여한 봉사활동이 기름유출사고라는 단일한 사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

질문 내용	반응	응답자	%
참여 동기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 참여하려고	292	53.1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려고	137	24.9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54	9.8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기 위해	6	1.1
	자원봉사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41	7.5
	일본의 기름제거 봉사자 기록을 깨려고	1	0.2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3	0.5
	특별한 생각 없이 주변 사람의 권유로	1	0.2
	직장, 교회 등 조직의 결정으로	3	0.5
	기타	12	2.2

둘째로,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봉사 참여의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점이다. 이것은 조사대상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친사회적 행동 일반에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환경단체의 모집을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서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교차분석을 해 보면, 참여 동기는 다른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무관하고 다만 성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표 12> 참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생태계 복원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44.6:60.5), 그 대신 남성은 여성보다 주민과의 고통 분담을 더 강조한다(27.9: 22.1).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16% 포인트 차이로 생태계 복원을 더 강조한 것은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성별 자원봉사 참여 동기

	남성	여성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115명(44.6)	177명(60.6)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72명(27.9)	65명(22.2)
국민 또는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7명(10.5)	27명(9.2)
자원봉사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24명(9.3)	17명(5.8)
기타	20명(7.8)	6명(2.1)
합계	258명(100.0)	292명(100.0)
$\chi^2=19.091$ df=4, p<0.01		단위: 빈도(%)

②태도

응답자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환경 쟁점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였다. 쟁점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의 강도는 달랐지만, 대체로 응답자들은 질문에 대해 일관성 있는 반응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한반도대운하사업 및 새만금간척사업과 한미FTA협상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대북지원과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는 분배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환경 쟁점에 대한 태도>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두 개의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일관성 있게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표 13> 참조). 특히 한반도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사(5점 척도 상의 4.35)를 보여주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에 비하여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의 강도(5점 척도 상의 3.88)가 낮은 것은 응답자들이 새만금간척사업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던진 윤순진의 조사 결과(5점 척도상의 2.54)에 비해서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반대여사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윤순진, 2008: 173).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태도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태도 간에는 상관관계수가 .542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1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참여 동기의 분석에서 생태계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동기로 지적된 사실과 일치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태도는 학력과 높은 상관관계(.168)를 보인다. 학력이 높을수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대운하건설에 대한 태도는 연령(.155) 및 학력(.170)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표 14> 참조). <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

정치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현안이었던 네 가지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 네 가지 문항은 한미FTA 비준, 정부나 민간기업의 대북 지원, 소고기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간의 선택 등이었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개의 문항에 대한 반응은 문항에 따라 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FTA 비준에 대해서는 반대가 우세하고, 정부나 민간기업의 대북 지원과 소고기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찬성이 우세하며, 성장과 분배 간의 선택에 있어서는 분배를 강조하는 쪽이 더 많았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본 조사의 대상자들은 '개혁지향성'을 두드러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각 문항 간의 찬성 또는 반대의 강도를 보면, 촛불집회에 대한 찬성도가 가장 높고, 분배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다.

<표 13> 환경 쟁점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¹⁾

환경문제 및 사회적 쟁점	매우 찬성 (분배가 중요)	약간 찬성 (분배가 약간 중요)	중립	약간 반대 (성장이 약간 중요)	매우 반대 (성장이 중요)	평균
한반도대운하 건설	2(0.4)	22(4.9)	76(16.8)	67(14.8)	285(63.1)	4.35
새만금간척사업	5(1.1)	36(8.0)	131(29.0)	114(25.2)	166(36.7)	3.88
한미FTA 비준	18(4.0)	82(18.1)	155(34.3)	90(19.9)	107(23.7)	3.41
정부나 민간기업의 대북 지원	67(14.8)	165(36.5)	130(28.8)	67(14.8)	23(5.1)	2.58 ²⁾
소고기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151(33.4)	129(28.5)	101(22.3)	52(11.5)	19(4.2)	2.24 ²⁾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 간의 선택	77(17.0)	136(30.1)	103(22.8)	109(24.1)	27(6.0)	2.71 ²⁾

주: 1)환경 쟁점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는 20대 이상의 응답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정부나 민간기업의 대북 지원', '소고기 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및 '성장과 분배 간의 선택'의 경우, 척도가 다른 문항과 반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세 문항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개혁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개혁지향성의 수준은 환경의식의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두 개의 환경 쟁점에 대한 반응의 평균 점수는 4.35 및 3.88이었으나, 네 개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반응의 평균 점수는 대체로 이에 못 미친다. 한미FTA 반대의 경우는 물론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개혁적이라 할 수 있는 대북 지원 찬성의 정도, 촛불 집회 찬성의 정도, 분배 지지의 정도의 경우에도 그 강도는 환경 쟁점에 대한 반대의 정도보다 낮다.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와 한미FTA 비준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쟁점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태도와 한미FTA 비준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상관관계수: .474)가 존재한다. 또한 이들 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와 환경 쟁점에 대한 태도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표 14>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참여 횟수	참여 만족	새만금 간척사업	한반도 대운하	한미 FTA	대북 지원	촛불 집회	성장 분배
연령	1	.336**	.024	.163**	-.068	.070	.155**	-.001	.161**	.073	.119
학력		1	.120**	-.052	-.035	.168**	.170**	-.009	.218**	.050	.082
소득			1	.066	.093*	.020	.004	-.074	-.027	-.082	-.123*
참여 횟수				1	.013	-.036	.009	.110**	.020	.031	-.031
참여만족도					1	-.115*	-.102*	-.007	-.041	-.013	-.046
새만금 간척사업						1	.542**	.350**	.141**	.323**	.234**
한반도							1	.288**	.151**	.403**	.233**

대운하											
한미 FTA							1	.059	.474**	.226**	
대북지원							1	.246**	.264**		
춧불집회									1	.299**	
성장과 분배의 선택											1

spearman rho, *p<0.05, **p<0.01, ***p<0.001

동기 및 태도 분석의 결과는 매우 분명하다. 그것은 환경문제와 같은 공공 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한 사람과 개혁지향성이 높은 사람이 재난 상황이 요구하는 자원봉사자로 선별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카페나 환경단체의 모집에 응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봉사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자발적 선택 과정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동기 및 태도상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효능감

효능감은 성취로부터 나오는 보람을 말한다. 이 조사에서는 효능감을 만족도에 대한 반응을 통해 측정해 보았다. 태안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참여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표 15>의 참여 만족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하는 사람(47.8%)과 '약간 만족'하는 사람(37.1%)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84.9%에 이르고 있다.

봉사활동 참여횟수와 만족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13으로서 이들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상관계수 .094). 소득이 높을수록 봉사 참여에 대한 만족감이 커진다.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재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95.5%가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시 봉사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태안 봉사자의 경우,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일부도 재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방제작업을 하는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생태계 복원 등의 이유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

<표 15> 자원봉사자의 참여만족도, 참여 횟수 및 재참여 의사

항목	변수내용	빈도(명)	비율(%)
참여 만족도	매우 만족	263	47.8
	약간 만족	204	37.1
	그저 그렇다	31	5.6
	약간 불만족	33	6.0
	매우 불만족	19	3.5
	계	550	100.0
참여횟수	1회 참여	324	58.9
	2-4회 참여	157	28.5
	5-9회 참여	24	4.4
	10회 이상 참여	45	8.2
	계	550	100.0
재참여 의사	있다	531	96.5
	없다	19	3.5
	계	550	100.0

III. 결론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원봉사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 따라 '에타적 공동체'로의 동원 과정 및 '에타적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로의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에타적 공동체'로의 동원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매스 미디어)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그리고 '에타적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로의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적 속성(동기와 태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효능감이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고찰하였다.

'에타적 공동체' 형성에는 매스 미디어, 그 중에서도 방송의 영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운 매체로서 인터넷의 영향도 컸음이 드러났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사회적 압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작용했다.

'에타적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로의 선별된 사람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직업, 교육 수준, 혼인 지위 및 거주 지역 등에서 나타났다. 젊은 층, 학생 및 사무직·전문관리직 종사자, 고학력층, 미혼자,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지역 거주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선별되었다. 소득 수준 및 종교의 변수는 선별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선별된 사람들의 주된 참여 동기로는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과 피해 주민과의 고통 분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공공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주요 동기였다는

점에서 인터넷 카페 및 환경단체의 모집에 응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전형적인 '친사회적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태도 분석에서는 환경의식이 높은 사람과 개혁지향성이 높은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선별되었음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효능감 분석에서는 봉사 참여자들이 높은 수준의 만족감 및 만조감보다 더 높은 제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의 성과는 태안 자원봉사자 중 상대적으로 자원성이 높은 집단의 참여 경로와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개인적 속성을 밝혀냈다는 데 있다. 아울러 분석 과정에서 초점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친사회적 행동의 잠재적 기반과 사회봉사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로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힘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부수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태안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한계는 조사 대상자가 처음부터 인터넷 카페 회원 및 환경단체의 모집에 응한 봉사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의 매개를 통해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그들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향후 태안 자원봉사자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로 봉사에 참여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태안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비교 연구 및 태안 봉사자와 일상적 자원봉사자 간의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애타적 공동체 구성원이었으면서도 봉사에 나서지 않은 비참여 연구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선별 과정의 작동과 그 의미를 밝혀내는 데 긴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인위적 재난의 극복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갖는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친사회적 행동의 근본적인 의미가 공정한 세상(just world)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할 때, 오히려 백이 지적한 '조직화된 무책임성'(organized irresponsibility)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의의 자원봉사활동이 과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새로운 화두로 던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박동균,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재난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pp. 93-116,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자료집, 2008년 12월 8일, 안면도 오션캐슬).
- 성기환, 2008. "태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분석," pp. 117-135,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자료집, 2008년 12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오션캐슬).
- 윤순진,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자원봉사자 연구: 참여동기와 사건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ECO 제12권 1호: 145-179.
- 이시재, 2008. "태안사태와 자원활동, 그리고 시민운동," 「참여사회」 2008년 2월호 (<http://blog.peoplepower21.org/Magazine/20851>).
- 이창현·김성준,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언론보도 내용분석 연구," pp. 1-24,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언론의 역할과 사회 방제시스템의 문제」(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주최 심층세미나 자료집, 2008년 1월 31일-2월 1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오션캐슬).
- 이창현, 2008. "자원봉사는 태안을 살리고 자원봉사 보도는 삼성만 살렸다," 「신문과 방송」 제446호: 86-91.
- 태안군, 2008 「태안의 기적: 1년의 발자취」.
- 행정안전부, 2008a. 「자원봉사활동백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방제활동」.
- _____, 2008b. 「2008 전국 자원봉사활동 실태 조사연구」.
- Ajzen, I. and M. Fishbein, 1980.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Clary, E. G., M. Snyder, R. D., J. Copeland, A. A. Stukas, J. Haugen, & P. Miene, 1998.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Motivation of Volunteers: A Funct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516-1530.
- Clary, E. G. & M. Snyder, 1999. "The Motivation to Volunteer: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8: 156-159.
-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2007. *Volunteering in America: 2007 State Trends and Rankings in Civic Life*, Washington, DC.
- Michel, Lacie M., 2007. Personal Responsibility and Volunteering After a Natural Disaster: The Case of Hurricane Katrina," *Sociological Spectrum*, 27: 633-652.
- Omoto, A. M. and M. Snyder, 1995. "Sustained Helping without Obligation: Motivation,

- Longevity of Service, and Perceived Attitude Change among AIDS Volunt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71-686.
- Penner, L. A., A. R. Midili and J. Kegelmeyer, 1997. "Beyond Job Attitudes: A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Cause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uman Performance*, 45: 111-132.
- Penner, L. A., 2002. "Dispositional and Organizational Influences on Sustained Volunteerism: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8-3: 447-467
- _____, 2004. "Volunteerism and Social Problem: Making Things Better or Worse," *Journal of Social Issue*, 60: 645-666.
- Piliavin, J. A. and P. Callero, 1991. *Giving Blood: The Development of an Altruistic Identity*.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Villagran, Melida M. Elaine Wittenberg-Lyles and Raymond T. Garza, 2006. "A Problematic Integration Approach to Capturing the Cognitive, Cultural, and Communicative Experiences of Hurricane Katrina Volunteer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6-1: 87-97.
- Vroom, V.,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Wiley.
- Wilson, John,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15-240.
- Zakour, Michael J., 1996. "Geographic and Social Distance During Emergencies: A Path Model of Interorganizational Links," *Social Work Research*, 20-1: 19-30.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방제종료시점의 사회·환경적 의의와 실제

윤순진⁹⁾·박순애¹⁰⁾·이희선¹¹⁾

ABSTRACT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생태계를 살리고 피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방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제활동은 어느 수준까지 누구의 참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방제를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관련한 여러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방제작업 종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고, 참여자 역시 어업재개와 관련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방제 종료 결정 근거와 과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모든 항목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해지역의 일반 주민은 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뿐만 아니라 방제종료가 이루어진 지역과 시기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도 공무원들은 적절하고도 타당했다고 높이 평가한 것과는 달리, 주민들은 부적절하고 타당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방제종료와 관련한 논의는 피해보상과 행정적 차원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먹을거리와 관련한 것으로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보건 차원에서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현재 방제종료는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나 방제작업을 실시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방제종료가 원래의 자연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적 차원에서는 방제가 종료되어도 여전히 문제가 남기 때문에 방제 종료 선언 이후에도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방제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이기에 방제종료의 다차원적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제종료의 기준과 시기, 참여 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1. 서론

2007년 12월 7일,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조선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서해안의 태안군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 삼성 T-5호와 크레인 바지선(삼성 1호)을 연결한 로프가 강풍에 절단되어 대산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146,848톤급)와 충돌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1995년에 여수 인근바다에서 일어난 씨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원유 5,000t유출) 이후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세우고 방제 작업을 체계화하였으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해양환경관리공단의 전신)하는 등 국가 방제 능력을 개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도 못했고 기상조건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직후 초기 대응에도 성공하지 못해 원유 약 10,900톤이 태안 앞바다로 유출되었다.

이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사고 발생지역인 태안 연안에 심각한 환경재난(environmental disaster)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멀리 전라남도과 제주도 인근 바다까지 오염이 확산되었다. 오염의 확산을 막고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과 태안군)는 물론 환경단체를 위시한 시민사회단체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기름 회수 및 제거작업에 나섰다. 광범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덕분에 사고 일주일만에 오염된 해안의 79%를 응급 방제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윤순진, 2008), 사고지역 연안 생태계는 여전히 오염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적으로 최대 기름유출사건으로 알려진 엑손 발데즈(Exxon Valsez)호 사건으로 유추해볼 때, 서해안의 해안 및 해양생태계가 원상회복되는 데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재목, 2008).

이 연구는 이러한 기름유출사고의 방제종료시점(clean-up ending point)에 대해 주목한다. 광범위한 해양 및 해안 생태계 오염에 대해 방제활동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방제활동은 언제까지 또 어떤 상태가 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즉, 방제종료는 무엇을 근거로 혹은 기준으로 하여 누구의 참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방제종료선언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행정적 의미는 무엇인가? 방제종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8년 3월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태안군에서는 2008년 6월 말을 기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긴급방제"가 종료되었다. 대다수 지역에 대한 방제종료 선언 후에도 기름 찌꺼기와 유막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섬 지역과 일부 해안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공공근로사업 등의 형태로 지급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연합뉴스2008-6-23).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만리포 같은 태안의 해수욕장이 개장하였다. 이렇듯 상당수 지역에 대해 이미 방제 종료가 선언된데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약화되면서 사고 지역들에 대한 방제종료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물론 누가 어떤 절차로 또 어떤 기준으로 방제 종료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사회적 관심이 두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연구는 해양 기름유출사고의 방제 종료 시점 결정의 시기와 방법,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방제종료 선언이 갖는 경제적 행정적 의미만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관심을 두면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대상으로 방제선언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핀 후 바람직한 결정기준과 시기, 방법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방제수준과 종료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 법적인 혹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2) 방제 수준과 종료시점은 누가 결정하는가? 방제종료시점 결정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누구이며 그들은 방제종료시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실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방제종료시점 결정에 참여한 사람이나 기관은 누구였으며 이러한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방제 종료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식정도는 소속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방제종료 결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종료시점결정이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제종료가 갖는 환경적 의미는 무엇이며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행정적으로 종료시점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제종료시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규정과 함께 해외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방제종료시점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보도록 한다. 특히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종료시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집단간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택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관련 기사들

을 분석하였고 국내외 사례들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방제 관련 매뉴얼과 행정조직 등 법 제도적 규정들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들이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종사자, 지역주민들을 면담하였으며 방제종료시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방제종료 수준과 시점 결정

방제가 종료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조업이 재개되고 사고 전의 일상—아마 더 이상 사고전의 일상과 같지는 않지만—으로 복귀한다. 그러므로 피해 주민, 수산물 소비자, 관광객 등 모두에게 방제 종료 시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존재한다. 피해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사들의 경우 방제비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방제 종료시점을 앞당기고 싶어 한다. ITOPE, KOMOS(Korea Marine & Oil Pollution Surveyors: 한국해사감정-이번 사고에서 IOPC의 피해조사업체) 등에서는 방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빨리 작업을 종료하고 나머지는 자연치유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¹²⁾ 피해 주민의 경우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의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하여 해수욕장 개업을 앞당기기 위해 종료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어떠한 사람들은 오염된 바다와 생활 터전이 사고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방제가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³⁾ 하지만 연구과정에서 진행된 심층면접의 답변으로 미루어볼 때, 대체로 주민들, 특히 어업종사자들은 계속 방제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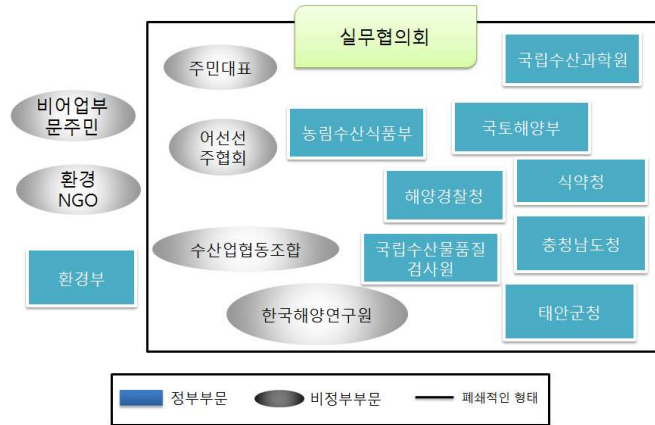
따라서 현재 이처럼 다양한 입장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민관합동 ‘실무협의회’가 설치되어 방제의 종료 시점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¹⁴⁾ 실무협의회는 실제로 어선출어 제한 해제여부 등 어업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대한민국 정부포털 홈페이지). [그림 1]에서 보듯이 실무협의회는 농림수산식품부

12) 총 배상 한도액 내에서 방제비와 주민피해보상액을 지급해야 하기에 어느 부분이 더 많은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 금액에서 방제비와 피해보상액의 비중이 각각의 검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피해조사자 입장에서는 방제비를 줄이는 것이 전체금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13) 앞으로 4장에 언급하게 될 설문지는 면접 설문지 기법을 통해 실시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많은 수의 주민과 공무원이 방제종료에 대한 일차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는 않았다. 같은 주민 내에서도 방제종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부지역의 조업체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아직 도 기름이 다 제거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방제종료는 시기상조임을 주장하였다.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간에도 동일한 의견이 존재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존재하고 있었다.

14)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충돌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태안군청 L서 인터뷰, 2008. 5.9).

(어업정책과, 유어내수면과, 태안유류피해T/F), 국토해양부(해양환경정책과, 피해보상지원반),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관리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환경연구팀, 품안전연구팀, 서해수산물연구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품질검사과), 한국해양연구원(해양환경위해성연구사업단), 수산업협동조합, 충청남도(해양수산과), 태안어선선주협회, 주민대표 등 다양한 기관 소속인(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자료 : 이희선(2008) 재구성

[그림 1] 방제종료 이해관계자 구성

그러나 이러한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담당기관을 국토해양부로 보고 있다. 반면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상의 책임기관은 환경부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건의 경우에는 해상에서의 오염뿐만 아니라 해안에서의 오염물질에 관한 수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환경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해안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 해양환경피해조사, 해양생태계 및 갯벌의 피해복구를 책임지는 유관부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제종료를 결정하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에는 환경부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의 반증이기도 한데, 방제종료 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이 방제수준과 종료에 대해 해양환경의 피해복구에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조업재개, 해수욕장 개장과 같은 경제적인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태안군청 L씨 인터뷰, 2008. 5.9). 즉, 환경부와 함께 환경 NGO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서 보다 환경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참여자가 별로 없다.

셋째,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체계이다. 피해지역의 생태계를 경험인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방제여부 결정에 그 누구보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실무협의회의에는 주민대표 한 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 방제수준 및 시점 결정에 관해 주민 대표가 다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지, 또한 보다 본질적으로는 진정한 대표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주민대표 이외에는 어선선주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어업종사자, 특히 선주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는 있지만 피해지역의 다른 업종 종사자들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방제수준과 종료시점 결정은 피해범위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 어업부문 주민만이 아니라 비어업부문 종사자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업부문에 대해 비어업부문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비어업부문에 대해 어업부문 종사자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고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어업부문 종사자들을 참여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방제종료가 어업재개와의 관계에서만 조명되는 협소성을 드러낸다. 방제종료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어업부문 종사자들의 의견 역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대표나 어선선주협회가 참여했기 때문에 방제수준과 종료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질적인 의미의 주민참여를 통한 방제종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민들 간의 의견조율과 의견교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비어업부문 종사자들의 의견 또한 개진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사고 당일 출어제한 조치이후 정부는 어업별 품종별로 5회에 걸쳐 원유에 함유되어 있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중 잔류 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벤조(a)피렌 농도값을 기준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4월 부분 조업재개 이후, 9월 3일부터 전면 조업재개를 완료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08/9/30). 조업재개 시점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조업재개 시점

조업재개	시기
어선어업	2008년 4월
마을어업	2008년 5월~8월
형망어업	2008년 8월
나잠·팬손어업	2008년 8월~9월
전면조업재개 완료	2008년 9월 3일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9월 30일

이러한 결과는 지난 6월12일 태안군 모항항에서 어획한 연안 정착 어종인 우럭, 장어, 놀래미에서 벤조(a)피렌 농도는 0.01~0.04ng/g로 유럽기준인 2ng/g보다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7월8일 태안군 이원면, 근흥면에서 채취한 낙지의 벤조(a) 피렌 농도도 0.07~0.11ng/g로 유럽기준인 5ng/g보다 크게 낮았으며, 8월11일 태안군 소원면에서 채취한 전복, 바지락, 굴도 마찬가지로 벤조(a)피렌 농도는 0.01~1.02ng로 유럽기준 10ng/g보다 크게 미달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뉴시스, 2008/8/31).

그러나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마저 없앤 것은 아니다. 9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폐기름 의심덩어리가 들어간 바지락(아시아투데이, 2008/9/18)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안전성 확정 후 방제종료와 더불어 조업재개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태안지역 바지락의 대량폐사 원인도, 국립수산물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Hebei Spirit호 원유유출에 의한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에 따른 중간 보고회”에 따르면 유류오염사고의 영향임을 보여주고 있다(에코저널, 2008/9/24).

이처럼 방제종료선언이나 조업 재개의 결정은 사고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정상유통을 의미한다.15) 따라서 수산물은 시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다다르기 때문에 조업재개는 피해의 규모가 태안의 유류유출 피해지역에 머무르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피해의 범위가 보다 광범위하고, 간접적이며, 장기적인 형태로 더 확산되는 양태를 떨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무협의회가 현재의 참여기관들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한지, 종료수준과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조업지역의 방제종료는 곧, 조업재개로 이어지고 이러한 생산 활동 이후에는 광범위하고, 피해의 간접적인 확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본다면 환경 NGO와 소비자 단체까지도 종료시점 결정과정

15) 태안군청 실무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의한 선언인 공식적인 종료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태안군청 L씨 인터뷰, 2008. 8.28.)”고 대답하였으나, 당시 실질적으로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민들의 조업 재개와 해수욕장개장 등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참여자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조업재개로 연결되는 방제의 이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름 유출사고 이후 9개월을 넘기고 있던 2008년 9월 3일, 행정안전부는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이후 유조선 기름유출 등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매뉴얼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2008/9/3). 또한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화재소방학회 및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출범시켰다(연합뉴스, 2008/10/01).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기관 간의 협조가 미흡하고, 지휘체계의 혼란이 유발되었으며, 인적·물적 자원 동원 체계 미흡 등 대응 과정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점이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초기 대응인 방제활동의 표준 매뉴얼 정비 및 조사와 더불어 방제의 종료를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이루어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고찰이 필요하다.

3. 방제종료 시점에 대한 적절성 분석

법·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방제종료의 정의 및 시기, 결정 방식을 살펴보고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긴급방제 종료 시점의 결정과 그 적절성에 대하여 피해주민, 공무원,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역방제실행계획, 해양오염방제 핸드북 등 국내 표준운영지침 및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방제종료의 시기와 결정 방식을 살펴보고, 캐나다 및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제종료 시점의 결정 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하여 논하여 본다. 인식적 측면에서는 피해주민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담당 공무원, 총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하여 긴급방제 종료시점의 결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인지의 정도, 긴급 방제 종료시점의 적절성 평가, 바람직한 긴급 방제종료 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본다.

1) 법·제도적 측면

찰사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해양경찰청, 2004: 52).

(1) 국내 표준운영지침 및 매뉴얼 분석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내부에서 활용되는 해양오염 관리 매뉴얼·핸드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갖추어지기 시작하여, 국가적 차원의 표준운영절차는 2000년대 이후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000년 1월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필요한 관계기관별 임무분담, 사고대응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1999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관할해역별로 ‘지역방제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방제실행계획은 본문과 5개 부속서, 방제정보지도와 방제정보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총 8장으로 총칙, 지역평가, 보고 및 통신, 방제기자재 동원 및 제정, 방제실행, 교육 및 훈련, 홍보, 가상사고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해양경찰청, 2003: 208-209). 한편, 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응급조치와 방제기술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여 1997년 ‘해양오염 방제기술서’를, 2004년 ‘해양오염방제 핸드북’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각종 표준운영지침 및 매뉴얼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제종료 시점의 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정리, 종합해 보도록 한다.¹⁶⁾

먼저 ‘태안지역방제실행계획(경기도 평택~충청남도 해역)’에서는 방제종료 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방제대책본부에서 해양경찰서, 시군청, 관계기관, 보험사, 선주, 지역주민 대표를 참석시켜 해안오염상태 조사결과 해안 오염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방제작업의 효과가 더 이상 없는 경우 방제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오염 해안에 대해서는 향후 생태계 회복 차원에서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실시키로 한다(해양경찰청, 2000a: 5-20).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핸드북’에서는 방제종료 시기와 결정 방법을 구분하여 이를 언급하고 있다.

방제종료 시기는 관계기관, 지역주민이 동의한 방제목표를 달성했을 때, 방제조치의 효과가 없거나, 오염된 해안으로부터 기름 유출 등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때 결정될 수 있다. 방제종료 결정은 오염해안 관리청,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합동으로 현장 조사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관할 해양경

16) 모든 표준운영절차와 매뉴얼에 방제종료 시점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방제기본계획’에는 방제종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제종료 시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침과 매뉴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39조(전문방제연구기관의 추천)에 의거하여 1997년 구성된 방제기술지원단¹⁷⁾의 ‘해양오염방제지침’에 따르면 방제의 강제종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결정될 수 있다.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방제작업을 실시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제지휘부에서 방제종료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방제기술지원단의 자문을 받거나 지역방제대책협의회¹⁸⁾에서 방제작업의 종료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방제기술지원단 홈페이지, <http://ssu.kcg.go.kr/>).

마지막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기본방제계획서’에서는 방제종료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다.

해상방제작업의 종료는 오염지역에 대한 탐색결과 해상에 떠다니는 갈색 또는 검은색 유막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풍화된 유출로 인해 더 이상 해안을 다시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필요시 해양경찰서의 지시를 받아 잠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원발생의 유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또 다른 기름의 발견 유무 등에 따라서 추가 방제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p.26).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각종 표준운영절차와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방제종료 시점은 ‘방제작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가시적인 오염이 해결되어 더 이상 2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결정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보험사 등의 이해관계자들

17) 방제기술지원단은 방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대형 오염사고 시 사고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제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받아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제업무 수행함으로써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발족 당시 한국해양연구소 및 기계연구원 소속 전문가들 24명으로 구성되어 사고조사 및 유출유 확산예측 분야 12명, 방제기술 및 환경평가 분야 1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위원 재구성성을 통하여 2003년 현재 한국해양연구소 등 10개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 28명이 총 6개 기술지원 분야(방제일반, 해양오염물질, 해양환경 및 기상, 선체구조 및 구난, 어업피해, 해양오염관련 법률 및 보험)에 소속되어 있다(방제기술지원단 홈페이지, <http://ssu.kcg.go.kr/>).

18) 지역대책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1)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조직계획 (2) 해양오염사고 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처리 시설의 지원에 관한 관계지방 행정기관간의 업무조정 (3)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기술적 자문 (4) 기타 해양오염의 방제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다.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위원장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군함대사령부, 시도 및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이상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해양오염사고 관련 선박 또는 시설의 소유자, 석유정제업체의 임·직원, 주민대표 등 지역해양 오염 방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해양경찰청, 2000b).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향후 완전한 생태계 복구의 차원에서 해양오염 영향조사 및 추가 방제조치를 실시한다는 단서를 덧붙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표 2]는 각 표준운영절차와 매뉴얼의 내용을 종합, 요약하고 있다.

[표 2] 방제종료 시점의 정의 및 결정 방식 종합

지침 및 매뉴얼 명칭	방제종료 시점의 정의	결정 방식	기타
태안지역방제 실행계획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상태 조사결과 해안 오염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방제작업의 효과가 더 이상 없는 경우	· 방제대책본부에서 해양경찰서, 시군청, 관계기관, 보험사, 선주, 지역주민 대표를 참석시켜 결정	향후 생태계 회복 차원에서 오염된 해안에 대하여 해양오염 영향조사 실시
해양오염 방제 핸드북 (해양경찰청)	· 관계기관, 지역주민이 동의한 방제목표를 달성한 경우 · 방제조치의 효과가 없는 경우 · 오염된 해안으로부터 기름 유출 등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 오염해안 관리청,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합동으로 현장 조사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최종 결정	-
해양오염 방제지침 (방제기술 지원단)	·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방제작업을 실시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차적으로 방제지휘부에서 방제종료를 결정 · 필요시 방제기술지원단의 자문을 받거나 지역방제대책협의회에서 방제작업의 종료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음	-
기본방제 계획서 (해양환경 관리공단)	· 오염지역에 대한 탐색결과 해상에 떠다니는 갈색 또는 검은색 유막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경우 ·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풍화된 유출로 인해 더 이상 해안을 다시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	· 해상방제작업의 종료는 해양경찰서의 지시를 받아 잠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민원발생의 유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또 다른 기름의 발견 유무 등에 따라 추가 방제조치 수행

(2) 국외 법률 및 매뉴얼 분석

가. 캐나다 해양오염방제 평가기술(SCAT)팀

캐나다 해양오염방제 평가기술(SCAT)팀은 UN측의 권고로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

진단 및 적절한 방제기법 소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29일부터 2008년 1월9일까지 한국에 파견된 해안오염평가 전문가 집단이다. SCAT팀은 해안오염평가 결과 설명회를 통하여 방제종료 시점(ending point)의 의미, 필요성, 설정 기준 등을 소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월12일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주최로 마련된 설명회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SCAT팀의 방제종료 시점에 대한 시각을 다뤄보도록 한다.

SCAT팀은 방제종료 시점을 '방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해안의 최종상태'로 정의하며 방제작업의 판단 기준이자 오염사고 이후 깨끗해진 해안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제종료 시점이 중요한 이유로는 방제작업 수준을 결정하고 방제 작업을 담당하는 팀에게 방제 기준을 제시하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방제종료 시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토지 이용 현황, 생태계 가치, 계절적 변화, 오염 형태 및 정도, 오염사고 이전의 원래 환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제종료 시점 설정 기준으로서, SCAT팀은 거주지의 유무에 따라 해안 방제종료 시점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표 3]과 같은 캐나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해안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해, 관측이 용이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정량적 기준은 가능한 피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PAH 등 화학적 분석 및 해안가의 기름량 계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8).

[표 3] 방제종료 시점의 설정 기준 사례

	거주지가 없는 해안	거주지가 있는 해안
모래 및 자갈	- 유적 두께 0.1cm 미만 - 유적 분포 10% 미만	- 육안으로 유적분포가 관측되지 않을 것
지석(boulder) 및 사석(riprap)	- 유적 두께 0.1cm 미만 - 유적 분포 20% 미만	- 육안으로 유적분포가 관측되지 않을 것
식생 조성두	- 유적 두께 0.1cm 이하 - 유적 분포 20% 미만	- 유적 두께 0.1cm 이하 - 유적 분포 10% 미만
갈대밭	- 유적 두께 0.1cm 이하 - 끈적임이 없을 것	- 유적 두께 0.1cm 이하 - 끈적임이 없을 것
습지	- 끈적임이 없을 것 - 2cm 이상 타르볼이 없을 것 - 2cm 미만 타르볼 20% 미만	- 끈적임이 없을 것 - 2cm 이상 타르볼이 없을 것 - 2cm 미만 타르볼 10% 미만

자료: 해양수산부(2008).

SCAT팀은 방제종료 시점을 논하기에 앞서 단기간에 사고 이전 상태로의 복원은 어렵다는 점, 방제 기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현실적인 한계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일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미국 환경보호국의 'Net Environmental Benefit Analysis(NEBA: 환경 순익 분석)'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방제종료 시점을 보호하고 있는 동식물 종이 감소하거나 멸종될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수질 악화가 최소화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민감한 서식지의 감소가 최소화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서식지 안의 종 다양성과 상대적 풍부함을 장기적으로 방해하지 않거나 그 방해가 최소화 될 때로 정의하고 있다.

방제 종료 시점의 경우 각 자원의 부존량과 회복 속도를 고려하여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방제 종료 시점은 환경 순익 분석(Net Environmental Benefit Analysis: NEBA)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NEBA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NEBA를 위한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참여자를 결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시나리오에는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식 및 보호해야 할 환경 자원의 정의, 보호해야 할 자원이 유출된 기름에 노출될 가능성과 민감성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환경적 순이익을 분석해 내며, 이 때 위험 순위 매트릭스(Risk-Ranking Matrix)를 작성하여 상대적인 위험도와 잠재적 영향력 등을 기록해 넣는다. [표 4]는 이러한 매트릭스의 예이다. [표 4]는 사고로 영향 받은 자원의 양이 많고 적은지, 복구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에 따라 방제작업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표 4]에서 어두운 회색 부분에 속하는 환경 자원과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밝은 회색 부분에 속하는 경우 중기적인 방제작업이, 흰색 부분에 속하는 경우 보다 단기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4] 위험 순위 매트릭스

		복구 속도				
		느림 ← → 빠름				
		7년 이상 (1)	3~7년 (2)	1~3년 (3)	1년 이하 (4)	
환경적 순익 (%)	↑	60% 이상 (A)	1A	2A	3A	4A
	40~60% (B)	1B	2B	3B	4B	
	20~40% (C)	1C	2C	3C	4C	
	5~20% (D)	1D	2D	3D	4D	
	↓	0~5% (E)	1E	2E	3E	4E

자료: Robberson(2005).

다. Massachusetts주의 '기름 및 유독물질 유출 예방 및 대응 관련법¹⁹⁾

Massachusetts주에서는 '기름 및 유독물질 유출 예방 및 대응 관련법(Oil and Hazardous Material Release Prevention and Response Act (MGL 21E) & Supporting Regulations(310 CMR 40)'을 제정하여 해양 유류유출 사고의 방지와 대처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유류유출 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의 단계 및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첫째, 사고 지점의 기름 유출을 저지시키고 잠재적 피해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응급 방제(Immediate Response Actions) 단계; 둘째,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위험 정도를 감소시키고 응급 방제의 비용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름유출 저감 조치(Release Abatement Measures) 단계; 셋째, 초기에 피해를 입은 국지적 지역에 한하여 각종 조사를 진행하는 제 1 국면(Phase I: Initial Site Investigation Report) 단계; 넷째, 광범위한 피해 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제 2 국면(Phase II: Comprehensive Site Assessment) 단계; 다섯째, 각각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방제작업 대상 지역(Tier I disposal sites and Tier II disposal sites) 선정 단계; 여섯째, 선정된 방제작업 대상 지역이 효력을 가진 이후 2년 내로 방제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는 제 3 국면(Phase II: Report) 단계와 복구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제 3국면(Phase III: Remedial Action Plan) 단계; 일곱째, 선정된 방제작업 대상 지역이 효력을 가진 이후 3년 내로 이루어지는 방제작업 보완 계획 수립(Phase IV: Remedy

¹⁹⁾ Oil and Hazardous Material Release Prevention and Response Act (MGL 21E) & Supporting Regulations(310 CMR 40

Implementation Plan) 단계; 여덟째, 선정된 방제작업 대상 지역이 효력을 가진 이후 5년 내로 이루어지는 대응 조치 결과 진술(Response Action Outcome Statement) 단계; 아홉째, 방제 작업의 실행 및 지속, 종합적 대응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 5국면(Phase V: Operation, Maintenance and/or Monitoring of Comprehensive Response Actions) 단계; 열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 복구(Remedy Operation) 단계로 이루어진다. [표 5]는 지금까지 설명한 방제작업 단계를 요약하고 있다.

[표 5] 방제작업의 진행 단계

단계	작업 내용
1	응급 방제
2	기름유출 저감 조치
3	제 1 국면
4	제 2 국면
5	방제 대상지역 선정
6	제 2 국면과 제 3국면
7	제 4국면
8	대응 조치 결과 진술
9	제 5국면
10	생태계 복구

자료: Massachusetts(2003).

한편, 동 법률에서는 방제종료 시점을 '변상 및 보상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자가 종료해도 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라. Massachusetts주의 2003년 Buzzards Bay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매뉴얼

Massachusetts주는 2003년 5월19일 Buzzards Bay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에 관

한 매뉴얼인 'Immediate Response Action: Treatment and Completion Recommendations - Bouchard Tank Barge 120 Oil Spill, Buzzards Bay (May 19, 2003)'에서 방제작업의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단기적 국면에서 유동적이고 가시적인 기름을 제거하는 단계(mobile oil or gross oil removal); 둘째, 중기적인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안을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단계(active shoreline treatment);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국면에서 간접 조치를 취하거나 자연적으로 기름이 희석되기를 기대하는 단계(passive measures or natural attenuation)로 각 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중기적 방제작업의 종료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표 6]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해수욕장의 대중성, 해안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 늪지 여부 등 해안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지표나 지표 아래의 기름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야 하며,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해안과 방파제·부두 지역, 암석 해안 지역의 경우 기름 광택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손가락에 기름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 방제를 종료할 수 있다. 한편 바닷물이 드나드는 늪지(Salt Marshes)의 경우에는 기름 광택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방제종료가 결정될 수 있다.

[표 6] 방제종료의 결정 기준

유형	방제 종료
빈번히 이용되고, 대중적인 해수욕장 (Heavily Utilized, Public Recreational Sand Beaches)	·지표나 지표 아래의 기름이 가시적이지 않을 때
적게 이용되고, 덜 대중적이거나 사적인 해수욕장(Less Utilized, Semi-Public and Private Sand Beaches)	·지표나 지표 아래의 기름 흔적이 가시적이지 않을 때
모래와 자갈이 섞인 해안(Mixed Sand & Gravel, Gravel and Rip Rap)	·기름 광택이 보이지 않을 때 ·손가락에 기름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 ·기름 흔적은 남아도 됨
사석(방파제 지형), 부두, 말뚝(Rip Rap Seawalls, Bulkheads, Piers, Docks and Pilings)	·기름 광택이 보이지 않을 때 ·손가락에 기름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
암석 해안(Rocky Shorelines)	·기름 광택이 보이지 않을 때 ·손가락에 기름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
바닷물이 드나드는 늪지(Salt Marshes)	·기름 광택이 보이지 않을 때

자료: Massachusetts(2003).

2) 인식적 측면

2008년 6월, 정부는 각종 환경조사 결과 방제가 95% 가량 완료되었다는 판단 하에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의항·신두리·십리포·백리포 등의 해수욕장과 일부 섬·해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하여 긴급방제 작업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7월 현재 유류오염 사고지역 15개 해수욕장 중 구름포·의항·신두리·십리포·백리포 등을 제외한 10개 해수욕장의 개장이 허용되었으며, 일부 긴급방제가 종료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업 및 패류 채취가 재개된 상태이다. [표 7]에 활동별로 방제종료시점, 결정주체, 조사기관, 결정기준 등을 요약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해수욕장 개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태안 유류피해지역 해수욕장 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PH(7.8~8.3), 용존산소량(7.5PPM 이상), 대장균군수(1000이하/100ml) 등 일반 7개 항목과 비스, 벤젠 등 19개 유해 물질의 일정 기준치를 기록해 놓고 있다. 또한 백사장 퇴적물의 경우 총석유계탄화수소(TPH)가 100ppm 미만이어야 하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4ppm 미만이어야 한다는 등의 기준들을 언급하고 있다(디트 뉴스 24, 2008년 6월23일자).

그러나 일부 피해 주민과 환경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근거 및 기준의 객관성, 방제 종료 시점 결정 방식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제종료에 관한 사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협의체인 '실무협의회' 내부에서도 종료 시점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따라서 본 절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의 이해관계자들 중 피해 주민과 담당 공무원, 환경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이 방제종료 시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어떠한 시각과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논해보도록 한다.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단체의 입장은 2차 자료를 통하여 분석해 본다.²¹⁾

20) 태안군청 공무원 L씨는 긴급방제 종료 시점이 결정되기 이전, 2008년 5월에 진행되었던 인터뷰에서 "ITOPF(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limited), KOMOS(한국해사감정) 등에서는 방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작업을 종료하고 나머지는 자연치유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지속적인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 갈등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의견 충돌을 조정, 중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태안군청 L씨 인터뷰, 2008.5.9).

21)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설문조사를 거부하였기에 시민단체의 인식 분석은 2차 자료 조사로 대체하였다.

[표 7] 방제종료와 관련한 조업재개 및 해수욕장 개장

활동	지역	날짜	결정주체	조사기관	방제종료결정기준
조업 재개	천수만, 근소만 지역	2008년 5월 19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양식어업재개 허용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수산물안전성 공동조사	마늘어업 조업재개방침
해수욕장 개장	구름포 및 의항 등 5개 해수욕장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	2008년 6월 27일 만리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개장	해당 지역 시장, 군수가 개장 여부를 결정 ²²⁾	한국해양연구소	해수욕장수질기준운영지침 ²³⁾ (대장균수, 부유물질량(SS), 암모니아질소(NH3-N), 총인(T-P) 등 5개 항목) 국토해양부의 해수욕장개장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수욕장 해수 및 백사장 해양퇴적물 생화학적 기준 조사 결과 구름포 제외한 14개 해수욕장 개장 기준 충족
				민관합동조사단(국토해양부, 해양경찰서, 충청남도, 태안군, 환경단체, 방제업체, 지역주민 등 58명)	관능검사 실시 결과 신두리, 의항, 십리포, 백리포, 구름포를 제외한 10개 해수욕장이 국토해양부의 가이드라인 충족

자료 : 대전일보, 2008년 5월20일; 연합뉴스 2008년 6월23일; 뉴시스 2008년 6월20일; 중앙일보 2008년 6월17일; 뉴시스 2008년 06년16일

(1) 피해주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가. 설문 구성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방제종료 시점에 대한 피해 주민과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태안군 모항리 만리포·의항리 천리포 주민과 태안군청·충청남도 유류사고 대책지원본부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담당 공무원 총 5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그동안 충남도가 올 여름 개장을 원칙으로 행정지원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개장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에게 있다. 개장을 결정한 태안군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도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군수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08년 06월 23일).

23) 국토해양부는 2004년 6월부터 대장균, 암모니아질소, 부유물질 등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수욕장 수질의 적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해수욕장 수질기준을 시행하였다(해양수산부, 2004년 5월 24일).

설문조사는 2008년 7월10일 태안군에서 설문지를 배포한 뒤 응답 즉시 회수하는 서면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분석에는 회수된 총 63부 중 결측치가 없는(유효응답자) 56부만을 포함시켰다.24) 설문은 긴급방제 종료시점의 결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 긴급 방제 종료시점의 적절성, 바람직한 긴급 방제종료 결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총 11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주로 Likert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척도의 지수는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답변이다. 분석은 SPSS(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설문문의 주요 내용은 [표 8]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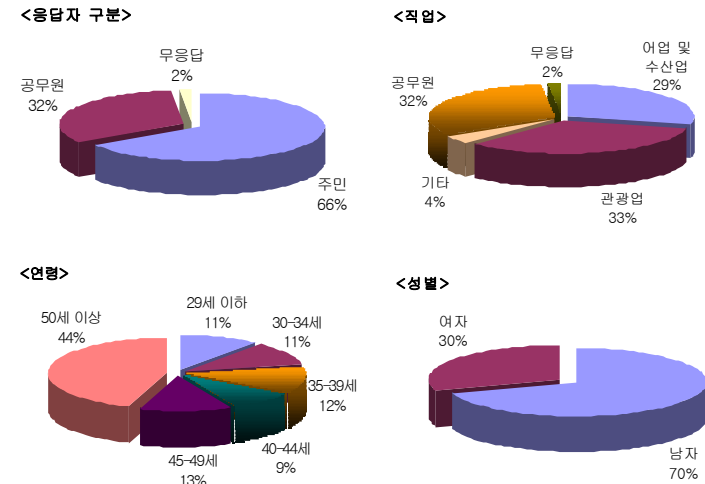
[표 8] 설문문의 주요 내용

분류	설문 내용	문항	척도
결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인식	- 방제종료 결정이 어떠한 근거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 방제종료 결정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 방제종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전문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가?	1~3	5점
종료시점의 타당성과 적절성 평가	- 방제종료를 결정하게 된 근거는 타당한가? - 조업 재개가 허용된 시점은 적절한가? - 폐류 채취 재개가 허용된 시점은 적절한가? - 해수욕장 개장이 허용된 시점은 적절한가? - 전반적으로 종료 시점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4~7 8-1 8-2	5점
바람직한 결정 방식	- 해안 상태가 어떠한 때 방제가 종료되어야 하는가? - 방제종료 결정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9-1 9-2	5점 또는 7점

[그림 2]는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과 공무원의 비율은 주민 66.1%(37명), 공무원 32.1%(18명)이며, 주민들의 직업은 관광업 33.8%(19명), 어업 및 수산업 28.6%(16명), 기타 3.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성비 측면에서 남성이 69.6%(39명), 여성이 30.4%(17명)로 남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연령은 50세 이상이 44.6%(25명)으로 가

24) 7명의 응답자는 설문지 중반 이후 설문 자체를 포기하였으며, 인구학적 정보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들의 응답은 제외하였다.

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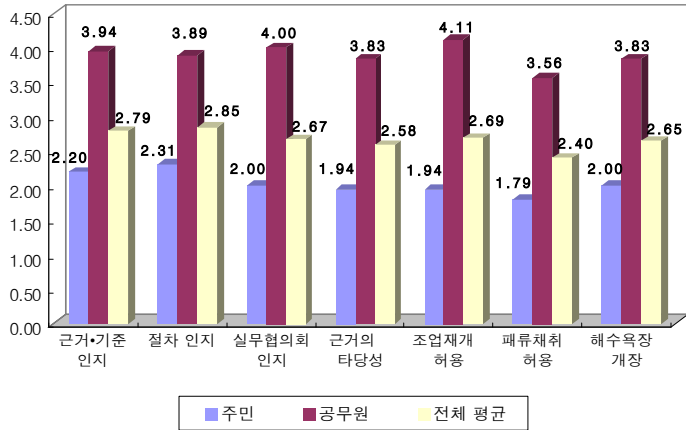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나. 설문분석 결과

설문분석 결과,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긴급방제 종료 시점에 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긴급방제 종료 시점의 결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인식을 묻는 3가지 문항 모두에서 주민보다 공무원이 보통 수준(3점) 이상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주민들은 긴급방제 종료 시점 결정의 근거 및 기준을 알고 있는지, 결정 절차를 알고 있는지, 방제종료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각각 평균 2.20점, 2.31점, 2.00점). 반면, 공무원의 경우 각 질문에 대하여 각각 평균 3.94점, 3.89점, 4.00점을 기록하여 근거 및 기준, 결정 과정, 결정 주체 모두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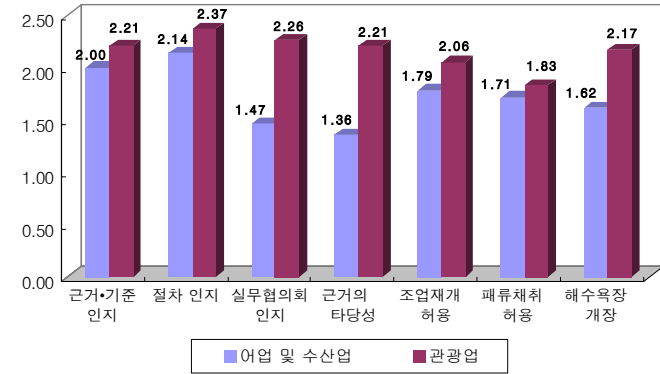
분야별 긴급방제 종료 시점의 타당성 및 적절성 관련 질문 4가지 모두에서도 공무원은 보통(3점) 이상으로 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주민은 평균 2점 이하의 점수를 주어 각 분야별 긴급방제 종료 시점이 적절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응

답하였다. 결정 근거의 타당성, 조업 재개 허용 시점의 적절성, 패류 채취 재개 시점의 적절성, 해수욕장 개장 시점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공무원들 각각 평균 3.83점, 4.11점, 3.56점, 3.83점으로 응답하여 다소 적절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각각 평균 1.94점, 1.94점, 1.79점, 2.00점으로 응답하여 적절치 못한 결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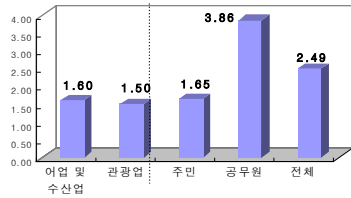
[그림 3] 긴급방제 종료 결정 인지도 및 종료 시점의 적절성 평가 (전체)

주민들의 직업을 어업 및 수산업과 숙박업·식품업 등의 관광업으로 구분하여 응답을 분석한 결과,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보다 긴급방제 종료 결정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고 각 분야별 방제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더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실무협의회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방제종료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문항에 있어서 더욱 크게 드러났다([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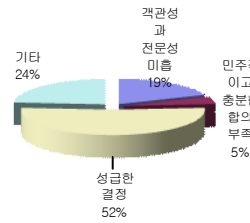


[그림 4] 긴급방제 종료 결정 인지도 및 종료 시점의 적절성 평가(주민)

‘방제종료의 결정 기준·과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긴급방제 종료 시점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평균 2점 이상의 인식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림 5]에서처럼 주민은 평균 1.65점으로 다소 적절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평균 3.86점으로 상당히 적절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업에 따른 주민들의 인식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어업 및 수산업 종사자 평균 1.60점, 관광업 종사자 평균 1.50점). 한편,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 및 근거 없이 방제종료 시점이 결정되었다’는 답변이 52%로 가장 많았고, ‘기타’(24%),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 및 근거 없이 방제종료 시점이 결정되었다’(19%), ‘민주적이고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제종료 시점이 결정되었다’(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 및 근거 없이 방제종료시점이 결정되어 바위, 모래 사이 기름이 많이 보인다 ▷ 원유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방제를 종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방제종료 결정 주체들을 신뢰하기 어렵고 결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 ▷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방제종료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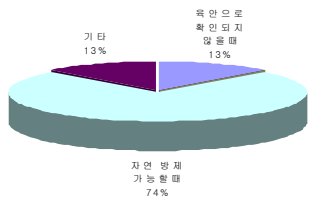
<전반적인 적절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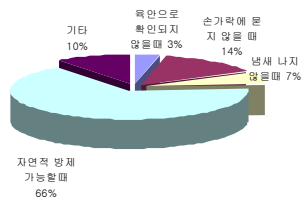
<적절하지 않은 이유>

[그림 5] 전반적인 긴급방제 종료 시점의 적절성 평가

긴급방제 종료 시점 결정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해안의 상태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민과 공무원이 다소 다른 성향의 응답을 하였다. 해안 상태의 경우 주민 66%와 공무원 74%가 '자연 방제가 가능해졌다고 판단될 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응답하여 의견이 일치 되는 듯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으로서 공무원은 '육안으로 기름이 확인되지 않을 때'(13%)를 꼽은 반면 주민의 경우 '손가락에 기름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14%)와 '기름 냄새가 나지 않을 때'(7%)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응답에 있어서 공무원은 ▷ 냄새, 공극수 등 관능 검사를 통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 전문 기관에서 인체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하였을 때 등 전문적인 환경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는 반면, 주민은 ▷ 사고 이전 상태로 환경이 회복 되었을 때 ▷ 기름이 배어나오지 않으면서 냄새도 나지 않을 때 등 보다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방제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여 주민, 공무원 간의 상이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그림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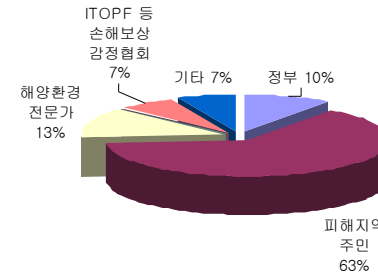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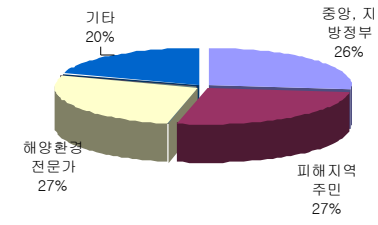
<공무원>

[그림 6] 방제종료 결정 기준이 되는 해안 상태

긴급방제 종료 결정 시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이해관계자의 의견으로, 주민들은 '피해지역 주민' 63%, '해양환경 전문가' 1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10%, 'ITOPF (국제유조선선주오염협회), KOMOS(한국해사감정) 등 손해보상 감정 협회' 7%, '기타' 7%로 답해 본인들의 의견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무원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 27%, '해양환경 전문가' 27%,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6%, '기타' 20%로 주민, 전문가, 정부의 의견이 유사한 비중으로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에서 주목할 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독보적인 의견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응답들이 주를 이뤘다는 점이다. ▷ 관련 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 모든 참여주체의 의견 ▷ 정부와 시민단체의 합동 의견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관련 전문가의 의견 ▷ 주민대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전문가의 종합 의견 등의 답변들이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그림 7] 참고).



<주민>



<공무원>

[그림 7] 방제종료 결정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의견

(2) 응답대상에 따른 방제종료에 대한 인식 분석

앞에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하여 평균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어업 및 수산업 종사자, 관광업의 응답대상에 따라 1) 결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인식, 2) 종료시점의 타당성과 적절성 평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가. 응답대상에 따른 결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인식

첫째, 방제종료 결정이 어떠한 근거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어업 및 수산업, 관광업, 공무원 등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12.32,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응답대상에 따라 근거와 기준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방제종료 결정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ANOVA를 실시한 결과, 어업 및 수산업, 관광업, 공무원 등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10.896,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응답대상에 따라 방제종료 절차인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9] 방제결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인식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

1) 방제종료 결정의 근거와 기준에 대한 인식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응답대상	39.07	2	15.54	12.32	0.000
오차	76.10	48	1.59		
합계	115.18	50			

2) 방제종료 결정의 절차에 대한 인식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응답대상	30.83	2	15.42	10.896	0.000
오차	67.91	48	1.42		
합계	98.75	50			

3) 방제종료에 관한 결정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응답대상	56.64	2	28.320	25.978	0.000
오차	53.42	49	1.090		
합계	110.06	51			

셋째, 방제종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전문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어업 및 수산업, 관광업, 공무원 등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10.896,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응답대상에 따라 방제종료 절차인식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그림 3]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방제 종료 결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인식에서 공무원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일반 주민은 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제종료에 대한 결정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방제 종료의 결정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방제 종료의 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결정 근거와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참여의 부재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민이 배제된 결정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결정이 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의 확대는 정책결정 이후의 집행에 있어서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응답대상에 따른 방제종료시점의 타당성과 적절성 평가

우선 방제종료를 결정하게 된 근거는 타당한지에 대한 ANOVA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 및 수산업, 관광업, 공무원 등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20.41,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응답대상에 따라 방제종료결정의 타당성과 적절성 유무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 조업 재개가 허용된 시점은 적절한지에 대한 ANOVA 결과 또한, 어업 및 수산업, 관광업, 공무원 등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30.00,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응답대상에 따라 방제종료결정의 타당성과 적절성 유무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패류 채취 재개가 허용된 시점은 적절한지에 대한 결과도 역시 어업 및 수산업, 관광업, 공무원 등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21.479,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응답대상에 따라 패류 채취 재개 허용시점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개장이 허용된 시점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어업 및 수산업, 관광업, 공무원 등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이 19.89, 유의확률은 0.00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응답대상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이 허용된 시점의 적절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방제종료의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제종료시점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관한 평가에서도 근거의 타당성, 조업 재개 시점의 타당성, 패류 채취 재개 허용시점의 타당성, 해수욕장 개장 허용 시점의 적절성, 전반적인 종료시점의 타당성 등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종료시점에 대해 더욱 타당

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방제종료 시점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매우 낮은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제종료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주민의 낮은 평가는 앞에서 언급한 SCAT팀이 방제종료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제작업에서의 기술력과 인력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 최대한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일치를 통하여 방제종료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방제종료에 대하여 공무원과 달리 주민은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시 앞에서 언급한 '변상 및 보상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자가 종료해도 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로 규정한 Massachusetts주의 법률과도 매우 다른 결론으로 앞으로 방제종료를 결정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동의와 설득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0] 방제 종료시점의 타당성과 적절성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

1) 방제종료를 결정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응답대상	51.76	2	25.88	20.41	0.000
오차	60.87	48	1.27		
합계	112.63	50			
2) 조업 재개가 허용된 시점의 타당성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응답대상	55.00	2	27.500	30.00	0.000
오차	43.08	47	0.917		
합계	98.08	49			
3) 폐류 채취 재개가 허용된 시점의 적절성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응답대상	36.38	2	18.189	21.479	0.000
오차	39.80	47	0.847		
합계	76.18	49			
4) 해수욕장 개장 허용 시점의 적절성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응답대상	43.31	2	21.655	19.89	0.000
오차	50.08	46	1.09		
합계	93.39	48			
5) 전반적인 방제 종료 시점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응답대상	55.82	2	27.91	32.78	0.000
오차	34.91	41	0.851		
합계	90.73	43			

4. 결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유류유출 사례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의 방제종료시점(cleanup ending point)과 관련하여 방제종료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구성원의 참여 속에,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주민과 공무원간 이러한 방제 종료 시점의 결정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종료 결정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방제작업의 정책이 결정되는 초기의 단계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중앙 및 수습 본부가 꾸려져 사고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었고, 방제작업의 집행 단계에서는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초기 방제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방제작업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고, 참여자 역시 어업재개를 위한 유관기관에 집중되어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한편으로는 피해가 10-20년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기름유출사고의 방제 종료를 선언하는 데 있어 환경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부 등의 유관 정부기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적 차원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대표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주민의 직종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주민대표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며 특히 비어업부문은 실무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방제 종료 결정 근거와 과정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도 공무원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해지역의 일반 주민은 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이 뿐 아니라 방제종료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도 공무원이 높게 평가한 것과는 달리, 주민들은 부적절하고 타당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SCAT팀과 미국의 Massachusetts주 법률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나 '변상 및 보상에 관한 이해관계자가 종료해도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제종료선언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의는 4회에 그쳤고, 지역의 부분적인 방제종료는 이러한 합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고 그결과 정책이행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방제종료 결정은 사회적 갈등을 수반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방제종료 시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한 가지에 국한 되지 않는다. 방제종료 시점은 보상과 관련한 경제적 의미, 방제활동을 수행하고 감독하는 행정체계에 연관된 의미, 방제종료활동과 더불어 조업개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됨으로써 지역 사회나 소비자에게 던지는 의미, 방제종료로 자연치유의 과정에 대부분 맡겨지는 생태환경이 지니는 환경적 의미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그 결과 사회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아직 공식적인 방제종료가 선언되지 않은 2008년 9월 24일, 기름 유출 피해와 관련한 첫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방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방제종료가 보상과 관련한 경제적인 의미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피해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방제종료를 위한 조사가 피해보상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우려는 이것이 결코 별개가 아님을 보여 준다.²⁵⁾ 즉,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업 재개를 위한 부분적 방제 종료의 연구들이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명확히 방제종료의 시점이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고 초기 구성되었던 해양경찰청 산하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방제종료가 이루어진 5월 초기에 일부 근무자들이 본래의 업무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조업재개가 일부 이루어진 7월 이후에도 방제 대응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파견된 Task Force의 모든 구성원은 해체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는 사고수습본부의 경우 방제가 주 업무로 긴급방제가 끝났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일부는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고, 후발적인 방제작업을 이어가기 때문이고, 충청남도에서 파견된 TF팀의 경우 방제종료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과도 관련한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제종료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인원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인원들은 팀을 유지하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적으로 방제작업의 종료는 방제를 위해 구성되었던 TF팀의 부분적인 해체를 의미한다. 또한 방제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합의기구인 '실무협의회' 역시 임시조직으로 방제종료 선언 이후에는 사실상 해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종적인 방제종료 선언 이후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책임질 수 있는 TF팀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오염방제는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와 환경부(해양환경관리공단)가 맡고 있고, 피해복구의 경우에는 해수욕장과 오염해안은 국토해양부가, 해양생태계와 갯벌은 환경부가, 양식장은 농수산식품부가 삼원체제로 맡고 있는 상황에서 방제종료 선언 이후 이들을 통괄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조직에 대한 행정체계에 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혹은 소비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어쩌면 이보다 더 광범위한 논의가 될 것이다.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한 가지 결과를 기준으로 한 조업재개 결정은 소비자에게는 '방제종료=조업재개'의 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방제종료가 곧 조업재개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의 조업재개의 안전성에 대한 발표가 치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는 곧 소비자인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이

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해수산연구소가 2008년 9월 18일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중간발표회에서 공개한 발표에 대해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가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보상과 관련된 과학적, 법적 근거자료가 될 것이 뻔하다."(태안신문, 2008/9/25)는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발언은 이를 대변한다.

침해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업재개 결정이후의 수산물 유통에서 볼 수 있듯이 조업재개 결정은 그 어업 지역에 대한 방제종료를 의미함과 동시에 수산물을 어획하고 이를 전 국민이 먹게 되는 유통의 과정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즉, 사고피해지역에서 조업활동이 재개되어 그 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이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시중에 별다른 표시 없이 유통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지게 된다. 이는 곧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방제종료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방제 종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수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우려는 사회의 혼란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방제 종료는 더 이상 인위적인 방제활동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제 종료야 곧 안전한 수산물 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보다 부각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방제종료와 조업활동의 재개를 엄밀히 구분해서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정을 통해 조업재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음식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시민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생태·환경적으로도 방제종료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방제종료 선언은 자연환경이 과거와 같은 상태로 회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방제 종료란 태안지역방제실행계획이나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핸드북,' 방제기술지원단의 '해양오염방제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나 방제작업을 실시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방제종료가 사고 이전의 자연 상태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방제종료라는 선언 이후에도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방제종료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실무협의회의 조사로 땅에서 기름이 유출되지 않았을 때, 또한 모든 방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 (태안군청 L씨 인터뷰, 2008/ 9/30)"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방제 종료 이후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인위적인 방제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방제종료가 생태계의 원상회복을 의미하지 않기에 방제 이후에 대한 장기적인 환경복구에 대한 비용과 인력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스스로 비용과 인력을 마련해서 장기 모니터링을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모니터링 비용을 위한 기금의 조성 혹은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인 벌금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엑손 발데즈호 사건 이후에 취했던 것과 같은 법률제정 등의 부차적인 노력 또한 더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태·환경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유류오염 어장환경에 대하여 과학적인 조사와 복원을 위한 3개년 사업인 「태안 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2008-2010)」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원사업에는 해수유분, 조간대 퇴적물의 PAHs 조사, 양식어장별 정밀 실태조사, 양식생물의 생리학적 특성변화 및 독성시험, 양식생물의 건강도와 식품안전도 조사, 굴, 바지락, 해조류 등의 양식품종별 복원시험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이러한 중기적인 정부의 안은 환영할 만 한 일이지만,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부의 안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환경변화에 노출되어 있어 누구보다 민감하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환경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이들의 통로를 열어주고 예산을 지원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나가기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방제종료는 일회성 게임이 아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추가되고 반복되는 행위이며, 그럴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치는 파장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일어나고 난 후 초기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응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방제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나 긴급 방제종료 이후의 조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제종료의 다차원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합의 된 후 다양한 추가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시각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행정조직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재목.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ECO 12(1), 7-42.
- 윤순진.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자원봉사자 연구: 참여 동기와 사건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ECO 12(1), 145-179.
- 충청남도. (2007).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종합상황보고 (2007.12.21)」. 충청남도.
- 태안군.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종합추진상황보고(2008.5.1)」. 태안군.
- 해양경찰청. (2000a). 「태안지역방제실행계획(경기도 평택~충청남도 해역)」. 해양경찰청.
- _____. (2000b). 「해양기름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방제기본계획」. 해양경찰청.
- _____. (2003). 「해양경찰 50년사:1953~2003」. 해양경찰청.
- _____. (2004). 「해양오염방제 핸드북」.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2008). 「해안오염평가결과 설명회 발표내용 및 질의응답 회의록 (2008.1.12)」. 해양수산부.
- Massachusetts. (2003). Immediate Response Action: Treatment and Completion Recommendations - Bouchard Tank Barge 120 Oil Spill, Buzzards Bay (May 19, 2003). Massachusetts.
- Robberson, B. (2005). Net Environmental Benefit Analysis (NEBA) Decision-Making Tool. Presentation Material of 'Developing Consensus for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In Emergency Response'.

<WEB SITE>

- 방제기술지원단 홈페이지. <http://ssu.kcg.go.kr/>.
- 연합뉴스. 2008년 10월 1일. "국가재난 대응 '전문가 자문그룹' 출범"
<http://media.daum.net>
-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9월 30일. "태안 유류피해 30일, 조업재개 완료 등 회복세"
". <http://mifaff.korea.kr>.

- 아시아투데이. 2008년 9월 18일. "태안기름 바지락. 식중독 초밥 팔고 '쉬쉬'".
<http://www.asiatoday.co.kr>.
- 에코저널. 2008년 9월 24일자. "태안 바지락 대량폐사, 유조선 기름유출이 원인".
[http://www.ecojournal.co.kr/news_view.html?code=01060000&uid=37816
&cpage=1](http://www.ecojournal.co.kr/news_view.html?code=01060000&uid=37816&cpage=1).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 뉴스스. 2008년 8월 31일자. "태안, 어장 전면 조업재개".
ITOPF Homepage. <http://www.itopf.com/>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 생태계 피해 및 복원과 향후 과제

이평주(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 사고 상황

■ 사고 일시 :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6분경

■ 사고 지점: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10km 해상 (N 36° 52' 13" / E 126° 03' 21")

■ 사고 관련 선박

- 유조선: 홍콩 선적의 "HEBEI SPIRIT"호 (146,848톤 / 단일선체 / 선령 14년)
- 예인선: "삼성 T-5"호(292톤), "삼호 T-3"호,
- 부선(바지선): "삼성 1호" (11,828톤, 3,000톤급 해상크레인 적재 중이었음)

■ 기상 상황: 북서풍 14~16 m/s, 파고 3~4 m, 풍랑주의보 발효 중

■ 사고 경위

○ 삼성중공업 소속 2척의 예인선에 의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예인줄에 의해 예인 중이던 부선 삼성 1호와 연결되어 있던 예인줄이 절단되어 분리되면서

○ 화주인 현대오일뱅크에 가기 위해 07년 12월 6일부터 사고 지점 해상에 투묘 정박 중이던 홍콩선적의 유조선 "HEBEI SPIRIT"호의 좌현과 충돌

○ 원유 저장탱크 세 곳(1,3,5번)이 파공되어 원유 12,547kl이 유출.

■ 사고의 원인과 성격

○ 생태계 보전을 전제한 지속가능한 성장보다 자연 파괴적인 성장일변도의 사회가 지닌 모순과 사회전반적인 안전 불감증 등에 의해 발생한 인재

○ 환경피해(환경재난)가 경제적 충격을 동반하고 곧 바로 지역 갈등 등 사회 혼란(사회재난)의 양상으로 변화

■ 사고 확산과 피해 가중의 원인

○ 정부의 초기 사고 상황 판단 잘못, 업무 분장과 지휘 체계 혼란, 각 지역 현실에 맞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방제 매뉴얼의 부재

○ 사고 현장의 지형적 여건과 기상 및 해류의 변화 그리고 유출된 기름의 성분 등에 따른 해상방제 매뉴얼이 없었으며 기관별 불분명한 업무 분장 등으로 지휘체계까지 혼란을 겪으면서 초동방제의 실패로 인해 피해의 범위는 태안반도에서부터 제주도 추자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피해의 정도 또한 가중됨.

과도한 유화제의 사용도 피해 확산과 피해 가중의 한 원인으로 작용 함.



사고 유조선(07.12.9 / 이평주)

사고 해상크레인과 예인선(07.12.9/이평주)



[사고 관련 초기의 모습들]

2. 피해 상황

2-1) 피해 상황 전반

■ 접수와 파악 중인 피해 상황

- 2009년 5월 8일 현재(사고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주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를 마감한 결과) 12만여건 피해 접수
- 양식장 34,317ha(충남 15,300ha, 전남 19,017ha)
- 해안선 1,218.3km(충남 1,105km, 전남 113.3km)
- 충남 해수욕장 15개소 / 충남 음식 숙박업소 등 7,200여 개소
- 이미지 손상과 지역 투자 기회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 태안해안 국립공원 등의 연안생태계 전반

- 유출 원유의 독성에 의한 오염 인근 지역주민과 방제자원봉사자 등의 건강 피해
- 피해민들의 화병과 국민적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 기타 사회적 비용 초래

2-2) 태안 지역 환경피해 현황 [환경운동연합 파악 내용 중심]

■ 검증되지 않은 방제 방법과 무분별한 도로 개설 등에 의한 피해

- 고온 고압 세척
 - 섭씨 90도, 압력 2800 psi(193 bar) 고온 고압 방제(07년 12월, 소근진 방조제)
 - 조간대 상부 생물 서식 암반지역 고온 고압 방제(08년 1월~3월, 구례포 등)
- 자갈 및 모래 삶기
 - 가로 3m x 세로 2m X 높이 1.2m 정도의 철재 통에 자갈과 모래를 가스 불을 이용 삶아 내기 방법 여러 지역에서 사용(소근2리, 의항2리, 만리포, 가의도 등)
- 무분별한 방제용 도로 개설에 따른 자연 파괴
 - 중장비를 이용 국립공원 여러 지역의 해안 기암괴석과 소나무 숲 등을 훼손
- 중장비를 이용한 모래 갈기(Tilling)와 바위와 자갈 이동 등에 따른 지형 변화 등
 - 바닷물에 의한 자연방제의 방법으로 모래 갈기와 중장비를 동원해 해변 자갈과 바위들을 일정한 지역에 모아 놓고 바닷물에 씻기게 하여 급격한 지형 변화 등 발생
- 수거된 유류 폐기물의 보관 잘못에 의해 토양 오염 등 오염의 공간적 확산 초래
 - 수거한 해안 유류 오염물질 육지에 임시 보관 잘못으로 토양 오염
[신두리 해안사구(12월 9일), 구름포 해안사구(12월 19일), 보령 삼시도 건너머 해안 사구(12월 27일) 등]



[검증되지 않은 방제 방법과 무분별한 도로 개설 등에 의한 피해 사진_이평주]

■ 눈앞에 펼쳐지던 주검들과 생물 피해 (환경운동연합 파악 내용 중심)

- 조류(鳥類)의 피해 (07.12.07 ~ 07.12.29)
 - 수거된 조류 사체 55마리, 다수 조류 사체 쓰레기로 처리됨.
 - 구조되어 치료 후 방사된 조류 31마리
 - 만리포 남측 해변에서 피해 조류 사체 발견: 흰뺨검둥오리
 - 의항2리~신두리 해변에서 조류 피해 사체 발견: 빨논병아리, 흰뺨검둥오리
 - 의항 유수지에서 피해 조류 관찰됨: 꿩이갈매기, 재갈매기
 - 어은돌해수욕장에서 피해 조류 관찰됨: 꿩이갈매기, 흰뺨검둥오리, 노랑발갈매기
 - 통개항 포구와 양식장에서 피해 조류 관찰됨: 가마우지, 바다비오리, 빨논병아리
 - 이원방조제 지역 해변 등에서 피해 조류 발견: 검은목논병아리, 바다비오리, 가마우지, 꿩이갈매기
 - 꿩이갈매기 번식지 천연기념물 난도 꿩이갈매기 자취 찾기 어려워(07년 12월 18일)
 -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사고 지점에서 약 100 Km 이격)에서 기름 범벅 빨논병아리 사체 발견(07년 12월 18일)

- 쇠돌고래과 상괭이 7마리 사체로 발견(07년 12월 18일까지)
 - 태안군 소원면과 남면 신은리 곱섬(07.12/16) 등에서 상괭이 사체 발견
 -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아치내 지역(08. 12/10) 상괭이 사체 해변에 떠밀림.

- 바지락 등 조개류와 게 종류 태안 여러 지역에서 폐사
 - 2007년 12월 중순(사고 후 약 7일 경과)부터 바지락, 동죽, 키조개 등 조개류와 게(펼롱게, 엽낭게, 달랑게 등) 사체 발견

- 모래무지염통성게, 괴물유령갯지렁이, 서해비단고둥 등 사체 발견
 - 2007년 12월 23일경(사고 후 16일 경과)부터 모래무지 성게, 괴물유령갯지렁이, 썩, 썩붙이, 서해비단고둥 등 사체발견(신두리 북측 해변 등)

- 갯가재(일명 썩 또는 설게) 집단 폐사: 기름이 퇴적층으로 스며들어 저서생물군집 피해
 - 2007년 12월 25일경(사고 후 18일 경과)부터 사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 16일경 수 만 마리 폐죽음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신너루 지역 등)

- 자취를 감췄던 갈매기들 보이기 시작
 - 2008년 12월 26일(사고 후 19일 경과), 갈매기 6마리 천리포 해변에서 목격.
- 수심 0.5~3m 갯벌에서 자라던 거머리말(*Zostera marina*: 일명 잘피 또는 진저리) 잎사귀 갈색으로 변하며 줄기가 녹아내려 죽어가기 시작
 - 2007년 12월 말경(사고 후 23일 경과)부터 잘피 군락지 갈색으로 변하며 죽기 시작(의항 2리 신너루 지역 등)
- 환경부 태안지역 생태계 긴급조사(07.12/26~08.1/31) 결과 발표 내용
 - 조하대 퇴적물 내 유류성분 사고 전 13.7 ng/g dry wt → 78.98 ng/g dry wt.
 - 사고 전에 비해 5.76배 증가(태안 원북 구례포)
 - 김, 미역 등 해조류와 새우말 등 해초(새우말, 거머리말)류 사고 전(07년 2월) 293.56 g/m² → 223.04 g/m². 43.2% 감소(몽산포 등 5개 지역)
 - 갑각류 8종 133 개체/m² → 5종 56 개체/m².
 - 지중해담치 내 PAHs 농도는 128~1058/축 내 PAHs는 243.98ng/g dry wt.로 나타남
 - [우리나라 연안해역 담치류의 PAHs 조사결과 범위(27.5~211ng/g dry wt.)를 초과하는 수준]
- 해조류(미역, 다시마)와 해초류 거머리말(잘피) 등 해변으로 대량 떠밀리기 시작
 - 2008년 6월 10일경(사고 발생 후 184일)부터 태안 여러 해안에 미역과 다시마, 거머리말 등 대량으로 떠밀리기 시작.



[눈앞에 펼쳐지던 주검들과 생물 피해 사진]

■ 자연 질서의 혼란(종의 치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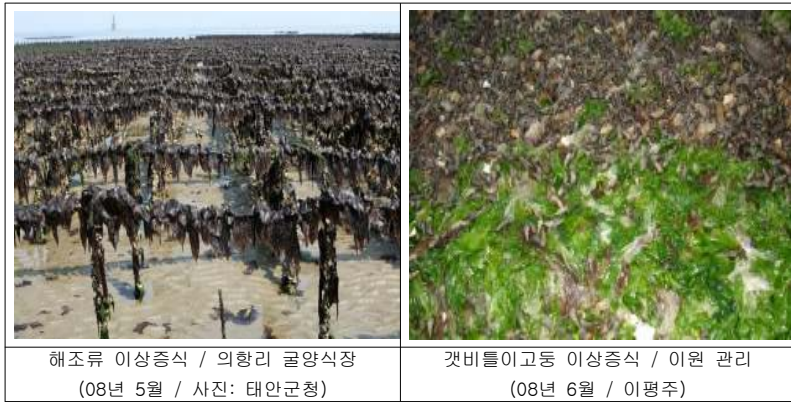
- 조하대 등의 해조류(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와 조간대 생물의 이상 증식
 - 2008년 5월경부터 신두리와 의항2리 굴 양식장에 녹조류와 갈조류 등 이상 증식
 - 2008년 6월 10일경(사고 발생 후 184일)부터 조간대 상하부 지역에 해조류 중 녹조류인 가시파래와 홀파래가 사고 전과는 달리 대량으로 떠밀리기 시작.
 - 해변에 떠밀린 해조류와 함께 갯비틀이고둥(학명 :*Cerithideopsisilla djadjariensis* K. Martin)의 이상 증식 발생 (태안 이원면 소근 방조제 인근 읍포해수욕장 등)
- 극피동물 성게류 사고 전보다 이상 증식
 - 사고 전의 특정 지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어민 인터뷰 내용 중 2008년 봄부터 성게가 사고 전보다 많아졌다고 증언.
- 조간대 상부 암반 지역의 생물 피해와 개체 감소
 - 고착성의 조무래기따개비와 굴 등의 피해와 고착 감소
 - * 기름으로 피복된 조무래기따개비 죽기 시작(07년 12월 말 경. 학암포 해변 등)
 - * 기름으로 피복된 바위에 붙은 굴의 접변인대(hinge ligament)와 근육을 이용 패각을 닫는 힘이 약화되기 시작 했다고 어민들 증언(08년 2월 중순 어민 인터뷰 중)

- 2008년 5월경부터 조간대 상부 암반 지역까지 해조, 해조류 등 이상 증식

○ 우점종 변화(종의 치환) 발생?

- 바위에 사는 절지동물 중 게 종류의 수는 감소하고, 갑각류인 갯강구의 수는 증가(특정 지역에 대한 사고 전 기록이 없어 확인 필요)

* 기름 오염에 강해 살아남은 종과 생물 사체 등 먹잇감이 풍부해져 발생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지역의 장기간에 걸친 생태계 혼란인지 정밀 조사 필요.



[자연 질서의 혼란 발생 사진]

○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갯벌

- 2008년 7월경부터 갯벌에 콩게, 엽낭게와 달랑게 그리고 비단고둥, 서해비단고둥들의 활발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 (신두리해수욕장 등)
- 2008년 9월 중순부터는 민칭이 알집들(난괴)과 수 많은 콩게류들 그리고 비단고둥류들이 여러 해안에서 목격(신두리 해변 등)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갯벌 사진_사진:이평주]

2-3) 태안 지역 주민들 삶의 현황

■ 경제적 고충

- 바닥 통장 잔고와 깊어가는 쌀독 그리고 날아드는 독촉장
 - 긴급 생계안정자금의 늦장(07년 12월 14일 지원 결정, 08년 2월 5일 주민에게)
 - 긴급을 요하는 생계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했다 할 수 있지만 민선 지방자치체의 병폐이기도 한 각 지자체간에 배정 금액을 놓고 벌였던 성과 경쟁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 깨끗한 갯벌과 바다의 주인에서 방제작업 노동자로
(08년 6월까지의 방제 인건비 11월 28일 받음)
 - 자기 양식장 폐류 수확에서 다른 지역 폐류 채취 일당노동자로 전락
 - 생업을 위해 대출받은 수협과 농협 등 들어나는 금융권의 이자와 독촉장
 - 기름 폭탄 맞아 매일 보는 것이 기름인데 정작 언 몸을 녹일 기름은 없어.

■ 심리적 고통

○ 주민들의 잇단 자살[2008년 1월 10일-이모(65세), 16일-김모(75세), 18일-지모(56세)]에 따른 심리적 충격

○ 소외감과 박탈감 그리고 짐작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

- 정보, 정치력(손해 사정 등), 경제력, 근로, 배상으로부터의 소외와 박탈감

*(머니투데이. 08.3.20. 기사 중 내용) 나사렛대 심재권 교수가 태안 기름유출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만리포 해수욕장과 모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심리적 상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72.3%(115명)가 기름유출 사태 이후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직업별로는 어업종사자가 84.8%(84명), 상업종사자 54.7%(29명)로 조사됐다.

자살 충동의 원인으로는 생계곤란이 전체 85.2%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기름유출에 따른 건강악화 7%, 지역주민과의 갈등 2.6%, 사회적 편견과 인식 2.6%, 기타 2.6%로 나타났다.

*(녹색연합 설문. 08.2.16~17) 20% 자살 충동 경험, 57%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 여러 조사만 있고 발표는 없어(건강 조사) / 발표는 있으나 대책이 없어(생태계 조사)

- 과민상태(우울증, 강박감, 불안, 적대감, 울화, 불면증, 집중력 감퇴, 정서불안, 무기력)

■ 가정과 사회적 갈등

○ 가정불화

- 과민상태로 가정불화(부부싸움 등), 이웃 간의 경쟁 심리와 서먹함 그리고 다툼

*사고 후 사소한 문제로 기인한 이웃 간의 다툼 증가

○ 사회적 갈등

- 기준도 없는 긴급 생계안정자금 배분에 따른 사회적 갈등 야기

- 여러 피해대책위원회의 난립(특별법 제정 전)과 로펌들의 수입경쟁

*특별법 제정 공포(08년 3월 14일) 전, 배상한도 3,216억원(2억 3백만 SDR)을 놓고 벌어졌던 업종과 지역간 경쟁 양상: 대책기구의 난립 원인 중 하나

- 업종간 지역간의 이해득실에 따른 갈등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급과 해수욕장 개장 관련된 지역과 업종 간 갈등 발생

- 세대간 생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적 갈등

*일회성 홍보용 자매결연 사업과 방재 종료 선언 후 해수욕장 개장 등도 갈등을 야기

- 소통부재와 정보로부터의 소외에 따른 행정 불신과 갈등

*각종 지역 경제 살리기 이벤트와 지역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한 지역과 업종간의 이견과 행정 불신

- 복잡한 2원적인 손해 배상 구조에 따른 이해의 어려움과 불만 등

* 이번 사고의 경우 현대오일뱅크와 같은 화주들의 분담금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금 성격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인 IOPC Funds(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배상 책임이 있는 선주 측 이번 사고의 경우

홍콩 승완 소재의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주식회사’가 책임보험을 통하여 배상하는

것(Protection & Indemnity Club)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선주 책임한도를

초과하거나 면책되는 경우의 배상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IOPC Funds에서

배상하게 되어 있는 2원적인 손해 배상 구조로 되어 있다.

- 주권 국가로써의 정부가 해야 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손해사정과 피해액 산

정 등의 권한을 정부가 외국 보험 회사가 거의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방기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

*사고 당사자 간의 지리한 법정 다툼과는 별개로 주민 등의 피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 인정 등에는 정부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으며 IOPC Funds와 관계하고 있는

‘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인 ITOPF (The 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에서 하고 있고, 여러 분야의 피해 배상이나 각종 비용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ITOPF에서 고용한 국내 손해사정업체인 ‘한국해사감정 KOMOS’에서 모든 청구 내역에 대하여 1차 사정을 거치고 또다시 ITOPF와 IOPC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처럼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전문가적 지식과 행정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액 산정 등의 권한을 외국 보험 회사가 거의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기하는 등 주권국가로써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지역과 분야별 세부적인 배상계획은 수립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 간 그리고 업종 간의 불신과 불만 그리고 갈등이 증폭되고도 있는 실정이다.

*08년 3월 14일 공포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배상액을 피해 금액 산정과 지급 확정 전에도 미리 지급 할 수 있음은 물론 IOPC Funds에서 지급하게 될 한도액인 ‘1992년 기금(1992 Fund Convention)’ 2억 3백만 SDR (SDR: 무형의 국제자금 유통 단위로 현재 한화로 약 3,216억원 정도)을 초과하는 배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배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은 되었다.



공청회장 밖 주민들 모습(08.1.18 /이평주)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08.1.18 /이평주)



긴급 생계비 지급 관련 불만 주민집회
(출처:08.3.7 /태안군청)

대산 삼성토탈 앞 주민집회
(출처:08.2.29 / 태안군청)

[피해주민들의 불만 표출 모습들]

3. 앞으로의 과제

3-1) 방제 재개와 효과적인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 방제가 필요한 지역에 계속 피해 주민들이 방제 등에 참여 가능하도록 예산 배정 필요

- 현재 공식적인 방제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 6개 지역 8개 섬지역 등에 대한 생태계 복원 차원의 방제가 2008년 12월 중순까지 이루어지다 예산이 없어 중지됨.
- 방제 상황 점검과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 필요
 - 육지부와 조서 지역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여 방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방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필요.
 -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논의 기구 구성.

■ 해조류 군락지 복원 사업 등 전개

- 거머리말(*Zostera marina*: 일명 잘피 또는 진저리) 이식 복원 사업
 - 잘피 등 해조류가 자라던 지역에 주민들이 해당 식물을 이식하여 복원 사업 전개

■ 해당 지역 토착 미생물 등을 활용한 방제 방안 연구 필요

- 기름 성분을 분해하는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 정화 방안 연구 등
 - 자연 정화를 돕는 차원의 미생물 활성화 방안 등은 고려 할 수 있다 여겨짐.

3-2) 지역 차원의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 그리고 지역 재건을 위한 노력 필요

- 피해민,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협치 기구(거버넌스) 구성 필요
- 기존에 있던 지역 계획을 사고 이후의 현실에 맞게 수정 필요: 탈 석유문명을 지향하는 발전 방안 등
 - 가로림만 조력 발전담 추진 백지화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 등
 - 지역의 특색 있는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 지역 생태문화 그리고 재난 현장 안내자 육성 교육 / 직업 교육 등

3-3) 정부 차원의 지역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지속가능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
 - 독살 등 전통어로 방식을 활용한 주민 소득 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주민 건강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상시 운영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
- 피해지역 생태계 변화 조사와 복원 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3-4)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 등의 재정비

- 국가 재난 관련 체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
- 해상 유류오염 방제 매뉴얼을 유통량과 유류의 종류, 기상, 지역 현실에 맞게 작성
- 해양오염 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유조선 운항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이중선체와 유도선 조기도입 등)

3-5) 특별법 개정과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 필요

- 기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
- 피해 조사와 피해액 산정 등 정부에서 추진
 - 우리나라의 어로와 유통 등의 행태를 감안한 피해 조사 실시
 - 관행어업과 맨손어업 등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한 정부 기구 구성 필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관행어업과 맨손어업 등에 대한 피해 산정 방법 등 용역 중)

* 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한도초과 배상금에 대한 결정 또한 소득세 납부 실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실적 등과 같이 공인된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피해를 인정해 주려는 IOPC Funds에서 사정한 결과를 토대로 하게 되어 있어, 피해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많은 피해민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권희태,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출유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개선과제
- 김진항,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에 대한 정부의 대책
- 박재묵,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영향,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 이평주·김도균·손정혁,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영향, 사고의 발생과 전개
- 태안군, 2007. 2008. 태안군청 공보실 사진 3컷(양식장, 주민집회)
- 환경부, 2008. 3. 태안지역 생태계 긴급조사 결과 발표 자료
- 환경운동연합, 2007, 2008. 기름유출 사고 야생동물 구조단 자료
- 환경운동연합, 2007. 2008. 태안 시민생태조사단 자료
- 환경운동연합, 기름유출사고 현장 활동가 사진(김신환, 여길옥, 작가미상)

□ 제2분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 영향과 공동체 회복

좌장: 김세호(한서대 내포지역발전연구소 자문위원, 행정학과 겸임교수)

[논 문 발 표]

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 재난’ 연구”
이시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2.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홍덕화(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구도원(환경사회연구소 소장)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피해지역의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김겸훈(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소장, 한남대 교수)

[토 론]

최한진(태안군 유류피해대책연합회 사무국장)
이기재(태안군 재난관리과장)
배정환(한서대 행정학과 교수)
최광용(태안시대 편집국장)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 재난' 연구
A Study on 'Social Disaster' of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이시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요약

이 연구에서는 2007년 12월7일 태안부근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전화조사의 통계적 분석과 수차례의 비구조적 면접조사에서 얻어진 것이다.

우리는 어촌의 생산 활동이 부분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것이 촌락의 연대를 보증하고 있었다. 바다의 생태계의 파괴로 생산조직의 이완, 그리고 촌락의 통합의 위기가 닥쳐온 것으로 보인다.

기름유출사고는 이러한 취약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바다에 의존하던 생산조직이 활동정지상태에 빠지고 촌락관계도 약화되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원을 상실하였으며, 그 대신 두 차례의 생계비지원, 방제비지원 등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충격은 지역과 생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생태계의 회복과 더불어 생업활동의 회복에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2008년 가을부터 조업을 재개하였지만, 그 후 일부 수산물 채취업에서 조업 재개하였고, 그러나 양식업은 아직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음식, 숙박업, 가게 등은 관광객이 다시 돌아 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불투명한 장래전망이다. 생태계는 언제 회복될 것이며, 관광객은 언제 다시 찾아 올 것인가 전망이 서지 않고 있다. 또한 기름 유출사고에 의한 피해 보상은 과연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통계조사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모두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지만, 면접조사에 들어가 물어 보면 불안은 아직 상당히 남아 있다. 1차 조사와 비교해도 2차조사에서도 사람들의 삶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장래 전망에 대해서 주민들은 매우 복잡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을 떠나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바다생태계의 회복에 대해서도, 45.9%가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지난 2월 조사의 33%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점도 앞으로 추세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다 같이 보여주는 지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주민들의 가치관 조사에서 개인이익보다는 공동체적 이익을, 현재보다는 미래, 개발보다는 환경보전,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보다는 화목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지역의 사회복구와 재건을 위해서 이러한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키워드: 사회적 영향, 취약성, 기름유출사고,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신뢰

1. 서론

2007년 12월7일의 태안 앞 바다의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고는 생태적 재앙을 불러왔다. 당시 태안 앞바다에서 정박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예인선이 충돌하여 유조선으로부터 1만여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어 300킬로미터의 해안을 오염시키고, 101개의 섬, 15개의 해수욕장, 35000헥타르의 양식장과 어로시설에 피해를 주었다. 이로 인하여 약 4만가구가 피해를 입고,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추산으로도 약 6000억의 피해가 추산되고 있다²⁶).

기름유출사건에 의한 바다생태계의 파괴로 바다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어민들, 즉 양식업어민들, 맨손어업종사자들, 연안어업종사자들이 우선 일차적으로 일터를 잃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태안군은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국립공원, 해수욕장으로 유명하여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었으나 바다의 오염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음식점, 숙박시설, 소매업, 위락시설 등은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양식장이나 개별에서 굴을 따고 조개를 줍던 어민들은 해안 방제작업에 나섰다. 지역민들의 생활에는 하루아침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연구 관심은 이러한 생태적 재난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재난'²⁷, 즉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름유출사건이 개인생활, 가족관계, 그리고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에 미친 사회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생계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연구 관심이 집중되었다.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건이라는 단일한 충격에 대해서 사람들의 처해진 조건에 따라 그 충격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충격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조건하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충격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름유출사건의 사회적 영향 조사는 궁극적으로 기름유출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충격을 어떻게 하면, 얼마나 그것을 완화하고,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경제와 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학술적인 연구이지만, 정책적인 함의도 또한 추구되고 있다.

26) 주민들은 약2조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0월말까지 피해대책위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68000여건, 그 가운데 조사가 끝난 것이 46000건(67%), 그리고 IOPC에 신고된 것은 1700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IOPC가 추정한 피해액은 6013억이나, 기금에서 보상할 수 있는 한도는 3천2백16억이다. 정부의 특별법에 의하면 IOPC의 피해사정파 기금, 보험등으로부터의 보상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7) 박재목 보고서

2. 범위와 방법론

이 연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2월 이후 우리 연구팀은 태안 피해지역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면접 조사하였다. 피해의 상황과 그 영향, 주민간의 갈등, 정부나 삼성중공업 등의 활동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고 들을 것을 청취,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는 2008년2월에는 심리보건영향에 대한 통계조사와 병행하여 사회영향조사를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전화 인터뷰조사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사회영향평가조사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 설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이론적인 도구가 사용되었다. R.Burdge와 미국의 NOAA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SIA) 조사의 틀을 응용하였다. 여기에는 26개의 변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변수들 가운데는 기존의 통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사례연구에 적합한 변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통계조사에 얻을 수 있는 변수들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영향조사(SIA)는 대체로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 앞으로 야기될 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혹은 폐기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의 조사는 기름유출사건의 사후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영향평가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 2월의 1차 조사에서는 (1)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연령, 혼인, 종교, 학력, 소득, 취업지위, 산업 등) (2) 피해노출정도 (3) 신뢰(정부, 지자체,기업, 언론, 환경단체, 자원봉사자등) (4) 개인생활, 신체적 변화 (5) 사회경제적 변화 (6) 행복감 (7) 사회단체참가 여부 등을 물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의 2차 조사에서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조사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²⁸⁾.

새로 추가된 조사항목으로 (1) 앞으로 1년 내에 일어날 변화'에 관한 항목(12개), (2)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소재(1개), (3) 보상비처리와 관련된 일처리에 대한 평가(1개), 그리고 (4) 1, 2차 생계비지급, 방제비지급 및 특별취로사업에 대한 만족/불만족 조사항목(4개), 그리고 (5) 취약성변수에 대한 조사항목 15개항목, (6) 가지지향에 대한 조사(8개항목) 등이다.

앞으로 1년 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주계획, 업종변경, 생태계회복, 보상금문제해결, 지역발전, 관광객증가, 인구증가, 정부지원증가, 생활환경

개선 등을 물어 보았다. 사고이후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혹은 생계비지원 및 보상비처리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기름유출사건의 사회적 영향은 사건에 대한 노출정도, 지역, 직업, 소득 등에 의해 크게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토하였다. 피해를 입는 층의 취약성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잠정적인 가설이다. 그 취약성을 구성하는 변수들로서 (1)개인적 속성(직업, 능력 및 기술, 건강, 소득 등) (2) 가족(가족관계, 상호지원) (3) 지역사회(친구, 사회단체, 종교, 자원봉사자) (4) 정부, 은행 등 공적 자원의 가용성 등을 포함시켰다. 취약성변수의 구성과 관련 미나마타병의 사회적 영향을 연구한 Iijima Nobuko의 피해의 사회구조이론, 사회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이론 등이 응용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가치지향을 물어보기 위해 (1) 개인지향 - 공동체 지향 (2) 이기심 - 이타심 (3) 신뢰-불신 (4) 현재지향- 미래지향 (5) 화복- 정의 (6) 정의-부정의 (7) 개발-환경 등의 질문을 통해서 태안지역 주민들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은 어떤 것 인지를 추정해 보았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따라 충남대 심리학과 대학원생이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의 표집방법은 연령, 지역, 성별 등 변수에 따른 할당법을 적용하여 모집단의 인구특성과 부합하도록 하였다. 2월의 조사에는 태안군 7개 읍면에서 464명의 주민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었고, 10월에는 안면도를 포함한 8개 읍면에서 39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도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팀은 2008년 2월부터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피해지역을 다니면서 인터뷰조사를 하였다. 사고 후 2개월 지난 2008년 2월과 4월, 2009년 9월 18-19일, 10월23일, 그리고 2009년 2월11-12일 집중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피해가 심한 의항2리, 파도리, 모항리, 신두리 등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 부녀회장, 종교지도자 등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 직접 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태안읍내에 있는 사회지도층인사, 수협관계자, 언론인, 환경운동가 등을 대상으로 기름유출 사고이후의 사정을 청취하였다.

통계적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서는 면접조사가 매우 유용하였다. 통계적 조사는 개인을 상대로 조사가 실시된 것이지만, 면접 조사는 조직, 촌락, 가족 등 집합체에 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집단적 속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사고이전의 바다 생태계나 생활, 생산 조직에 대해서는 면접조사에서 얻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였다.

28) 1차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시제(2008) 참조바람.

3. 기름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3.1 사고이전의 생활과 생산활동

태안군도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산업의 정체가 꾸준히 지속되었다. 태안군 통계연감(2006년판)에 의하면, 태안군 전체의 인구는 2000년에 68,784명이었지만, 2005년말에는 64,075명으로 4,709명 감소하였다. 태안읍과 관광지와 펜션이 밀집하고 있는 안면읍에는 인구의 증가가 보였으나 다른 농촌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인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에는 12.9%이었지만, 2005년에는 17.1%로 고령사회가 되었다²⁹⁾. 가구당 인원도 동기간동안 평균 2.97인에서 2.57인으로 감소하였다.

태안군 소원면 부면장에 의하면 태안지역의 인구는 ‘한 사람 태어나면 다섯 사람 사망할 정도’로 고령화에 의한 자연감소가 심하였지만, 기름 사고 이후 잠시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생계비지급, 보상과 관련하여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혹은 이 지역 출신으로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전입하여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 실제로 2008년 2월초 생계비 지급 때는 인구가 늘어난 곳이 많았다.

산업면에서도 이 지역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볼 때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사업체수에서나 종사자 수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2000년의 사업체수 4464개소에서 2005년에는 4586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종사자수는 동 기간 동안 14,742명에서 14,477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제조업, 건설업 등 지역의 경기를 이끌만한 산업에서 사업체와 종사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은 크게 증가하여 동기간동안 1284개소에서 1564개소, 종사자는 2893명에서 3420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산업이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과 관련이 있는 숙박, 음식점의 증가가 두드러졌을 뿐이다. 따라서 안면도와 같이 관광산업이 잘 되는 곳에서는 인구도 증가하고 사업체와 종사자도 증가하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침체, 혹은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29) 200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65세이상은 9.2%, 충청남도는 14.2%이다. 65세이상의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이다.

<표 1>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추이

사업체 및 종사자		2000년	2005년	증감(%)
전체산업	사업체	4464	4586	122
	종사자	14742	14477	-265
제조업	사업체	226	230	4
	종사자	784	663	-121
건설업	사업체	103	90	-13
	종사자	1195	475	-720
도소매업	사업체	1518	1259	-259
	종사자	3001	2423	-578
숙박, 음식점	사업체	1248	1564	316
	종사자	2893	3420	527

어업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태안 지역의 평균적인 어업사정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고 이전의 어업사정을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다. 태안지역에서도 의항리, 파도리, 모항리 지역은 주로 어업이 중심이고, 신두리, 안면도 지역은 관광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의항2리에서 면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선어업으로서는 꽃게잡이, 굴양식이 주 업종이었다. 꽃게는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매년 잘 잡히는 것은 아니고, 2002년에 꽃게 풍년이 들고, 5년간 별로 잡히지 않다가, 2007년 사고 전에 또 다시 꽃게가 많이 잡혔다. 의항리의 성직자, 이00씨에 이렇게 증언하였다.

꽃게가 5년 동안 안 나오다가 지난 가을(2007년)에 나왔다. 꽃게 나와서 엄청나게 좋아했다. 돈도 벌었다 밀린 빚을 5천 만원 갚았네, 2천 만원 갚았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집들이 있었다 꽃게가 끝나면서 기름사고가 터졌다.(의항2리)

의항2리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은 펜션도 하고, 굴양식, 어선어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돈을 잘 벌었다고 한다. 꽃게가 나는 계절에는 부부가 웬만하면 하루에 1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 잘 잡힐 때는 하루에 200만원을 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2007년 10월, 11월 두달 매출 액이 7-8천만원이 되었다고 하니, 성직자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굴 양식장에서도 하루 100킬로 정도 수확하여 킬로당 8천원씩 팔았다고 하니 그것만해도 하루에 80만원의 수입은 된다.

이렇게 소득이 많은 주민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굴 양식장에 나가서 굴을 까서 일비를 받고, 혹은 바다에 나가서 미역, 성게, 갯지렁이 등을 잡아 팔았다고 한다. 칠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크게 돈을 잘 번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현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의항2리가 굴양식이 중심이라면, 파도리에는 굴 뿐만아니라, 바지락양식, 미역양식 등 여러 가지 해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태안 지역의 전복은 한류계이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의 난류계 전복과 맛보다 월등히 좋다고 자랑하였다.

의항2리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로생산의 조직체계를 알아 보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촌계의 회원이며, 149가구 중 105가구가 굴양식, 배 사업, 다른 양식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의항2리에는 해삼/전복양식(130ha), 바지락(4006ha, 굴(23ha), 가리비(10ha)의 어장을 공동운영하고 있는 공동어장이다. 공동어장이기는 하지만, 굴양식어장, 바지락, 가리비양식은 개인이 설비를 해서 수산물을 생산하면 그것들은 모두 개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전복/해삼은 공동생산을 한 다음 해녀들을 풀어서 수확하고 해녀들에게 50%을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12월말에 어촌계원들에게 분배한다. 또 이 수익에서 일정 부분 어촌계의 경비로 사용한다. 굴, 바지락, 가리비 등은 입어계약만 하면, 공동어장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만큼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판매액을 차지한다. 이런 전복/해삼에 대해서는 생산량에 대한 기록이 있고, 판매증빙도 남아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없다.

의항2리의 어촌계는 양식설비를 개별적으로 설치하지만, 공동어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중심조직이다. 어촌계활동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동어장과 같은 총유(總有)의 성격이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촌락이 하나의 결집체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항2리는 어촌계가 수산물 생산 활동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행정책임을 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항2리 교회 및 성직자도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한 인사들이 모두 그 교회의 신자들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고 후 기름제거 작업을 위해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의 근거지로서 활용되었다.

지역조직은 그 밖에도 모항리와 같이 부녀회가 있어서 매달 회비(2000원)을 모으고, 해마다 두 번씩 재활용품을 수거한 돈을 기금으로 만들어 불우이웃도 돕고, 경로당에 기름도 넣고, 초등학교에 장학금도 20만원씩 준다고 한다.

2008년 2월에 실시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또 사고 발생 전 가구 총소득(1년 기준)은 평균 3,630만원(중앙값 2,500만원)이었던 것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농촌 소득을 약간 상회하였다. 2008년 10월의 2차 조사에서는 사고 전 일년의 평균소득이 4310만원이었다. 2월 조사와 10월 조사와의 차이는 2차조사에서는 안면도가 포함되었고, 안면도의 소득이 다른 읍면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나타냈기 때문이다³⁰⁾. 또한 그

동안 보상문제 때문에 과거의 소득의 근거를 찾아내거나, 과장하여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득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원북면, 안면읍, 근흥면과 같이 관광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가 가장 컸던 소원면과 이원면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인터뷰한 의항리, 파도리, 모항리가 포함된 소원면의 경우 가구당 연간 소득은 3174만원정도였다.

<표 2> 사고전 일년간 소득(만원)

읍면	2차조사	1차조사	평균
원북면	2971.5	5618.2	4294.9
소원면	3194.8	3145.8	3174.8
근흥면	4111.2	4378.5	4244.9
이원면	2593.4	3027.3	2810.4
고남면	4114.6	2748.3	3431.4
남면	4929.8	3028.6	3979.2
태안읍	3777.4	2814.4	3295.9
안면읍	7623.4		7623.4
평균	4310	3630	

사고전 연평균소득은 직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전체평균이 3630만원이나, 양식장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평균 3808만원, 수산물 채취자들은 3441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4964만원, 그리고 가게, 음식점, 민박집을 하는 사람들은 5461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배나 숙박시설, 가게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 소득도 크다.

사고로 인하여 당장 고향을 떠나거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2차 통계 조사에서는 고향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심층면접에서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2-3년 후에는 고향을 떠날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바다가 살아나서 다시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기 있어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은 바다생태계의 파괴와 실직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인구감소는 장기적인 경향이었다. 자식들이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인구이동의 경향은 이미 2000년 이후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30) 2차조사에서 안면도의 사고전 연평균소득은 7623만원으로 다른 읍면보다 2배이상 이 된다.

3.2. 생태계의 이변

2007년 12월7일 기름 유출 사고 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원유가 해안에 밀려 들었다. 기름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일러'가 터진 것 같은 기름 냄새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다. '검은 바다'가 밀려 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사람들의 전 생활이 바다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정도이었다고 한다. 모항항구, 만리포해수욕장, 천리포, 의항리, 신두리, 학암포 앞바다 등은 기름 범벅이 될 정도로 피해가 심했다. 파도리는 전 해안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니어서 회복이 빨랐다(정00씨). 2008년 2월 조사에서는 어떤 여성은 '항구 안쪽에 바지락이 있는데, 내 생전에는 못 먹을 것 같다'고 절망적인 말을 하였다. 항구 밖에 있는 굴, 미역, 성게가 많이 있는데 아직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기름 피해는 생태계의 이변을 가져왔다. 갈파래가 이상할 정도 많이 증식하였다. 해삼을 잡으니 살집이 얇아졌다고 한다. 프랑크톤, 해조류가 없으니 이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전복이 자랄 수가 없고, 살아 있다 하더라도 전혀 힘이 없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바위에서 떨어진다고 하였다. 기름에 노출된 꽃게도 말라있고, 속이 비어 있었다. 유정만 뜬 근소만 지역도 조개류, 굴 이런 것들이 모두 바짝 말라 버렸다는 것이다(구00증언).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먹이사슬이 끊어져 생물들이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것이다. 큰 물고기들이 잡히기는 하지만 끊어먹으면, 내장을 빼내도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한다(2008년 4월 조사).

10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방제작업으로 바다는 급속하게 회복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2008년 9월부터 바다 생태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해수욕장 개장을 허가하였고, 파도리에서는 갯벌에 나가서 맨손어업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KBS방송특집으로 나왔다. 의항2리에서도 꽃게가 잡히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모두 즐거워하고 있었다(의항2리 목사). 4월에 찾아 갔을 때, 힘이 빠져 있던 의항2리 목사도 기분이 좋은 표정을 지었다. 선박어업은 6월에 이미 조업제계를 하였다. 그러나 가까운 연안의 전복 양식장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2009년 2월 다시 조사차 방문하였을 때, 수협에서는 어획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말하였다. 2008년의 어획은 그 전으로부터 있었던 물고기들이었고 산란기에 기름피해를 입어서 물고기가 더 이상 재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모래바다는 그런대로 기름이 빠져 나갔지만 뽕 바다에는 아직도 기름이 그대로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물고기가 잡히지만 주민들은 잘 먹지 않는다

고 한다. 굴이 이상하게 크게 자라 맛이 있다고 하지만, 오염되어 있을 것 같아서 잘 먹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³¹⁾. 일부 지역에서는 9월에 잡은 꽃게를 먹고 배탈이 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배탈이 반드시 꽃게의 오염 때문만 아니라 는 주장도 있다. 갑자기 꽃게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것이다.

지역별 피해노출에도 차이가 있다. 고남면, 이원면은 고평해지역, 소원면, 근흥면, 남면, 안면읍은 중피해지역, 원북면, 태안읍은 저피해 지역이다. 피해지역의 분포는 2008년 2월조사, 10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주민들은 생태계의 회복에 대해서도 양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해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피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어야 썬선이나 음식점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다가 깨끗해 졌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방제작업을 계속해야만 방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 제거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3.3 경제적 영향

기름유출 사고는 바다에 의존해 살아왔던 어민들, 숙박, 음식점들 모두가 큰 손해를 보았다. 매일 매일 바닷가에 가서 굴을 따거나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농민에게 토지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다. 바다 생태계가 죽으니 모든 소득원이 불시에 사라진 것이다. 바다에 나가지만 하면 먹고 살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큰 어선을 가진 사람들은 손해도 크지만, 좀 먼 바다에 가서 조업을 할 수도 있다. 농사도 없고, 배도 없고, 맨손어업에 의존해 온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다. 농사라도 짓는 사람이라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더라도 살아갈 방법이 있겠지만, 태안군 해안 지역은 모두 농토가 적고, 부분적으로 반농반어를 하고 있는 집도 있지만, 바다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2008년 2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59.4%가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맨손어업 피해를 입었으며, 양식업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31.4%, 그리고 어선어업의 피해자가 17.2%, 그리고 숙박음식업 피해가 24.2%이다(복수응답). 이 지역에서는 어선을 가진 사람이 썬선도 갖고 있고, 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굴양식을 하는 방식으로

31) 한 언론사 기자에 의하면, 기름의 피해를 입은 굴양식장의 경우, 기름 범벅이 되어 설비자재를 제거해야하는 의항2리의 경우도 있고, 설비를 그대로 두고 기름을 제거한 곳도 있으며, 또한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굴을 그대로 방치한 곳도 있다고 한다. 그대로 방치한 굴이 크게 자라 그것을 따서 먹고, 혹은 판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겸업경영이 상당히 많다.

조사지역에는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고 하는 대답도 약 10%(2차조사 8.5%)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이든 피해를 입고 있었다. 어업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50%이상이고, 방제작업에 참가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50%이상이다. 노출 정도와 관련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는 안면읍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3> 피해노출(% , 복수응답)

피해노출	2월 조사(%)	10월 조사(%)
1. 어업 및 관광업 종사	56.7	50.5
2. 방제작업 참가	81.7	84.4
3. 재산상의 피해	53.9	52.1
4. 양식장 피해	31.9	31.4
5. 어업 피해	19.2	17.2
6. 채취업 피해	57.5	59.4
7. 가게, 식당, 숙박업 피해	24.5	24.2

이 조사에서는 중요한 독립변수로 노출정도를 (1) 무노출(0점) (2) 낮은 노출(1-3 점) (3) 높은 노출(4-7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이 문항은 직업상의 범주로도 사용되었다. 즉 양식(4번), 어선어업(5번), 맨손어업(6번), 음식숙박업(7번)으로 분류되었으며, 한 가정에 두 가지 이상(식당과 어업, 양식장노동과 채취업 등)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총량은 조사 대상자 수를 넘어선다³²⁾.

이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재분류하였더니 (1) 고평해지역(고남면, 이원면) (2) 중피해지역(소원면, 근흥면, 남면, 안면읍) (3) 저피해지역(원북면, 태안읍)으로 나누어졌다. 이 분류는 정부에서 정한 등급(1-4급지)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³³⁾.

32) 조사에서는 산업별 분류에 따른 조사도 실시하였지만, 농림어업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어서 이 문항에서 피해노출을 응용하여 주요 직업을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3)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역을 4개의 급지로 나누어 소원면, 원북면을 1급지, 이원면 근흥면을 2급지, 고남면, 남면을 3급지, 태안읍을 4급지로 구분하였다.

<표 4> 지역 및 업종피해(단위는 '그렇다' 대답한 사람들의 평균값)

수준	지역	양식피해	수산물채취피해	고기잡이피해	음식숙박업,가게피해
고피해지역	고남면	0.45	0.82	0.23	0.45
	이원면	0.71	0.89	0.23	0.16
중피해지역	소원면	0.41	0.79	0.23	0.26
	근흥면	0.34	0.78	0.34	0.12
	남면	0.45	0.70	0.25	0.30
	안면읍	0.29	0.53	0.13	0.47
저피해지역	원북면	0.09	0.53	0.13	0.16
	태안읍	0.10	0.25	0.06	0.17

각 지역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식피해는 이원면, 고남면, 남면에서 심하게 나타났고, 수산물채취피해는 고남면, 이원면, 소원면, 근흥면, 남면에서, 그리고 고기잡이 피해는 근흥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었으며, 음식숙박업에서는 안면읍, 고남면에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고 후 생활이 막막하다고 한다. 바다에서 얻는 소득이 없어지고, 2008년 2월에 1차생계비가 가구마다 300-500만원(평균 470만원) 정도 지급되었지만, 금방 소진되었다. 대학에 두 아들을 보내는 어떤 이장은 이 돈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그 후 또 한 차례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방제비도 2차례 지급되었지만, 생활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다. 어떤 여성들은 바닷 일이 없어져, 횃집에 나가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건설현장에 가서 일하였다. 몇 개월 동안 아무 수입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언제 수입이 회복될 것인가 전망이 서지 않는 가운데 정말 살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생태계의 회복은 기름 오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파도리 부근에서는 2008년 가을부터 맨손어업이 시작되었으나, 의항2리에서는 아직 맨손어업이 어렵다. 생태계의 회복과정에서 경제적 영향에 있어서 업종별 차이가 있다. 어선어업의 경우, 연근해에서의 조업은 2008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꽃게잡이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식업은 아직 복원되지 못하였고, 맨손어업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음식숙박업은 여전히 상당히 어렵다. 해수욕장은 작년에 개장하였지만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었다. 관광객에 의존해온 소매업의 경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해산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지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름유출 사고에 의해 오염될 수 없는 농산물까지도 일시 잘 팔리지 않았다. 호박고구마와 육쪽 마을이 지역 특산물이다. 농가에서 생산한 고구마를 시장에 내 놓

있더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증언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가 있었다. 원북면에서 고 구마를 싣고 시장에 갔더니 태안에서 왔다고 하니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도로 싣고 내려왔다고 의항리 이장이 말하였다.

태안 시장의 야채가게를 모니터링하였다. 2008년 2월에 갔을 때, 판매량은 사고 전의 1/5정도이었다고 한다. 하루에 10만원-15만원 정도 판다고 한다. 이 가게는 주민들도 사서 먹지만, 음식점에서 많이 사간다고 한다. 주민들도 생활이 어려우니 야채구매를 하지 않고, 식당이 모두 파리 날릴 정도이니, 많은 것을 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야채가게는 그 후 2008년 9월에도 다시 물어 보았다. 매상은 조금 올랐지만, 주인아주머니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다고 생각되었다. 바다가 회복되었다는 소식, 해수욕장이 개장되었다는 소식에 다소 고무된 것 같았다.

신두리의 펜션, 음식점도 2008년 9월에 찾아 갔을 때 개점 휴업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손님들이 전혀 찾아 들지 않고 있었다. 여름 방학동안 삼성에서 직원들을 파견하여 일부의 펜션이나 음식점은 손님을 받았지만, 그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았다. 펜션의 불황으로 펜션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사람들, 시공사업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게 되었다. 펜션업자들 가운데는 대체로 상당한 수입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건축을 하였다. 그러나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니 이자와 원금을 갚을 길이 없다고 한다. 어떤 펜션은 2007년 가을에 오픈하여, 곧 바로 기름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처음부터 적자 경영을 해 오고 있다고 한다. 펜션업자들의 파산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2008년 2월경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얻을 수 있었다.

관광객의 감소로 낚시어선도 조업을 하지 못하였다. 숙박업의 경우 2008년 여름에는 이전의 30%까지 회복하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널리 홍보하였음에도 해수욕장 이용객은 이전의 10%에 머물렀다고 한다. 펜션은 그런대로 삼성사람들이 다수 이용하였지만, 민박집은 손님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어떤 새마을 지도자는 헛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수산물 공급처에서 계약제라 매달 50킬로씩 가져온다고 한다. 그 50킬로, 즉 80-90만원어치를, 손님이 없으니 주인들이 끓여 먹어야 한다고 한다. 한 달에 물고기 값만 120-130만원 적자가 난다는 것이다. 일요일에는 가끔 손님이 찾아 들지만 매상은 10-20만원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한다.

의항2리 이장의 증언에 의하면 그곳의 땅값 매우 높았으나 사고 후 급락하였다고 한다. 평당 200-300만원하던 땅값이 100만원도 되지 않고, 50만원도 안되는 곳도 많다고 한다. 소원면에는 평당 700만원하던 땅이 이제는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한탄하였다. 바다 생태계만 파괴된 것이 아니다. 지역의 경제가 그로 인하여 붕괴되고 있었다.

3.4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사회도 크게 변하였다. 사고 이전 의항리와 같이 생업이 비슷하고 소득도 큰 차이가 없는 곳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단결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기름유출사고가 터지고 사람들이 심리가 불안정한 가운데 생계비 지급을 둘러싸고 큰 갈등이 있었다. 사고이전에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항2리에는 김씨, 이씨, 문씨 등 문종이 사는데 오랫동안 대체로 평화롭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선어업이 많은 모항이나 농업, 양식업, 어선어업 등이 혼재하고 있는 파도리의 경우는 상당히 이질적인 마을이었기에 통합이 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생업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리고 서로 대립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이후와 비교해 보면 사고이전의 마을은 비교적 화목하고 통합이 잘되어 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있었다.

사건초기에는 지역의 어떤 사회조직도 작동하지 않았다. 행정도 어디에 손을 쓸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들어오자, 그 때부터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담당자와 언론인간의 시각차이가 있다. 1월 중순 자살 사건과 장례식을 계기로 지역의 투쟁조직이 생겨났다. 1월말의 상경투쟁이 그 정점을 이루었다. 각 마을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업종별 대책위(수산, 비수산 등), 면단위의 광역 대책위가 구성되었다. 지역조직으로 출범한 대책위에는 지역시민단체(참여자치연대, 환경연합) 과 언론도 논의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2008년 2월초 구정 전에 제공된 생계비지급을 계기로 지역사회 분열이 시작되었다. 생계비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군, 면, 마을 내에서 일어났다.

2008년 2월초 정부에서 지지부진하였던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어, 그 지급방법을 둘러싸고 마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의항리와 같은 곳에서는 생업이 비슷하여 모두 균등분배(세대당 480만원씩) 분배하였다. 그러나 모항리에서는 농사짓는 사람들과 배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두고 생계비를 차등 분배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모항리 이장은 한국전쟁 때도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용하게 살던 사람들이 서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지도자는 '정서적 피해를 가장 우려하였다. 특별히 수입이 없으니 가까운 이웃, 친구, 형제간에도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 지역 언론인, 지역이장들, 운동가들 모두가 물질적인 곤란 이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악화를 큰 문제로 보고 있었다.

의항2리에는 생계비를 균등분배하였지만, 자격미달이라고 생각되는 29가구가 제외되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간에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이장은 '나는 마을에

서 평생 원수졌다'고 한탄하였다. 마을 사람들끼리 물어뜯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너무 괴로워 자신해서 사표를 낸 이장도 있다.

2008년 주민대책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군의장이 대표로 취임하고, 군예산으로 운영, 사업비를 지급하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전체의 대책위가 잘 운영되지 못하였다. 수협을 비롯한 수산계 대책위가 탈퇴하여 비수산업(숙박업, 음식점, 소매상 등)으로만 남아 있다. 지역주민조직의 결성에 있어서 로펌, 손해사정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였다. 2차생계비지급, 방제작업, 특별취로사업, 보상비사정 등 지역사회를 갈래갈래로 분열시킬 사건들이 계속되었다. 삼성중공업은 가해자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깊이 개입하였다. 자원봉사자의 파견(가장 먼저 나타난 집단이었다!), 하계절에는 직원들을 풀어 태안지역에서의 집단 휴가 실시, 물품공급, 그리고 마을과의 자매 결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을 유발하였다. 삼성은 언론인 대책, 지역지도자 대책, 그리고 마을 대책을 통해서 삼성의 이익을 지켜 나갔다.

방제활동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차이를 두어, 여성들의 불만이 많았다. 방제비 지급에 있어서 남성들은 1일 7만원, 여성들은 1일 6만원 지급하였다. 여성들이 보기에는 남성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일당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일년 간의 변화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조직이 주민들의 운동을 지도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관련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지킴으로써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지역지도자의 변화, 조직의 변화를 차단하였다.

<표 4> 지역사회의 변동(%)

	10월조사	2월조사
1. 인구유출	19.1	
2. 인구유입	16.3	
3. 농산물 판매감소	66.1	97.8
4. 수산물 판매감소	83.8	
5. 관광객 감소	87.9	99.1
6.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	16.2	
7. 주민협력증진	31.4	21.3
8. 생활시설(병원, 전기, 수도 등) 개선	16.1	
9. 새 지도자의 출현	21.3	
10. 새로운 사회조직의 출현	25.1	
11. 정부지원의 증가	27.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인구의 유출 혹은 유입이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나 아직 그 영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구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하여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막연한 질문이지만, 장래 이 지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92%나 된다.

수산물의 판매가 줄어든 것은 바다 생태계의 파괴로 당연한 것이지만, 농산물조차도 판매가 급격히 줄었다. 관광객이 줄어들어 숙박음식점에서 그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름유출사고 이후 지역 '풍평'(風評)에 의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인터뷰해 보면, 기름사고 이후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다고 한다. 특히 지난 2월 1차생계비 지급이후 생계비지급을 둘러싼 지역 간,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 실제로 주민대책위가 상당 부분 와해되거나 약화되었다.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대목도 결국 기름유출사고 이후의 지역사회의 붕괴라고 진단하고 있다³⁴⁾. 인구의 유출입, 새로운 일자리 출현, 새로운 지도자나 조직의 등장, 그리고 정부의 지원은 아직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의 변화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갈등의 중심에 가해자 삼성중공업 측의 행동이 있다. 삼성중공업은 기름유출사고의 중요한 원인제공자이며,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회사원들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에 '자원봉사자'로서 투입하였다. 삼성직원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거 자원봉사자로서 방제작업에 임하였다. 여름에는 삼성측 직원들을 태안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하고 음식점, 펜션 등의 영업에 이익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거 구매하여 태안주민들의 민심을 돌려 보려고 시도하였다. 또 피해주민들, 환경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삼성중공업은 서해안 발전 기금으로 1천억 원을 내놓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측은 스스로 가해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태안주민들에게 사죄하지 않았다. 삼성측은 오히려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재판을 통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한편 사고 직후 중앙언론사 기자들이 태안의 모텔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삼성측이 이들을 위해 밥값, 술값을 지불했다는 소문도 퍼졌다.

주민들은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진짜 가해자로서의 사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소송 때 조건을 좋게 하여 좋

34) 파도리의 지도자는 과거에도 지역사회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금처럼 지역갈등이 심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또 태안의 지역 언론 관계자도 앞으로 지역 분열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였다.

은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2008년 여름부터 마을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였다. 의항리1리, 의항2리, 의항3리는 모두 삼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자매결연식을 거행하고, 마을 회관에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였다. 다른 마을과도 자매결연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자매결연을 맺은 동네에서는 찬반이 갈려 마을 분열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다. 대체로 젊은 층에서는 자매결연을 반대하였고, 연로한 지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주민들은 기름사고로 황금바다를 빼앗겼으니 삼성측에서 사과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이다. 더욱이 정부는 삼성을 감싸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삼성이 음모하여 생계비를 마을 단위로 분배하여 '민민갈등'을 조장하였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삼성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한 쪽에서는 바다의 생태계가 상당 기간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니 삼성에서 이곳에 공장이라도 지어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삼성중공업 식당에 납품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삼성측과 지금 접촉중이라고 말하였다.

3.5 개인 및 가족생활의 변화

기름유출사고로 바다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웃들과 비교해도 더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대적 빈곤이 크다는 것이다.

<표 5> 가족생활의 변동(%)

	2차조사	1차조사
1. 가족원의 감소	6.1	
2. 가족원의 증가	3.0	
3. 가족 소득 감소	71.7	78.3
4. 신규 실직자 발생	13.5	47.7
5. 신규취업	6.1	
6. 이웃에 비해 더 어렵다	47.1	43.5
7. 친척으로부터의 지원	24.6	
8. 친구들로부터의 지원	12.9	
9. 자원봉사자로부터의 지원	30.1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 가족원의 감소나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소득의 감소는 여전히 높고, 신규실직자는 2월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2월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실직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친척, 친구들로부터 지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지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은 6월 이후 활동하기 않았지만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

가족소득의 감소를 더 분석해 보면, 음식숙박업의 경우 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기잡이(80.6)이며, 각각 맨손어업은 51.8%, 양식업은 35%이다. 기름유출사고가 개인의 정신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다. 통계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나, 생활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두통 등으로 약물복용이 증가하였고, 또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신두리의 음식점 주인은 두통과 불면증 때문에 두통약을 하루에 2알씩 복용하고 있으며, 그 양이 점차 늘어났다고 한다. 방제 작업시에는 유증을 들여마시고, 또 기름에 노출되어 기관지와 피부의 이상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걸리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가슴앓이, 두통,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역학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어떤 마을 지도자는 사고 후 태안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고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험뜯고, 아무 것도 아닌 이리에 분노하고, 이상 성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항리 성직자에 의하면, 농약먹고 자살한 사건이 의항2리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심리나 건강에 대해서는 김교현연구(김교현, 2008)에서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개인 신상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현상 중 몇 가지 변수만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사고 이후 생업이 바뀌었으나 당연히 생활의 리듬이 깨졌다고 볼 수 있다.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서 방제작업을 하고, 농사일도 하지만 원래 하던 바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방제작업을 하는 동안 건강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인터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끊임없는 두통으로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지난 2월 이후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그래서 2차 조사에서는 건강이 나빠졌다는 사람들이 63%나 되었다.

<표 6> 개인신상의 변화

	2차조사	1차조사
1. 사고이후 생활이 불규칙적으로 변함	63.8	59.1
2. 건강상태가 나빠졌다.	63.0	
3. 잠을 잘 자지 못한다	68.9	59.1
4. 약복용이 늘어났다	69.1	45.8
5.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82.3	22.1
6.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	16.2	90.6
7. 건강문제에 중요성에 대해 관심	28.6	75.7
8. 여가활동이 줄어들었다.	57.2	

이러한 변화를 생업과 연관시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불규칙 생활이라는 면에서는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하고, 고기잡이나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어선어업의 경우 비교적 일찍 조업재개가 되어 불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 날 수가 있었을 것이며, 음식숙박업의 경우 바다생태계의 파괴와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표 7> 신상변화와 생업

	양식업	고기잡이	맨손어업	음식숙박
1. 불규칙한 생활	56.6	47.8	62.3	48.9
2. 건강악화	65.6	58.2	58.4	57.4
3. 불면	63.1	61.2	63.6	66.7
4. 약복용	66.4	58.2	61.0	62.8
5. 음주증가	80.3	76.1	81.0	76.6
6. 환경관심증가	14.8	17.9	16.9	13.8
7. 건강관심증가	29.5	22.4	25.4	26.6
8. 여가감소	50.8	56.7	52.4	46.8

건강악화와 약복용은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드러졌으며, 불면증은 숙박업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기름사고는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바다에서 어로작업이나 맨손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방제작업을 하였고, 특별취로사업에 참가하여, 쓰레기 줍고, 마을 미화작업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소득이 어느 정도 생기는 일이

기는 하지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에서 얻는 보람은 없다고 생각된다.

두 차례의 조사에서 신상변화에 변화가 보였다. 1차 조사에서는 불규칙적인 생활, 약물복용증가, 수면장애, 음주량증가 등에서 노출의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노출이 심할수록 불규칙적인 생활이 심하고, 약물복용, 음주의 양이 늘어났으며 수면장애도 그 만큼 더 심각하였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기름유출사고의 신체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 만큼 확산되어 노출의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활의 불안정, 건강, 수면, 약물복용, 음주량에 있어서 더욱 좋지 않는 방향으로 증폭되었다.

<표 8> 신상변화와 노출정도(1차조사)

	무노출	저노출	고노출	합
불규칙한 생활	18.6	49.7	73.9	59.0
수면장애	37.6	44.6	75.2	59.1
약물복용증가	15.2	33.5	61.1	45.9
음주량증가	0	22.6	26.1	22.1

주민들의 불안 요인들은 여러 가지이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언제 보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끊임없다. 맨손어업에서 잠은 조개나 물고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데 그 증빙자료가 없다. 분명히 맨손어업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역사가 있었지만 누구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박탈감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이 불면, 두통, 가슴앓이의 원인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생태계가 언제 회복되어 원래와 같은 생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그때는 과거와같은 소득이 보장되는 것인지, 불안은 끊임이 없다. 소득 증빙 자료를 올렸지만 모두 되돌아 왔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맨손어업이라 영수증도 없고...’라는 말 속에 숨겨진 고민, 박탈감, 소외의식이 진하게 묻어 있다. 시화호피해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피해보상은 아무리 잘 해주어도 당사자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준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으로 판 기록이 있어야 한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피해를 호소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또 상품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예컨대 주민들은 바다에서 생산한 조개가 굴을 팔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먹을 파래나, 김, 미역, 조개 등 다양한 수산물을 채취해서 먹고 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누구도 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생활 그 자체가 생산의 증명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민들은 어디에 가면 꽃게가 나고, 어디에 가면 우럭이 나는지를 알고 있다. 또 그것을 잘 잡는 방법도 알고 있다. 그런데 사고 후 그러한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과 불만이 두통, 불면, 불안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로 나누고 도와주면 그 고통은 경감된다. 그러나 마을이 분열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마당에 경제적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가 어렵다. 친척이나 형제들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4. 책임과 신뢰

1차 조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았다. 중앙정부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20%이었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24.7%에 지나지 않았다. 순위로서는 자원봉사자, 이웃주민, 환경단체, 대책위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5위를 차지하였고, 중앙정부는 7위에 머물렀다. 오직 해양경찰청(8위)이나 삼성중공업(9위)에 앞설 뿐이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기름 유출 사고 처리에 대해서 누구의 일처리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24.7%로서 가장 높다. 뒤이어 환경단체 16.3%, 지방자치단체가 14.8%, 대책위가 8.9%이다. 또한 보상비처리와 관련하여 누구의 일처리가 잘하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가 19.2%로 가장 높고, 뒤이어 지방자치단체 17.1%, 대책위 14.6%이다. 2월초에 생계비 지급과 관련하여 불만이 많았지만, 그 후 2차 생계비지급, 방제비지급 등에서 정부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부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특히 심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와 조사, 면접하여 갔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자들을 의심하고 있다. . 조사가 주민들에게 과연 도움을 주는 것인지,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도 통계조사에서는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자원봉사자가 물러오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한다. 어떤 촌락에서는 동네 사람들의 방제활동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입존을 제한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한 종교기관에 대해서도 좋지 않는 시선을 보냈다고 한다. 방제활동은 결국 생계별비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책임문제는 아직 재판에서 다툼이 끝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그 절대적인 다수가 삼성중공업(61.2%)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16.7%이지만, 삼성중공업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어 중앙정부(6.5%), 해경(3.4%), 지자체(1.8%)의 순서이다³⁵⁾.

2008년2월의 생계비 지급이후 각 동네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어촌계장 등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소원면 부면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사고 후 얼마동안은 어촌계장, 이장 임기가 끝나면 (다음 선거에서는) 무조건 떨어져요. 일을 맡기고 불신만 맺혔으니까... 그제 참 무섭더라고요.. 딱 나타나더라고...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선거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이장이나 어촌계장 나오면...' 이러한 불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동네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바뀌었다.

삼성중공업의 책임에 대해서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노출집단에 따라, 고노출의 경우 68.7%로서 저노출(56.5%), 무노출(42.4)보다 높다. 또한 양식업의 경우 71.9%로 가장 높고, 맨손어업(67.4), 어선어업(64.1), 그리고 음식 숙박업의 경우 52.8%로서 가장 낮다.

한편 고남면, 이원면 등 고피해지역에서는 76%가 삼성중공업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태안읍, 원북면 등 저피해지역에서는 56.6%, 나머지 중간 피해지역에서는 58.6%가 삼성중공업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정부가 절대적으로 아직 신뢰를 많지 얻지 못하고 있지만, 2월의 1차 조사에 비해서 상당히 신뢰를 회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가장 책임있다고 생각하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가장 신뢰가 낮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삼성은 방제작업 시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를 보내고 여름에는 직원들을 대거 이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신뢰나 책임의 문제에서는 아직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삼성측에서 7개의 지역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사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월의 생계비 지원은 지역민들의 불만, 지역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지역간에도 생계비 배정을 놓고 갈등이 있었으며, 마을단위로 내려온 생계비의 분배가 어떤 지역에서는 균등분배, 또 다른 지역에서는 피해의 정도에 따른 차등분배를 하였다. 균등분배를 한 곳에서는 불만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수용하는 태

35) 삼성중공업은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4월24일 서울중앙지법 1부에서는 삼성측의 책임한도를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다. 삼성중공업은 즉각 이 금액을 공탁하였다. 또한 삼성은 50억원의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삼성측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IOPC Fund)가 산정한 피해액(5663-6013억원)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주의 배상책임한도액은 1425억원이다.

도이었다. 그러나 전문적인 피해사정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차등지급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표 9> 생계비, 방제비, 특별취로사업 관련 불만

	만족	불만	대상이 아님
1. 1차생계비지급	17.9	62.8	19.2
2. 2차생계비지급	15.7	52.7	31.6
3. 2차 방제비지급	17.5	35.8	46.7
4. 특별취로사업(공공근로)	10.6	21.3	68.1

그러나 대상자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1차생계비 지급에 대해서는 77.8%가 불만이며, 2차생계비지급에 있어서도 77%가 불만, 그리고 2차방제비 지급에 대해서도 67%가 불만을 표시하였다. 1차생계비 지급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2차 생계비 지급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또한 방제비 지급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방제비의 차이(남자 1일 7만원, 여자6만원)에 일한 만큼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인터뷰과정에서 확인되었다.

5. 차별적 피해와 차별적 대응능력과 상대적 불행감

사람들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족의 도움, 지역사회 도움, 아니면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조사한 것이 취약성 조사이다. 취약성 변수는 표 10과 같이 구성하였다. 취약성/방어능력변수는 동원가능한 개인적인 능력, 가족 자원, 공동체 자원, 공적 자원 등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인 자원의 보유는 63%가 그런 자원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가족 자원에 대해서는 53%, 공동체적인 자원에 대해서는 79%, 그리고 정부나 은행 등 공적 자원의 동원에 대해서 가용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58%로 나타났다. 가족 자원이 상대적으로 개인능력이나 공동체적인 자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10> 개인능력, 가족자원, 공동체자원, 공적 자원

	변수	%
개인능력	1. 자기직업에 대한 자부심	46.1
	2. 직업과 관련된 기술, 능력, 지식, 정보 보유	61.8
	3. 건강에 대한 자신감	64.6
	4. 직업전환에 대한 자신감	60.8
	5. 이주에 대한 자신감	81.8
가족자원	6. 재산의 보유	74.9
	7. 가족화목, 단결	28.9
	8. 도움을 받을 가족 친척의 존재	56.5
공동체자원	9. 도움을 받을 친구, 동창, 동향인의 존재	73.9
	1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	84.8
	11.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	79.4
	1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 단체	72.9
	13. 동네사람들과가 금전 빌려주고 빌려받기	71.3
공적자원	14. 정부의 지원	89.3
	15. 수협, 농협 등 금융기관	37.3

* '그렇다'고 대답한 답변.

취약성 변수들의 조사는 '그렇다', '아니다'의 이분법적인 질문으로서, 대체적인 경향을 보기 위한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자기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생각보다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반 이상이 자기직업에 대해 자부심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46.1%). 다른 지방으로의 이주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심층면접 조사에서 기름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사람이 75%나 되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 점은 생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의 화목, 그리고 단결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28.9%). 공동체적인 자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이용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 그리고 수협, 농협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그렇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밝혀졌다. 수협, 농협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존하는 바가 크지만, 이미 많은 돈을 빌리고 있고, 사고 갚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 따라서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상의 취약성 변수와 생업을 교차하여 얻은 것이 다음 표11이다. 생업에 따른 취약성 변수가 큰 차이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몇 가지 특징을 읽어 낼 수 있다. '사고이전의 나의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수산물 채취업을 하는 사람들과 숙박, 음식,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양식업이나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 수산업(양식업, 고기잡이, 수산물

채취)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숙박, 음식,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기름피해를 당해서 소득이 없더라도 얼마동안 살아 갈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전체적으로 74.9%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 가운데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과 숙박, 음식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선이나 숙박시설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재산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 진다.

<표 12> 피해유형에 따른 취약성변수

변수	양식업피해	고기잡이피해	수산물채취피해	숙박,음식,가게 피해
1. 직업에 대한 자부심	39	31	43	46
2. 직업관련 기술, 능력, 지식, 정보	62	57	61	61
3. 건강에 대한 자신감	70	69	69	60
4. 재산	77	85	76	80
5. 직업이동에 대한 자신감	64	64	61	56
6. 이주기회에 대한 자신감	85	82	84	84
7. 가족화목 단결	26	20	27	22
8. 가족친척의 도움	58	54	58	67
9. 친구, 동창, 동향인의 도움	75	69	76	79
10.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	85	88	88	88
11.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도움	72	74	76	86
12. 동네단체의 도움	65	69	69	83
13. 정부지원	87	91	88	91
14. 동네사람끼리 돈융통	60	64	63	74
15. 금융기관이용	32	33	35	35

사고에 의한 충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행복감을 조사하였다. 사고이전의 행복과 사고이후의 행복감을 10점 척도로 물어 보았다. 사고 이전의 행복감은 7.40, 사고이후의 행복감은 5.87로, 사고로 인해 행복감이 1.53 줄어들었다.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불행감이 증가하였다. 이것을 주관적인 충격의 정도로 파악하여, 어떤 요인이 이러한 불행감에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였다. 이 불행감과 취약성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니, 건강(0.131), 가족화목 단결(0.144), 가족친척의 도움(0.142), 친구, 동창, 동향인의 도움(0.145), 그리고 종교단체로부터의 도움(0.104)만이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능력, 가족자원, 공동체자원, 공적자원 등 집합적 속성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오직 가족자원(0.153)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대적 불행감 노출정도나 생업의 차이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양

식업, 어선어업, 수산물 채취의 경우에는 이 상대적 불행감과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가게, 음식점 숙박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경향은 노출집단에 따라서도 상대적 불행감의 차이가 있다. 무노출집단에서는 상대적 불행감의 평균점이 0.64이나, 낮은 수준의 노출집단에서는 1.37, 그리고 높은 수준의 노출집단에서는 1.86으로 나타나, 노출정도가 심할수록 불행감의 정도도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저항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빚도 많고, 교육비, 생활비 등 출비도 그 만큼 많기 때문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동원가능한 자원은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렵다. 통계조사에서는 공동체적인 자원이 높은 점수를 얻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행복/불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2-3년간의 장기적인 조사, 추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6. 미래전망과 가치지향

6.1 생태회복의 희망과 미래전망

생태계의 회복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통계조사에서는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생태계의 회복 전망에 대해 더 비관적이었다. 여기에도 딜레마가 있다. 생태계가 회복되었다고 선언해야 관광객도 몰려오고, 수산물도 출하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2008년 가을부터 꽃게가 잡히기 시작하여 생태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마을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한다. 선박업은 2008년 6월에 조업재개를 하였다. 그러나 양식업, 맨손어업은 여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빨바다는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소원면 부면장은 2009년 2월 현재 어로 및 숙박업이 약 16% 회복되었다고 추산하였다. 아무래도 2-3년지나야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의항2리의 성직자는 ‘바다를 살려서 먹고 살아야 한다.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쉬운 것 같고, 그 방법이 옳은 것 같다’고 생태계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문인 정00

씨도 마찬가지이었다.

나는 태안의 완전한 환경복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군이나 정부에서 태안 경제 살리기 위해서 사주자,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태안에 요새 이런 생선이 좋으니 가서 먹자, 머릿속에서 기쁨하고는 전혀 성립되지 않을 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2007년 12월 7일 이전 숫자로 (관광객이)왔다고 한다면, 자연생태계는 어느 정도 갯벌이든지 갯바위든지, 자연이 스스로 복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 안되는 부분은 자연에게 맡기고, 비로소 완전한 생태자연복원은 인위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2007년 12월 7일 이전으로 관광객이 온다든지 수산물을 갖고 가고, 이것이 태안인 거예요. 기름 생각 없이, 태안에 광어가 좋아, 주꾸미가 좋아 할 때 그게 비로소 복원된다고 보죠. 결국은 사람은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비층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니까. 채소 하나를 사도 자기 건강, 먹고사는 문제인데.

한편 바다를 살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해서 공장 유치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의항2리 이장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실제로 태안군의 관광객의 태반은 안면도로 가고 있다. 안면도는 교통도 편리하고 시설이 좋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관광객을 유치해 준다고 하는데, 모두 안면도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주민들에게 물어 보았다. 주민들은 지금까지의 변화보다도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92%나 된다. 실제로 이 만큼 이주를 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1차 조사에서는 이것이 17%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생각이라는 사람들도 86%나 된다. 바다생태계의 회복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바다생태계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45.8%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의 장래에 대해서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보상금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79%, 관광객이 1년 내에 많이 찾아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70%, 인구도 늘어나고, 생활환경, 의료시설, 교육시설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정부의 지원도 늘어나고, 이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12> 변화전망

항목	%
1. 이주계획	91.9
2. 새 일을 시작	86.3
3. 바다생태계 곧 회복 될 것	45.9
4. 보상문제 잘 해결될 것	78.8
5. 지역발전	75.9
6. 관광객 많이 찾아 올 것이다	69.8
7. 인구증가	86.8
8. 정부지원증가	85.5
9. 생활환경개선	81.0
10. 의료시설개선	82.7
11. 교육시설 개선	86.8
12. 특별히 아무런 변화 없을 것이다.	40.1

6.2. 태안 사람들의 가치지향

태안 지역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추구하고 있을까? 이상의 조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태계의 회복이 태안의 미래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바다 생태계와 농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이 지역의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장이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의항리와 같은 곳에는 신두리와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고, 주변 도로를 포장하여, 관광객들이 잘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주장의 배경에 어떤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가치지향과 발전 방향을 조사해 보았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바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³⁶⁾. 따라서 태안 사람들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현실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래 표13-1은 조사대상자에게 개인지향인지, 사회(공동체, 지역사회) 지향인지에

36) 가치(value)은 바라는 것(the desirable)이다. 가치는 아직 갖고 있지 않지만 이상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지향은 현실에 대한 반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현실이 그렇지 못하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가치지향을 갖는 것이다.

대한 물음과, 사고 이후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는지에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교차시킨 것이다. 태안 사람들은 개인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사회(지역사회, 마을, 국가)가 잘되어 야 한다고 믿고 있는 비율이 79.2%이다. 반면 개인 지향은 20.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사람들은 타인들은 62.7%가 이기적이며,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37.3%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은 가치지향으로서 사회지향을,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이 지배적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부당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3-1> 공동체지향과 이기지향의 모순

	사회지향	개인지향	전체
이기지향	49.0	13.7	62.7
이타지향	30.2	7.1	37.3
전체	79.2	20.8	100

또한 사회지향과 개인지향을 현재의 행복의 추구하고 미래의 행복의 추구과 교차한 것이 다음 표13-2 이다. 태안 사람들은 다수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58.8%).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다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비록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의 행복 보다는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3-2> 공동체지향과 미래행복추구

	사회지향	개인지향	전체
현재행복추구	31.0	10.2	41.3
미래행복추구	48.1	10.7	58.8
전체	79.2	20.8	100

한편 환경보전에 대해서도 지역의 일반주민들은 경제발전이 다수 희생되더라도 생태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64.7). 이러한 경향은 공동체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표 13-3> 환경보전과 공동체지향

	사회지향	개인지향	전체
개발	27.2	8.1	35.3
환경보전	51.9	12.7	64.7
전체	79.1	20.9	100

또한 사고 이후 이웃 간 관계가 나빠지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따지고 정의를 외치는 것 보다 화목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도 당연히 공동체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13-4> 화목한 공동체의 지향

	사회지향	개인지향	전체
정의지향	18.3	6.1	24.4
화목지향	60.8	14.8	75.6
전체	79.1	20.9	100

태안 지역 사람들은 가치지향을 요약하면, 사람들 개개인으로는 현실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지만, 가치지향으로서는 개인지향보다는 사회(공동체) 지향이 강하고,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경보전의 가치를 개발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잘잘못을 따지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 보다는 지역민들 간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태안의 지역사회를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막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이 더 절실하며, 이웃관계가 화목하고, 공동체적인 단결과 협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태안사회의 재건에 임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7. 결론

면접 조사에서 우리는 어촌의 생산 활동이 상당 부분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동어장의 운영은 대부분의 어촌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어촌계이다. 촌락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생산조직이 있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되는 행정조직과 복합으로 되어 있다. 의항리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고, 또 주로 어업을 하는 곳에서는 공동체적 성격이 비교적 강하다. 그러나 파도리와 같이 어업가구와 농업가구가 혼재하고 있는 곳에서는 촌락 전체로서의 공동체성은 그 만큼 강하지 않다.

이러한 생산기구의 차이가 2008년 2월의 생계비지급방식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동질적인 생산 조직을 가진 마을에서는 균등분배의 방식을 취하고 이질적인 생업이 혼재하고 있는 곳에서는 차등분배를 하는 곳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태안 지역은 사고이전에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이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바다에 의존하고 있어서, 생산 활동과 생활이 모두 바다와 연관되어 있으며, 촌락은 비교적 안정적인 통합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름유출사고는 이러한 취약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바다생태계에 기반한 생산조직이 활동정지 상태에 빠져 촌락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원을 상실하였으며, 그 대신 두 차례의 생계비지원, 방제비지원 등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충격은 지역과 생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생태계의 회복과 더불어 생업활동의 회복에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2008년 가을부터 조업을 재개하였지만, 그 후 일부 수산물 채취업에서 조업 재개하였고, 그러나 양식업은 아직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음식, 숙박업, 가게 등은 관광객이 다시 돌아 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불투명한 장래전망이다. 생태계는 언제 회복될 것이며, 관광객은 언제 다시 찾아 올 것인가 전망이 서지 않고 있다. 또한 기름 유출사고에 의한 피해 보상은 과연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통계조사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모두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지만, 면접조사에 들어가 물어보면 불안은 아직 상당히 남아 있다.

사회적 영향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농수산물 판매, 관광객증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부지원, 생활시설, 교육, 의료시설 개선 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인구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변수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소득의 감소, 실직 등 가족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매우 크다. 친척이나 친구의 도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른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영향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월의 1차 조사 때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여러 요인들,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이나 생활의 리듬은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장래 전망에 대해서 주민들은 매우 복잡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을 떠나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바다생태계의 회복에 대해서도, 45.9%가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지난 2월 조사의 33%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점도 앞으로 추세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다 같이 보여주는 지표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주민들의 가치관 조사에서 개인이익보다는 공동체적 이익을, 현재보다는 미래, 개발보다는 환경보전,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보다는 화목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지역의 사회복구와 재건을 위해서 이러한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Burdge, Rabel J. 1999, *A Community Guide to Social Impact Assessment: Revised Edition*, Middleton, WI. Social Ecology Press.
- Burdge, Rabel, 1998, *Conceptual Approach to Social Impact Assessment: Revised Edition*. Middleton, WI, Social Ecology Press.
- Freudenburg William R. 1986, *Social Impact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451-478.
-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1994, *Guideline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US Dept. Commerce, NOAA Tech. Memo.
- 김교현, 권선중, 이병혁, 최예용,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주민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한국 임상, 건강심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심포지움 및 워크샵자료집1, 117-132).
- 박재묵, 2008, '위험사회에서 책임사회로: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국가, 자본 및 시민사회의 대응', (한국 임상, 건강심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심포지움 및 워크샵자료집1, 99-117).
- 이시재, 2002, 사회환경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ECO*, 한국환경사회학회, No.2, 106-132.
- 이시재, 2001, 영월영월댐 건설계획의 사회영향평가, *ECO*, 한국환경사회학회, No.1, 1-32
- 이시재, 2008, 허베이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 영향연구, *ECO*, 환경환경사회학회, 12-1호.
- 최예용, 2008, '삼성에 의한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와 환경보건문제', (한국 임상, 건강심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심포지움 및 워크샵자료집1, 133-148).
- 飯島伸子(Iijima, Nobuko)編、1999、『新版新潟水俣病問題—加害と被害の社会学』、東信堂。
- 飯島伸子 (Iijima Nobuko)、1993、『環境問題と被害のメカニズム』、(飯島伸子編『環境社会学』、有斐閣ブックス)
- 한경구, 박순영, 주종택, 홍성흡, 1998, 『시화호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홍덕희(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³⁷⁾ ·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³⁸⁾

요약

이 글의 목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사회갈등의 특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갈등의 진행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주요 행위자들 즉 국가, 삼성중공업, 환경시민단체, 피해 주민들의 대응 활동을 차례로 살펴본다. 사고 이후 초기에는 피해주민 등 당사자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갈등이 폭발하지 않았으나 약 한달이 지난 후부터 갈등이 조직화되고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후부터 갈등의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사회제도 안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공동체 내부의 갈등으로 전화되었다. 국가와 삼성의 갈등의 제도화 전략으로 가해자의 책임은 사회제도 안에서 사라지고 세금납부자인 국민이 피해를 부담하는 '피해자 부담의 역설'이 현실화되었다. 재난으로 인한 갈등이 제도화/공동체 내부화한 원인으로는 국회의 특별법 입법, 법원의 소극성, 정부의 '무능의 능력' 등 국가의 제도화 노력과 삼성의 제도적 책임회피와 사회적 회유 전략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공동체적 신뢰와 리더십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37) 제1저자. kritik@dreamwiz.com

38) 교신저자. kudowan@korea.com

1. 갈등에 휩싸인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태안은 심각한 사회갈등에 휩싸였다. 피해주민이 잇달아 자살했고 대규모의 집단행동이 조직되었다. 정부와 피해주민, 환경·시민단체가 대립하는 일이 발생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삼성중공업과 피해주민, 환경·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생계비 지급과 방제인건비 지급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고, 피해주민들 간의 불신과 반목이 심해져 공동체는 해체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사회갈등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 글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사회갈등의 전개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사고 이후 발생한 사회갈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회갈등이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어 심화된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갈등의 진행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주요 행위자들 즉 국가, 삼성중공업, 환경·시민단체, 피해 주민들의 대응 활동을 차례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환경재난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입법, 사법, 행정과 같은 사회제도 안에서 관리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갈등의 제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제도화되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어 공동체의 해체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환경재난의 가해자(삼성중공업)와 관리자로서의 국가는 사회제도의 장막 안에서 사라지고 피해자는 해체된 공동체에서 환경재난과 사회재난의 이중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2. 환경재난과 사회갈등: 기존연구와 연구문제

1) 공동체의 해체 혹은 재구성

생태계는 사회의 토대이다. 생태계가 훼손되면 거기에 기대어있는 사회 역시 흔들리게 된다. 특히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동체나 제도는 생물리적(biophysical)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Adger, 2000). 환경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자연자원이 훼손되면 그 지역공동체가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환경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회나 공동체가 반응하는 경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환경재난으로 인해 자연, 경제, 사회 등의 순환 고리가 깨져서 사회 혹은 공동체가 심각한 해체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환경재난으로 인해 공동체의 내적인 통합과 지도력이 새롭게 형성되어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경우이다.

환경재난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전자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1989년 엑스 벨

디즈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은 알래스카가 대표적인 예다 (Dyer et al, 1992; Rodin et al, 1992). 엑슨 벨디즈호 사고는 환경재난 이후 피해배상과 방제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사고 이후 피해배상에서 소외된 계층이 생기고, 사고 유발자인 엑슨사에서 시행하는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빚어지는가 하면, 방제작업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이 생기면서 피해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Rodin et. al., 1992). 프로이텐버그(Freudenburg, 1997: 31)에 의하면, 피해민들은 사고 이후 공공기관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보다는 자신들을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회피적이며, 둔감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다. 또한 다른 주민들의 호의를 의심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재난은 개인의 심리적 피해를 넘어서 공동체성의 상실이 가져오는 집합적 외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Erickson, 1976, 1994). 집합적 외상과 같은 사회적 피해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난에 대한 조직적·행정적 대응의 실패와 책임공방, 피해배상을 위한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해체(corrosive community)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Picou et al, 2004: 1496).

그러나 재난이 반드시 공동체의 해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연구도 있다. 즉 재난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의식이 형성되고,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브룬(Bruhn, 2005: 104-118)은 재난이 친족 및 1차 집단(primary group)과의 결속력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시험하며,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연대의식과 응집력(cohesiveness)을 강화시키기도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재난 이후의 상황은 재난 이전의 공동체의 내부 구성과 집합적 역량, 공동체성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재난은 사회적 관계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에델스틴은 유해물질로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새로운 리더십과 행동을 통해 소외된 피해자들의 연대를 이뤄내고 새로운 집합적 권력을 창출해낸 사례를 보고했다(Edelstein, 1988: 141-146).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환경재난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구도완(1996)에 의하면 낙동강 폐놀 유출사고로 인해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확산되었고 가해자 두산에 대한 대구 피해시민, 환경시민단체, 언론 등 모든 국민들의 광범위한 연대가 이루어졌다. 두산 제품에 대한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두산은 경제적 피해를 크게 입기도 했다. 이 사고로 인해 환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환경운동조직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폐놀 사고로 인해 전국적인 사회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주로 두산과 국민-환경단체-언론 사이의 갈등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환경단체들의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되었다.

우리의 연구대상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박재목

(2008)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라는 환경재난이 사회적 재난으로 전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생계지원비와 방제작업 인건비 지급, 삼성중공업과의 자매결연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 마을 간, 세대 간, 업종 간 갈등이 지역공동체를 해체시킬 만큼 심각하다(구도완 외, 2008; 박재목, 2008; 박태순, 2008a, 2008b; 이재열 외, 2008; 이시재, 2008a).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공동체의 재구성이 아니라 해체라는 사회적 결과를 낳았다. 어떻게 해체되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생태계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우리는 사회갈등에 초점을 맞춰 생태계 파괴가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진 사회적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질문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의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회갈등이 시계열적으로, 행위자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재난으로 촉발된 사회갈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시 말해 사회갈등의 중심이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의 대립인지 아니면 공동체 내부의 갈등인지를 분석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환경재난 이후 사회갈등이 왜 발생하고 심화되었는가?’이다. 사회갈등은 기름유출사고로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촉발되었지만 사회적 과정을 거치며 심화되었다. 우리는 사회갈등의 사회적 원인을 탐구하여 환경재난이 사회갈등, 나아가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진 원인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 글은 주로 질적 방법에 의존한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심층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갈등을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선 객관적인 사실만큼이나 행위자들의 주관적인 기억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심층면접 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경험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갈등의 지점과 실체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³⁹⁾ 피해주민들의 시각을 출발점으로 삼겠지만 다른 행위자들의 담론과 활동도 핵심적인 연구대상인 만큼 관련된 자료를 폭넓게 이용한다. 예컨대 환경·시민단체의 성명서, 보도자료, 발간자료 또는 신문사의 기사 및 사실 등은 각 행위자의 활동과 담론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39) 심층면접은 2008년 2, 4, 9, 10, 11월, 2009년 2월에 진행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30명의 심층면접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중 5명은 시기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구술자의 거주 지역은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태안읍 등으로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장이나 어촌계장 등 대체로 지역의 지도층 인사를 주로 면접했지만 일반 주민도 만났다. 남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연령대는 40-50대가 대부분이다. 피면접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지역어론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태안군 지역신문인 <태안신문>과 <태안시대>도 중요하게 참고하였다.

3. 시기별 사회 갈등의 특성

사고 이후 현재까지의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의 시기는 제1기로서 **응급 복구 시기**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시기 피해주민들은 삼성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부분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지만, 이보다는 사고에 긴급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시커먼 바다와 시름과 충격에 빠진 어민들, 그리고 기름 범벅이 된 물새가 이 시기의 대표적 상징이다. 생태계 파괴와 긴급복구와 대응, 사고 원인, 방제체계의 문제점, 어민의 경제적 피해 등이 이 시기의 주된 이슈였다. 사고 약 1주일 후부터 환경시민단체의 회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을 찾아오면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태안의 기적'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긴급한 사고 대응과 복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기이다.

제2기는 2008년 1월의 **갈등 폭발 시기**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시기 태안 주민 세 명이 연이어(1월 10일, 16일, 19일)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태안 주민들은 삼성중공업과 정부에 대해 격분했고 수사례에 걸쳐 태안(1월 8일, 14일, 18일)과 서울(1월 23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특히 서울역 앞 시위에는 피해 주민 4천여명이 참석하여 격렬한 집회를 열었다. 이 시기에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긴급방제 작업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던 피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고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사고 이후 사회적 분노가 가장 강하게 폭발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생태 파괴로 인해 생긴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은 사회경제적, 심리적 약자들의 자살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사회적 사건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촉발하여 사회갈등의 강도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제3기는 2008년 2월부터 현재(2009년 4월)까지의 시기로서 **갈등의 제도화/내부화⁴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분노와 피해배상 요구는 정부, 국회, 법원과 같은 국가기구의 시스템 안에서 제도화되고 약화되었다. 가해자와 갈등 관리자(국가기구)들은 사회적 분노가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관리했다. 먼저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2008.2.22)하고 시행령을 발효(2008. 6. 15)시켜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복구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법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1,425억원으로 제한했고(2009. 2. 9),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2009. 3. 24)을 내렸다.

중앙정부는 긴급 대응과 복구에 관심을 집중했고,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주민 생계대책은 충남도, 태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했다. 태안군은 군민이 세 명이나 연이어 자살하는

40) 여기서 내부화란 사회갈등이 외부집단을 대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집단 혹은 공동체의 내부로 전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기구나 사적 부문이 사회제도 안에서 갈등을 제도화하면서 해소하지 못한 갈등을 시스템 외부로 외부화할 때 그것이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어 공동체 해체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시스템에서 외부화한 갈등은 체계를 파괴하거나 혁신하지 못하면 공동체 안으로 내부화된

사태를 맞아 정부예산과 국민성금을 지역주민들에게 긴급생계비라는 명목으로 2008년 1월 28일에 지급했다. 그런데 태안군청은 지급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세우지 않은 채 마을별로 생계비를 분배하도록 해서 커다란 사회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1월 31일에는 원북면의 한 주민이 생계비 지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다. 마을마다 생계비를 가구별로 균등지급하기도 하고 차등지급하기도 하는 등 원칙이 없어서 마을간, 마을 내 커다란 갈등이 생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안의 피해 주민들은 공동체의 해체에 가까운 갈등을 경험했다.

이 시기에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연합회(회장: 이용희 군의회 의장)가 구성되었지만(2008. 4. 7), 수협을 중심으로 한 수산부문 대책위가 탈퇴하여(5. 12), 통합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수산부문과 비수산부문으로 분리되어 활동하다 2008년 11월 22일 수협통합대책위가 유류피해대책 연합회에 다시 참여하여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이 시기에는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삼성에 맞설 피해주민의 힘은 약화되었다. 반면 갈등은 지역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었다. 생계비 지원, 방제인건비 지급, 삼성과의 자매 결연 등의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동체 내부의 신뢰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고, 사회적 피해는 장기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편으로 국가 기구 안에서 갈등이 제도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 사이에 갈등이 공동체 안으로 내부화되었다. 국가 시스템이 갈등을 제도화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생활세계는 내부 갈등으로 파괴되었다. 재난에 대응해서 생활 세계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지적, 도덕적 지도력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은 처음 제1기에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개인적, 집단적으로 마을 앞 바다를 지키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2기에 이르러 자살이 이어지고 가해자와 정부의 대응이 지지부진해 보이자 피해자들은 분노를 집단적으로 표출하고 집합적인 행위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제1차 생계비 지원을 계기로 제3기에 이르러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조직적 대응은 약화, 분열되고 제도화된 반면, 피해자들 사이의 갈등은 확산되었다.

4. 집단별 갈등 행위와 담론

1) 국가의 재난 관리 실패와 제도적 포섭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국가로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국회, 법원 등의 사고 대응을 분석한다. 먼저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자.⁴¹⁾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41) 정부의 긴급 방제의 실패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노진철(2008a)을 참조하라.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사고 발생 3일 후인 12월 10일 태안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3일 충청남도에 생계비 자금 30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이 각자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 배분받으려고 지원방식과 기준에 합의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충남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생계비는 표류하기 시작했다. 생계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피해주민들은 극심한 생계난을 겪게 되었지만 정부의 대응은 매우 느렸다. 결국 2008년 1월 10일에서 19일 사이에 피해주민 3명이 자살할 정도로 생계난이 심각해졌지만 그때까지도 행정당국은 긴급 생계비를 집행하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의 절망감과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⁴²⁾ 피해주민들이 잇따라 자살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조직되어 표출되자 충남도는 서둘러 긴급 생계비 자금을 시·군으로 배분했고, 시·군은 다시 읍·면으로, 리 단위로 배분하여 심의 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생계비 지급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배분에 나서 오히려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2008년 4월에 이루어진 2차 생계비 지급과 2008년 7, 8월에 이루어진 방제작업 인건비(2008년 1, 2월분) 지급의 경우 1차 생계비 지급 때보다는 덜 했지만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사고 이후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의 지체와 비효율성은 환경재난이 사회재난으로 전이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박재목, 2008), 사회갈등이 내부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안군의 노력이 주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다. 태안군은 생계비나 방제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노력했고, 유류피해지원과를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사고에 대응했다. 방제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군내 공무원들을 각자의 연고지로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 결과 피해주민과의 극심했던 갈등도 상당히 누그러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치유하는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1차 생계비 지급과 관련하여 올바른 원칙을 갖고 정당한 절차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 이후 공동체의 균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배상 문제를 제도 안에서 해결하여 갈등을 제도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피해의 사정과 배상 문제를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국제기구 사이의 사적 관계의 문제로 환원하여 국가를 소극적 중재자의 역할에 머물게

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8년 2월 22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3월 14일에 공포되었다. 시행령이 발효된 것은 6월 15일이다. 특별법은 국제기금의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배상을 보장하고, IOPC 기금 지급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맨손어업 및 무허가어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재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박재목, 2008).

그러나 특별법은 피해자가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토대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특별법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명시화하지 않은 채, 배상한도액을 IOPC의 사정액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없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이 매우 어렵다. 실제로 대다수의 피해주민들이 증빙자료의 문제에 직면해있고, 실제 피해와 피해 사정 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배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증거실을 밝혀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벌적 배상금 등 추가적인 배상금을 징수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한된 배상금을 갖고 피해주민들 간에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 검찰과 법원은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가해자/피해자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1월 21일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사고의 무한책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증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양측 모두를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피해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고, 대규모 규탄시위가 조직되었다. 검찰의 기소를 시점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전환되었다. 피해주민과 시민단체의 시위가 계속 됐지만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것은 법원의 몫이 되었고, 이로써 사고 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제도 안으로 대부분 포섭되었다.

국가기구로서 행정부, 국회, 사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라는 환경재난이 미친 생태계와 사회의 파괴를 사회제도 안에서 해결하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이것은 국가 기구의 특성으로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매우 느리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 생태계의 파괴 문제는 사회제도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과 생물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2) 삼성중공업의 책임 회피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해주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사고 발생 후 40여일이 지나도록 피해배상이나 생태계 복원 계획은 물론 공식적인 사과발표조차 하지 않아 지탄을 받았다.⁴³⁾ 오히려 초기부터 사건조작 의혹을 낳으며 강한 사회적 반

42) 1월 10일 소원면 의항리 이○○씨가 양식장 피해를 비판해 음독자살한 것에 이어 16일에는 근흥면 마금리 김○○씨가 목숨을 끊었다. 이를 뒤인 18일에는 태안읍 동문리 지○○씨가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대회에 참석 도중 농약을 마시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이튿날 숨을 거두었다. 2월 20일에는 소원면 모항리 정○○씨가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받을 자초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삼성중공업은 피해배상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2008년 1월로 접어들면서 피해어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삼성중공업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삼성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은 비판여론이 확산되지 않게끔 언론 관리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다. <시사인>(2008.3.10)은 삼성중공업 홍보실 임직원들이 태안에 상주하며 기자들에게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 초기 삼성중공업 크레인의 책임문제를 비중 있게 보도한 언론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삼성의 항응제공이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⁴⁴⁾ 여러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지만 삼성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삼갔다. 삼성중공업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2008. 1. 21) 이후에 이루어졌다.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기소했는데,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

삼성중공업은 이튿날(1.22)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오히려 강한 반발을 사게 됐다. 사고의 원인을 기상악화로 돌리고 배상과 복원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⁴⁵⁾ 삼성중공업의 사과문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분노했다. 급기야 태안 주민들은 서울로 대규모 상경시위 길에 올랐다. 1월 8일, 14일, 18일에 걸쳐 태안읍에서 대규모 삼성과 정부 규탄 시위를 개최한 바 있는 태안 주민들은 1월 23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삼성 무한책임 촉구대회”는 태안에서 상경한 3700여명(경찰 추산) 가량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시위대 중 일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삼성 본관 앞까지 진출하여 김과 우력 등 수산물을 뿌리며 삼성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태안주민들은 삼성중공업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강한 적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측의 입장은 확고했다. 1월 30일, 삼성중공업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삼성측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기름유출사고는 유조선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항해일지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 기재한 것일 뿐 고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고, 예인선단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사용자 책임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43)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주인 현대오일뱅크도 단일선체의 유조선을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고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은 주로 삼성중공업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집중적인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44) 구술자들도 삼성 측이 언론과 지역여론을 관리하려 한 정황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면 초창기에 중앙 언론사 기자들이 앞에 두 모델에 묵었습니다. 삼성이 술, 밥값하고 다 냈습니다. 설 전에는 각 농협에 호박 고구마 5kg 짜리 납품하라고 해서, 그게 삼성에서 직원을 다 사 준거 아냐, 여기는 하나라도 팔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파니까, 그러면 배 있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놈 새끼들이 삼성편 든 겁니다’, 그렇게 싸움이 나,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1원도 안부치고, 삼성이 얼마나 집요하게 관리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박민철, 모항1리, 08.4.11)

45) 사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해 북서방 해상에서 저회 해상 크레인이 항해 도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하여 원유가 유출되면서 서해 연안이 크게 오염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생략)”

삼성중공업이 보다 적극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2월 29일이었다. 삼성중공업은 서해안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출연하고 태안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며 장기적인 생태계 복원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이 지속적으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해왔기 때문이다. 제도화된 국제배상체계 바깥에 있는 삼성중공업은 구상권 행사나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 판결에서 과실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박재목, 2008). 1심과 항심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중공업은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가 자신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예인선 측의 단순과실로 생긴 사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측에도 유죄 판결이 난 2심 재판이 끝난 2008년 12월 22일에는 손해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선박 책임 제한 절차를 서울중앙법원에 신청하였다. 법원은 2009년 3월 24일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피해주민들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이처럼 사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삼성중공업의 주장과 삼성중공업이 과실을 인정·사과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피해주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⁴⁶⁾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직원 연수, 방제작업 시행 등을 태안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분적인 성과를 얻었다. 2008년 여름부터는 의항 2리를 포함한 7개 마을이 삼성과 자매 결연을 맺고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삼성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주민들을 파고 들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사고 이후 삼성에 대한 분노의 강도는 줄어들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삼성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서해안 발전기금’과 같은 형태로 대응하는 데 대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삼성과 전면적인 갈등 구도를 만들기에는 주민들의 자발동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주민들은 간헐적으로 삼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조직했지만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1차 생계비 지급 이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가해자를 상대하기 위한 피해자 연대는 갈수록 약화되었다. 더구나 삼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은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법적인 책임을 다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주민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46) 허베이 스피리트사와 현대오일뱅크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책임과 자신들이 연결되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제도적인 절차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사고가 종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과 과실유무를 가리는 법정공방을 펼치는 한편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제기하여 2009년 2월 유조선 선주의 배상한도 책임을 1425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3) 환경·시민단체의 지원활동

환경·시민단체(47)는 사고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단일선체 유조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이 단순히 비판과 문제점 지적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2007년 12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은 직접 피해지역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에 나섰다. 유화제 사용의 문제점과 방제작업 참가자들의 건강상의 위험 문제를 지적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12월 15일부터 방제작업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 시민방제활동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의 환경법률센터와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는 기름유출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법률상담 등을 통해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했다.

긴급방제작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환경·시민단체의 관심은 삼성중공업의 책임규명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촉구로 확대됐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사고발생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고, “안전한 복구, 완전한 배상”을 위해 가해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일선체 유조선을 이용한 현대오일뱅크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이 절실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선지원을 한 뒤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주민들의 피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소송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008년 1월이 되었지만 환경·시민단체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수사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삼성중공업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피해주민들이 잇달아 자살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특별법 제정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1월 들어서면서 삼성중공업의 사고와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수시로 열렸다. 1월 16일에는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연합 등이 참여한 법률대책회의가 발족하여, 대검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주민조직들과 연대하여 규탄시위를 개최하고 정부와 삼성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그러나 검찰은 2008년 1월 22일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삼성중공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정하면서 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가시화했다.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은 삼성의 책임을 밝혀내고, 피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데 다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사고의 책임 규명과 피해배상·복원이 법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환경·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해졌다. 피해주민조직의 힘마저 약화되면서 법원을 압박할, 또는 법적 판단의 근거를 바꿀 새로운 프레임을 창출

47) 여러 환경·시민단체들이 활동했지만 이 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라 할 수 있는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각 단체들의 입장과 활동은 각종 성명서와 보도자료, 발간자료, 누리집 등을 참고로 했다.

해내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피해주민들과의 연대도 쉽지 않았다.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이 태안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다시 일어서는 서해” 행사는 선주연합회 등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⁴⁸⁾ 3월 13일 시민공공대책위원회가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을 고소고발하고, 4월과 5월 태안주민과 환경운동연합, 삼성일반노동조합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삼성에게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일회성의 항의에 그치고 말았다. 그나마 2008년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직접적인 활동을 펼치지도 못하고, 간간히 성명서를 내는 수준의 활동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오염자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중선체 의무 규정을 앞당겨 기름유출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환경·시민단체의 손을 벗어나게 되었다.

환경단체는 환경재난을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조직하는 등 중요한 일들을 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자원봉사 조직 등 피해주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을 조직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지원단체들의 지원은 피해주민들과 유기적 연대를 이루지 못했다. 피해주민들은 마을별, 직업별로 분열되어 피해배상 등의 이해관계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 선주협회 등 일부 주민들은 외부 지원단체의 지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를 ‘빨갱이 집단’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편파화로 인해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생태계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피해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좌절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해주민조직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2008년 1월 연대의식을 고취하며 삼성과 정부에 대한 집단행동을 조직해내던 피해주민조직들은 갈등이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무기력해졌다.

사고 이후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조직적 기반이 탄탄했던 수협·어촌계였다. 서산수협은 사고 약 일주일 후, 각 어촌계를 아우르는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⁴⁹⁾ 주민들의 대외적인 첫 집단행동은 2007년 12월 16일 만리포 주민들이 방제작업을 마친 뒤 삼성 규탄 집회를 열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일부터는 태안군 도로변 곳곳에 삼성과 정부를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대부분 방제작업에 매달려있던 터라 대규모의 집단행동은 조직되지

48) “다시 일어서는 서해”는 기름유출사고 발생 100일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기획한 행사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가와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태안생태복원 기원 퍼포먼스와 태안 장보기 행사를 준비했지만 선주협회 등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약식으로 장보기 행사를 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49) 주민조직의 활동은 <태안시대>와 <태안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않았다. 대신 지역별, 업종별 피해대책위가 난립하면서 대립과 경쟁이 시작됐고, 범군민 대책위를 결성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⁵⁰⁾

2008년 1월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긴급방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피해주민 간의 연대가 강화되었다. 1월 8일, '기름유출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 여론 수렴회'를 앞두고 500여명의 피해주민들이 정부와 삼성, 현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1월 10일부터 생계난을 견디지 못한 피해주민들이 잇달아 자살하면서 결속력은 강화되고, 집단행동도 활발해졌다. 14일 고 이○○씨의 군민장에는 8000여명이 운집해 삼성과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18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촉구 대회에는 6000여명의 주민이 모였다.⁵¹⁾ 주민조직의 결성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16일에는 8개 읍면 비수산 대책위원회 대표가 모여 비수산분야 군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23일에는 주민 4000여명이 서울로 상경해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 삼성 무한책임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피해자들의 연대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젊은 어른계장들을 중심으로 한 수협 쪽 사람들로 구성된 유류피해투쟁위원회였다. 1월 14일 급하게 기획된 군민장에서부터 23일 상경시위까지 일련의 집단행동의 중심에는 유류피해투쟁위원회가 있었다.

유류피해투쟁위원회는 2월 4일 '삼성 방제조치 명령 발동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동안 자원 봉사로 알려져 왔던 삼성의 방제작업이 사실 방제명령에 따른 것이었음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진전이 없던 대책위들간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⁵²⁾ 하지만 통합 대책위원회의 결성은 쉽게 성사되지 않았다.⁵³⁾ 사고 끝에 결성된 통합 대책위는 태안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로 명칭을 확정하고, 4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한달 후 서산·남면·안면도 수협이 연합회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통합 대책위를 구성하면서 사실상 연합회는 이름만 남게 되었다.⁵⁴⁾ 그렇다고 피해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50) 사고 이후 피해대책위가 난립하게 된 데에는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 그러나 피해대책위의 난립을 우려하며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묻고, 향후 원활한 복원을 위해 해선 범군민 통합대책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즉 정부·삼성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배상에 있어 공동의 대응을 하기 위해선 개별 피해대책위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대책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태순(2008b: 156-157) 참고.

51) 집회 때 등장한 주요 문구는 “우리가 끝이면 너희들도 끝이다”, “책임 회피하는 삼성중공업은 각성하라”, “갑부기업 삼성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정부는 각성하라”, “완전배상, 완전복원, 가해자 무한책임” 등이었다.

52) 우후죽순 늘어난 피해대책위들 간의 통합안은 1월부터 제기되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범군민대책위 구성 요구가 갈수록 높아졌지만 당시 유일한 총재자로 인식되던 군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유류피해투쟁위원회는 군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월 4일 군 의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2월 5일 통합 대책위원회의 구성안이 발표됐다.

53) 2월 12일 발기인 구성 문제와 밀실행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창립총회가 무산되었으나, 2월 22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 이상 대책위 통합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확산되었고, 결국 29일 발기인 대회가 개최됐다.

54) 수협이 탈퇴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위탁금융기관 선정문제였지만 실상은 연합회의 기초가 삼성 협상론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반발<태안시대>, 08.5.13)과 업종간 주도권 다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수산분야 군 대

피해주민들은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집단행동을 펼쳤다.⁵⁵⁾ 그러나 주민들의 저항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6월 이후 긴 침묵이 시작되어 삼성이나 정부를 향한 대규모 집단행동은 2008년 말까지 조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대책위들이 난립한 채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대책위의 조직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각 마을별로 주민대책위가 꾸러지는 과정에는 사건 수임을 목표로 12월부터 들어와 활동하고 있던 손해사정사·회계법인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로 지역의 주류인사들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개인적인 이권을 챙겨두는 발판으로 이용되면서 주민대책위들의 조직력이 제한되고, 특히 젊은 그룹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각종 주민대책위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지도력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다. 지역 언론인은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지도력이) 신기하게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유류피해 투쟁위원회라고, 젊은 그룹이 수산인들 중심으로 있었는데, 다른 조직들, 큰 부류의 다른 조직들이 이 조직을 그냥 놔두질 않는 거죠. 왜해서키는 거죠. 지금 거의 소수만이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이철수, 08.10.23)

젊은 그룹과 주류층 사이에선 삼성에 대한 의견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삼성 측과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역의 주류층이 삼성과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삼성 측으로부터 일정정도 이익을 얻는 측면이 생기면서 주민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피해주민들의 연대는 더욱 어려워졌다. 모항1리에 살면서 연합회 수산부문 일을 하던 박민철씨는 생계비 지급 이후 민민 갈등이 생겨서 주민들 간에 단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생계안정자금 분배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자 이번에 집회 한번 해야지라고 계획을 잡고, 갑작스럽게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도 태안주민들이 뿔뿔 뿔뿔 움직였는데, 그때는 돈도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생계안정자금 분배 이후로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죠. 왜 민민갈등이 일어나면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박민철, 08.4.11)

책위로 3월 21일 별도의 사무실을 열고 활동을 시작해 연합회 차원의 법적 대응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지역신문 기사로 미뤄 보건데, 2008년 3-4월을 지나며 삼성에 대한 배상심리에 기반 개발요구가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5) 3월 13일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와 전국의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을 고소고발했고, 4월 29일에는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삼성일반노조가 거제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5월 6일에는 태안군 선주연합회와 나잠어업인(해녀)들이 삼성중공업을 향의 방문하여 어렵게 선정증서를 반납했으며, 15일에는 해녀 40여명이 삼성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심 선고를 앞둔 5월 말에는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과 한남동 이권회 전 삼성회장의 자택 앞에서 주민 대표들이 단식농성을 벌였고, 서산 삼성토털(주) 앞 시위에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5월 31일에는 다시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향의 집회가 열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젊은 그룹과 지역시민단체가 지역의 주류세력을 넘어서기에 그 역량이 부족했다. 결국 이들은 몇 차례의 행동들을 통해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민들 속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 결과 주민대책위들은 피해주민들 간의 갈등을 억지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분열이 불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이시재, 2008a). 지역의 주류세력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대안적인 담론과 실천도 벽에 부딪치게 되었고, 피해주민들의 요구는 법적 테두리에 갇히고 가해자에 대한 배상 기대 심리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피해주민대책위들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었다. 2008년 11월 22일 수산 부문 대표자들이 유류피해대책연합회에 다시 참여하면서 유류피해대책연합회(회장: 이원재 서산수협 조합장)⁵⁶⁾가 전열을 재정비했지만, 단일한 연합조직으로서 지도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새로운 연대 조직과 리더십이 유기적으로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갈등의 구도는 가해자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대 피해자 사이의 제로섬 게임으로 전환되었다.

5) 마을 공동체의 균열과 해체

사고 직후 주민들은 직접 기름을 제거하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보살피느라 쉴 틈이 없었다. 정부와 삼성중공업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지만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기름을 제거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월 들어 긴급방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생계난이 가중되면서 삼성중공업과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을 조직해나갔다. 그러나 1월 말 생계비 지급을 둘러싼 ‘민민 갈등’이 폭발하면서 피해주민들 간의 연대와 협동은 서서히 약화되었다. 주민들은 생계비의 공정하고 정당한 집행과 배분을 요구하며 서로 다투고 반목했다. 생계비 지급에 이어 방제인건비, 삼성중공업과의 자매결연 등 피해주민들 간의 갈등 사안들이 불거지면서 지역공동체는 분열되고 갈등은 점차 내부화되었다.

가) 생계지원금을 둘러싼 갈등

정부는 사고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2008년 1월과 4월 두 번에 걸쳐 생계지원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1월에 이루어진 1차 생계지원자금 지원은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생계비 지급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진 까닭은 무엇보다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

56) 2009년 4월 김진권(태안군 선주연합회)/박남규(안면읍 비수산분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회장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었다. 1월 21일 충청남도로부터 317억 5천만원의 생계비를 배분받은 태안군은 읍·면별로 등급을 나누고⁵⁷⁾,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가구당 최고 291만원으로 확정하여 28일 배분에 착수했다.⁵⁸⁾ 하지만 각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매우 달랐다.⁵⁹⁾ 각 마을로 배분된 생계비는 다시 마을 회의를 거쳐 마을별로 다르게 지원되었다. 일부 마을은 가구별로 똑같은 금액이 균등 지급되었고, 어떤 마을은 피해 정도나 업종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었다. 이처럼 생계비 지급기준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읍·면간, 마을간, 업종간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1월 30일 소원면 의항리 주민 500여명이 생계비 분배방법에 항의해 태안군청을 방문했고, 31일에는 원북면 신두리 주민 전○○씨가 원북면 사무소에서 항의도중 “등급 배점 기준을 고쳐 모든 피해주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라”며 자신의 손가락을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 지급된 생계지원금이 턱없이 적다고 항의하던 장○○씨가 군청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공무원들에 의해 제지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충남도는 1차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받아서 657세대에 13억 64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당시 태안군의 이장들은 “마을 주민들한테 하루에 모가지가 10번 잘렸다 붙었다”고 할 정도로 큰 시련을 겪었다. 이장들뿐만 아니라 태안군의 거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생계지원금 문제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해야 했다. 모항1리의 한 주민은 1월 말 이후 1차 생계비 지원 이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의 연대가 급속히 약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이 정부와 삼성이 일부터 ‘민민갈등’을 일으키려고 의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생계안정자금이 없었다면 태안주민들끼리 민민갈등 없이 뿔뿔 뿔쳐서 중앙정부가 되었던 삼성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야하는데, 그걸 힘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걸 이용한 것 같아요. ... 여기서 단합을 못하게 하고 몇 폰의 돈 때문에 민민갈등 일으키고, 물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그렇게 (한계) 아니냐 하는 거죠.” (박민철, 모항1리, 08.4.11)

내부 갈등은 마을별로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소원면의 의항2리와 모항1리, 파도1, 2리를 예로 들어보자. 이들 마을은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고, 기름유출사고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57) A등급은 소원면, 원북면, B등급은 이원면, 근흥면, C등급은 남면, 안면읍, 고남면, D등급은 태안읍이었다.

58) 태안군내 2만 5508가구 중 1만 8757가구가 대상자였고, 가구별 지원금액은 최저 74만 6862원에서 최고 291만 6600원이었다.

59) 28일 제1회 면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태안읍은 가구당 74만 6286원씩 균등배분했다. 같은 날 근흥면의 가의도는 350만원, 나머지 지역은 A-D 등급에 따라 300~90만원씩 차등지급했다. 원북면은 A등급은 600만원, B등급은 300만원, C등급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심의를 마친 고남면은 전 가구에 161만 4천원씩 균등지급을 했고, 남면은 등급에 따라 78만원에서 205만원까지 차등지급했다. 소원면은 A, B, C 등급으로 분류해서 각각 420만원, 223만원, 90만원씩 배분했고, 이원면은 A, B, C 등급에 따라 280만원, 254만원, 229만원씩 지급했다. 마지막으로 안면읍은 A, B, C 등급에 각각 150만원, 100만원, 70만원씩 지급한 후 가구당 세대원 1인당 15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업은 곳이다. 그러나 의항리와 모항리, 파도리는 1차 생계비 배분에 있어 각기 다른 방법을 택했다. 의항2리와 파도리는 균등배분에 합의한 반면 모항1리는 차등배분을 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마을 구성원 간의 동질성과 공동체성의 차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의항2리의 경우 농사를 짓거나 어선을 보유한 사람들도 있지만 주민 대다수가 굴양식을 한다. 파도리의 경우에는 굴·바지락·미역·전복 등 양식어종이 다양하고, 어선을 가진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반농반어에 종사해서, 주민의 표현을 빌자면, 물이 나가면 다 같이 우루루 멀리까지 나갔다가 물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는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의항리와 파도리는 상대적으로 공동체성이 강해서 일부주민들의 반발을 무릎 쓰고 균등배분에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굴양식을 해서 일괄적으로 받았는데, 다른 지역은 ‘어업과 농업을 차별해 주자, 농업은 피해를 본 것이 없으니 차별을 두자.’ 여기에서 싸움이 났다. 농업하신 분들은 이것은 피해배상이 아니라 생계비다, 생계비를 구분하면 되느냐, 모항1구, 2구, 원복면이 이랬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좀 양보를 했다. 우리 마을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했다. 여기는 농사만 짓는 사람이 거의 없다.” (김태민, 의항2리, 08.2.27)

이에 반해 모항1리는 마을주민이 800명 가량으로 규모도 크고, 직업 구분도 확실하다. 특히 선박어업을 하는 주민들과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 간의 구분이 뚜렷해서 반농반어, 또는 양식, 공동 양식장 이용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의항2리, 파도리와는 다르다. 계층구분이 다양하고 공동체성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항1리는 균등배분이 아닌 차등배분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큰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에는 우리 마을의 경우는 어업,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A등급으로 준거예요. 나머지 단순한 맨손어업과 농업을 겸업해서 하는 사람들은 B등급으로 쥐버리고. 생계안정자금이라고 계목을 붙여서 돈이 왔는데 ‘우리는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나, 쉼선을 하나, 횃집을 하나, 왜 똑같이 나누자고 하느냐?’, 그러니 그쪽에서는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나온 배상금이 아니라, 생계안정자금이다. 균등하게 해야 한다. 왜 니들만하냐?’ 거기에서 꽤가 갈린 거죠. 평소에 항상 좋았던 사람들이 친구도 없어지고 형제간에도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거예요.”(김선우, 모항1리, 08.4.11)

생계비 배분방식은 마을의 직업적 구성, 또는 공동체성의 영향을 적잖게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다시 갈등정도의 차이를 가져왔다. 구술자들은 대체로 균등배분한 마을이 차등배분한 마을보다 갈등이 적었다고 이야기했는데, 비단 생계비 지급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유사한 차이를 가정할 수 있는 만큼 피해지역 내에서도 갈등이 내부화되고,

장기화되는 양상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나) 삼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

삼성중공업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부터 직원들을 방제작업에 투입하는 등 방제·복구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삼성중공업 지사에서 30명의 직원을 차출하여 삼성시케어센터를 설립하고, 이들이 태안지역에 상주하며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시케어센터는 매주 의료진을 이끌고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피해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도 했다.⁶¹⁾ 하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삼성중공업은 다양한 경로로 비공식적인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의 불투명성과 편향성은 주민들 간의 의심과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몰밀 작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접촉하는 것은 갈등을 부채질했다.

“어느 부류 사람들은 삼성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느 부류에서는 삼성이 진짜 진짜 때려죽일 놈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그런데 왜 그렇게 됐나면 처음에 삼성이 여기에 타이틀도 못 걸고 들어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전 지역에 다 들어가는데 삼성만큼은 처음에 하루 이틀 삼성 브랜드 달고 왔다가 맞아 죽을 뻔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떼고 이름 모를 정체가 없는 유명 애들 왔다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숨어서 일을 했다고요. 안 울수는 없으니까. ... 조금 분노가 잠들기 시작하니까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여기 다 계산을 했어요. 주민들의 심리피해를 다 했어요. 심지어는 여기하고 관계없는 데에도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는 누가 지우고 이 동네에는 누구고 이것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동네가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고, 저 동네 가면 저렇게 행동을 하면 되고. (스파이를 아주~)” (송일우, 신두리, 08.9.18)

삼성과의 불투명한 관계는 주민들 간의 불신과 반목을 깊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삼성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비록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하더라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2008년 여름 태안지역의 해수욕장이 한 곳을 빼고 정상 개장했지만 피서객수는 88% 급감한 182만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컸다. 삼성의 지원을 받아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누가, 얼마나 받아야하는가를 놓고 주민들 간에 의견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 측 인력이 방제작업을 위해 상주하면서 마을 내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가구들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마을 내부 갈등을 빚어내기도 한 것이

60) 좀 더 경험적인 근거를 연구해야 하겠지만,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마을 주민의 계층, 직업 등이 비교적 균질적이고 공동체적 신뢰가 높은 마을일수록 재난으로 인한 갈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김도균과 이정립(2008)의 가위도 연구, 구도환 외(2008)의 연구도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61) 삼성시케어센터의 활동은 한국경제(2008.12.6) 기사를 참고.

단적인 예다(이제열 외, 2008).⁶²⁾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사고 난 후 오히려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나 삼성이 여름 휴가 하계 휴양지로 잡아주었는데 그 당시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한 곳만 한 달 휴양지로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 잘되는 집은 전보다 20~30% 매출이 늘고, 아닌 사람들은 70~80% 수입이 줄어드니까 갈등이 커지는 것이죠.” (길태민, 방갈2리, 09.2.11)

2008년 여름부터 삼성과의 자매결연이 추진되면서 마을 내부의 분열, 나아가 이웃 마을에 대한 불신은 조금 더 표면화되었다. 급기야 8월말 태안군수는 긴급 읍면장 회의를 개최해 삼성과의 자매결연을 자체해줄 것을 각 마을 이장들에게 특별 당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자매결연을 둘러싼 갈등은 마을 내에서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삼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의항2리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찬반이 썩 갈라졌어요.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표현을 잘 안했으니까 이장이 하는 대로 따라서 왔고, 젊은 분들은 반대하고 ... (자매결연 행사는) 간단하게 치렀어요. 소문도 안내고, 군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치렀죠.” (나철우, 의항2리, 08.9.19)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생태적·사회적 복원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삼성은 외면할 수도,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달갑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삼성의 지원을 받아 살길을 찾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과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갈등을 부채질할 뿐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태안 지역 언론인은 삼성의 지원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갈등을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는 삼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자존심의 양자 택일을 요구하는 갈등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한다.

재난의 가해자인 삼성은 사법제도 뒤로 숨고, 정부는 소극적으로 법과 제도 안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마을 공동체는 심각하게 균열되고 해체되었다. 초기에 가해자와 정부에 대해 강력한 집합행동을 조직하던 피해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어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는 제로섬 게임의 희생자가 되었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들이 서로 피해를 주는 악순환이 생기면서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62) 피서철을 맞아 현대오일뱅크에서 행사비용 50억원을 제공하여 열린 ‘흙주는 바다’ 행사시에도 참여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지 않아 마찰이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제열 외, 2008). ‘흙주는 바다’ 외에도 태안지역에서는 각종 이벤트, 축제, 행사가 다수 펼쳐졌는데, 자원배분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

5. 토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풀어보자. 첫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사회 갈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가해와 피해의 구조는 어떠하며, 갈등의 구도는 어떻게 변했는가?

1) 가해/피해 구조와 피해자 부담의 역설

갈등의 당사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가해자는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호이지만 사건의 특성으로 볼 때 주된 가해자는 삼성중공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 판단과 대중의 이해와는 다르게 법원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매우 가볍게 판단했다.

이 사고의 주된 피해자는 어업 등에 종사하는 서해안의 주민,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태안군의 어민 등 피해주민이다. 그러나 서해안의 자연환경과 수산물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향유대상이라고 본다면 국민 모두가 재난의 피해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등은 정정상 갈등의 관리자이지만 정부는 초기에 갈등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자체가 제한되었고, 가해자의 책임은 최소화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상이다.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책임과 과실을 분명히 하기가 모호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핵심가해자라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은 피해배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 결과 피해배상을 피해자인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특별법에 따라 IOPC의 피해추정액 6013억원 중 유조선 선주의 배상책임 한도인 1425억원을 포함한 IOPC 기금 321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798억원 가량은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⁶³⁾ 이 중 삼성중공업은 배상책임한도액인 56억원만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차액은 세금, 다시 말해 국민들이 지불하게 된다. 국민들도 넓은 의미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염자부담원칙이 아닌 피해자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가해자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사실상 방제작업의 책임과 비용부담을 면제받았다.

2) 갈등 구도의 변화: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 내부화

63) IOPC의 배상한도인 3216억원이 전액 지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통상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IOPC의 지급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IOPC의 배상액이 배상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의 대지급 범위는 아직 확실치 않다. 따라서 향후 피해배상이 진행되면서 배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시기별로 보면 제1기에서는 삼성과 정부 대 피해주민 및 환경시민단체의 갈등구도가 형성되었다. 사고의 주된 책임자인 삼성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었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에 대한 주민과 환경시민단체의 비판이 이 시기의 주된 이슈였다.

사고 이후 우선적으로 제기된 이슈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신속한 방제작업이었다. 유출된 기름을 신속하게 방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은 모두의 관심사였고,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는 공공의 비판 대상이었다. 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던 만큼 초기 대응 실패에 따른 비판은 정부가 재난이 종결될 때까지 안고 가야하는 문제로 남게 되었다.

응급복구 시기에 떠오른 다른 공동의 관심사는 바로 자원봉사자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는 일주일 여만에 희망의 상징적 기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시기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환경시민단체였다. 이들은 다방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는데, 우선 정부의 초기 대응과 방제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책임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를 감시·비판하며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책임문제를 지적했고, 나아가 단일선체 유조선 사용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배경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시민방재활동을 펼쳤고, 피해에 노출된 야생동물들을 구조하는 데도 앞장섰다. 언론 역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비판하며 신속한 방제작업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고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보다는 자원봉사 관련 보도에 집중하여 사고의 책임 규명과 피해복원·피해주민 지원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제2기에 이르러 삼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삼성 대 피해주민 및 환경시민사회단체의 갈등 구도가 강화되고 갈등의 강도도 극단적으로 높아졌다. 2008년 1월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생활고는 깊어져갔고, 갈등이 대외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피해주민들이 잇달아 자살하면서 정부를 질타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삼성의 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삼성과 피해주민·환경시민단체 사이의 갈등도 격화되었다. 언론은 자원봉사자에 계속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계난에 직면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의 원인과 책임규명, 사후 대책 등 구조적 쟁점들은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렀다.

제3기에 이르러 생계비 지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은 마을 간, 마을 내 주민들 사이로 전이되었고, 태안군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폭발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은 점차 분산되고 약화되었다. 갈등이 공동체 내부화되면서 공동체는 약화되었고, 이는 다시 가해자에 대한 저항의 약화로 이어졌다.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동체의 해체는 가속화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저항의 구심력도 형성되지 못했다.

이 시기에 가해자·관리자·피해자 사이의 역학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삼성중공

업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여 활동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피해주민과 환경·시민단체의 활동공간과 힘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피해주민과 환경·시민단체는 견고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넘어서지 못했고, “2003년 보충금협약” 가입이나 이종선체 의무화 조기 실시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의 특성을 우리는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 내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정부, 기업, 법원은 특별법 제정, 예산 지원, 재판 등 법적, 제도적 시스템 안에서 갈등을 장기적으로 풀어나가는 전략을 추구했다. 이러한 행위는 체계의 논리로서 합리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남아있게 된다. 우선 화폐로 환산될 수 없는 자연의 피해, 즉 생태계의 죽음이다. 둘째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맨손어업, 무자료 거래와 같은 경제 행위가 피해배상에서 배제된다. 셋째는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 피해도 제도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 환경재난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제도화는 이러한 문제를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체계 밖으로 내보내 버렸다. 그 결과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끼리 갈등하게 되고 해체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공동체 내부로 전이된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환경재난의 가해자가 재난피해의 일부를 시스템 안으로 제도화하고 나머지를 시스템 밖으로 내보낸 결과 공동체는 내적 갈등에 휩싸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3) 사회갈등의 제도화/내부화의 원인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 이후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고로 인한 생태파괴이다. 그러나 생태파괴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심화되고 확산되었다. 이것의 특성을 우리는 제도화와 배부화로 설명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로 가해자인 삼성이 재난의 책임을 법적, 도덕적으로 온전히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은 사법제도 안에서 법적인 책임은 최소화하고 도의적인 책임은 돈과 회유(자매결연, 여름 휴가 보내기 등)로 해결하는 전략을 폈다. 피해주민들은 갈등이 사법제도와 배상체계 안으로 제도화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삼성중공업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회유전략에 부분적으로 포섭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정부의 재난관리와 갈등관리 능력의 부족이다. 정부는 재난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대응에도 실패했다. 극단적인 불확실성과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매우 미숙했다. 그러나 정부의 능력은 2008년 중반 이후 다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8년 하반기 설문조사에서 사고

직후에 비해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갈등의 해결과 관리책무를 법원이라는 다른 국가기구에 전가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긴급생계비 지원에 무능했으므로 갈등을 공동체 내부로 전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태안 주민들의 사회적 신뢰와 연대가 약했기 때문에 갈등이 내부화되고 심화되었다. 알래스카의 엑스 밸디즈호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 공동체는 해체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 예상보다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된 상황에서 태안 주민들의 사회적 연대의 힘이 강했다면 극단적인 공동체 균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약화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산업화 이후 농촌, 어촌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신뢰의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가족 중심의 경제, 문화 구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재난은 공동체의 균열과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넷째, 태안 지역 시민사회운동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환경시민단체와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와 삼성에 대한 갈등구도가 형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갈등구도 형성에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태안의 기적'이라는 상징을 프레이밍한 언론이 주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우리는 이 글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의 동학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기별 갈등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사고 이후의 갈등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고 그것을 응급복구시기, 갈등 폭발 시기, 그리고 갈등의 제도화/내부화 시기로 이를 붙였다. 사고 이후 초기에는 피해주민 등 당사자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갈등이 폭발하지 않았으나 약 한 달이 지난 후부터 갈등이 조직화되고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후부터 갈등의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사회제도 안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공동체 내부의 갈등으로 전화되었다.

행위자 별로 갈등 행위와 담론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는 갈등의 관리자, 중재자로서 재난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입법, 사법, 행정 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데 관심과 자원을 집중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난관리와 갈등관리에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 결과 생물학적,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경험해야 했다. 정부는 생계비 지급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미숙하여 공동체의 내부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능력 부족은 역설적으로 갈등을 제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내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삼성은 사법제도 안에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사회에서는 한편으로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방재활동'을 벌이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매결연, 기금지원, 민박 등의 행위를 통해 도덕적 비난을 피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국가와 삼성의 갈등의 제도화 전략으로 가해자의 책임

은 체계 안에서 사라지고 세금납부자인 국민이 피해를 부담하는 '피해자 부담의 역설'이 현실화되었다.

환경시민단체는 생태계 피해와 재난 예방,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노력했고 국가와 삼성의 책무를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와 태안의 기적'이라는 프레이밍에 갇히고 피해주민과의 연대를 유기적으로 이루지 못해 사회제도를 넘어서는 개혁과 구조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피해 주민들은 초기에는 분노를 자원으로 강력한 집합행동을 조직할 수 있었으나 국회 입법,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급 등의 사건 이후 자원동원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들의 자원동원 능력 부족은 공통의 가치 부족, 이익을 위한 제로섬 게임, 통합적 리더십의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재난으로 인한 갈등이 제도화/내부화한 원인으로는 국회의 특별법 입법, 법원의 소극성, 정부의 '무능의 능력' 등 국가의 제도화 노력과 삼성의 제도적 책임회피와 사회적 회유 전략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공동체적 신뢰와 리더십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1991년 낙동강 폐물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모든 국민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가해 기업은 심각한 손실을 경험했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했다. 이로 인해 환경단체들의 새로운 리더십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16년 후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모든 국민은 자연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서해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가해 기업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의적 책무 수행도 게을리 하고 있다.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새로운 리더십은 형성되지 않았고 피해주민들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와 태안의 기적' 프레이밍은 '우리 공동의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상징을 살리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실제로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데에는 실패했다. 자연과 피해자의 고통은 사회제도 밖으로 외부화되고 갈등은 공동체 안으로 내부화되어 해체의 위기에 처해있다.

[참 고 문 헌]

- 구도완. 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 구도완, 김도균, 이정림. 2008., “순환체계의 붕괴”. 한국환경사회학회, 시민환경연구소.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영향』.
- 김도균·이정림.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섬 주민들의 삶의 변화”. 『환경사회학연구 ECO』 12(2): 119-152.
- 노진철. 2008a.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대응과 재난관리의 한계”.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43-82.
- 박재목.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7-42.
- 박태순. 2008a. “서해안 유류피해사건 관련 갈등분석과 평가”.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 유류 유출 피해지역의 미래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
- _____. 2008b.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태안 지역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특징”.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2008 태안국제환경포럼 초청세미나 자료집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 이재열 외.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태안군 석포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미발간 연구보고서.
- 이시재. 2008a.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향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109-144.
- _____. 2008b.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적 영향 연구”. 2008년 후기 한국사회학대회 발표문.
- Adger, W. N. 2000. "Social and Ecological Resilience: Are They Relat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3): 347-364.
- Bruhn, J. G. 2005, *The Sociology of Community Connections*. Springer.
- Dyer, C. L., D. A. Gill, and J. S. Picou. 1992. "Social Disruption and the Valdez Oil Spill: Alaskan Natives in a Natural Resource Community". *Sociological Spectrum* 12:105-126.
- Edelstein, M. R. 1988. *Contaminated Communities: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s of Residential Toxic Exposure*, Westview.
- Erickson, K. 1976. *Everything in Its Path: Destruction of Community in the Buffalo Creek Flood*, Simon and Schuster.
- _____. 1994. *A New Species of Trouble: Explorations in Disaster, Trauma, and Community*, W.W. Norton & Co.
- Freudenburg, W. R. 1997. "Contamination, Corrosive and the Social Order: An Overview". *Current Sociology* 45(3): 19-39.
- Picou, J. S. B. K. Marshall, and D. A. Gill. 2004. "Disaster, Litigation, and the Corrosive Community". *Social Forces* 82(4): 1493-1522.
- Rodin, M., M. Downs, J. Petterson and J. Russell. 1992. "Community Impacts Resulting from the Exxon Valdez Oil Spill". *Industrial Crisis Quarterly* 6: 219-234.

<시사인>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태안시대>

<태안신문>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피해지역의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김검훈(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소장, 한남대 교수)

I. 서론

2007년 12월 7일 새벽에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조선 소속의 대형크레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원유량은 78,906배럴(12,547kl)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중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가장 크다. 우선 국내 유일의 태안해안 국립공원을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을 행정구역의 중심으로 살펴보면 태안군 전체와 당진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일부 등 6개 시군이며, 해당 주민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고해역에서 연안어업과 해변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소득산출의 핵심적 수단삼아 생활해온 어촌지역민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고발생 이튿날부터 소득산출의 기반을 상실함에 따라 가계수준의 경제적 곤궁함은 물론 수산물거래 단절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붕괴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여파가 현재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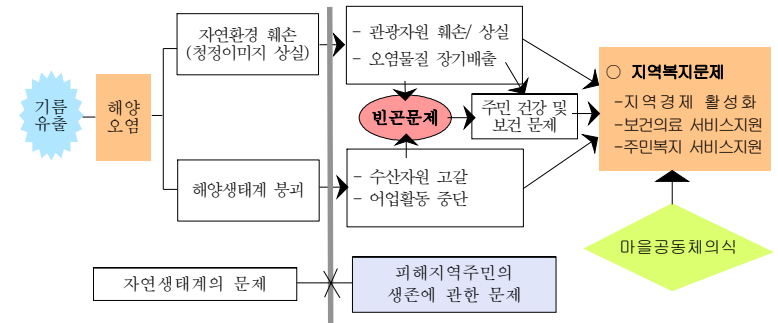
또한 지역주민의 심리적 피해상황도 심각한 실정이다. 청정한 해양 및 해안의 환경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여 파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을 상실함으로써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곤 하였다(녹색연합, 2008). 특히 유출된 유류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지역주민은 물론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던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이와 유사한 사고의 전례에서 보듯이 상당기

* 이 원고는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의 2008년도 "유류오염 피해지역주민의 지역경제보건의료사회복지부문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용역과제 결과보고서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간 후유증을 동반할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이번 사건으로 구성원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돈독해 지기보다는 상호 이해의 불일치로 인하여 균열과 의견충돌의 빈도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 및 증폭되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생활공동체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훼손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의 와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진전될 개연성이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주민이 생활공간에서 형성되는 상호관계가 붕괴됨으로써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2차적인 사태로 확산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보상이 책임자 공방에 따른 정치적 논리에 좌우될 수록 주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어 상실감을 갖게 되고, 재난극복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전통적 생활터전에서 1차산업 중심의 생산양식에 의존하는 생활방식으로 생활해 온 지역주민들은 바다환경의 심각한 훼손은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생활공동체 내부의 구성원간의 갈등과 생산수단의 상실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삼각과도는 피해주민들로 하여금 최악의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의 붕괴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여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림 1> 해양오염사고가 지역주민의 삶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에 피해주민들이 사고의 고통으로부터 하루 빨리 벗어나 사고이전의 상태로 회

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수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사고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적 물적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지역주민들은 당장의 생활과 생존방법에 대한 기본적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대안도 무의미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적 배경으로부터 본 연구는 유류유출로 야기된 해양오염이 연안어업 및 파생적 경제활동을 생활기반으로 해왔던 태안지역 주민들에게 끼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그로 인해 파생된 피해들을 주민복지적 관점에서 경제와 의료 및 사회 복지 부문에 대한 실증적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복원의 기반을 형성할 대안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핵심 조사영역을 지역경제부문, 의료복지부문, 지역사회복지부문 및 마을공동체부문 등 4개 영역으로 세분하여 영역별 직접 피해 및 파생적 피해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연구가 갖는 핵심적 의미는 ①피해내용과 주민의 일상생활(개인/공동체) 및 복지 욕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초자료의 획득과 ②종합적 관점에서 이들 변수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에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는 피해지역이 유류유출사고로 초래된 해양환경오염의 피해가 복구 및 회복되는 데에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제공될 정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수요에 대한 실증적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II. 조사연구의 설계

1. 연구범위

본 조사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발생시점인 2007년 12월 7일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로 하였다. 그 이유는 유류유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지역주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이므로 그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나타나는가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구의 대상범위는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지역 주민과 공간적 범위는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1, 2구와 방갈리 1, 2구로 한정하였다¹⁾. 이와 같이 대상범위

1) 조사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제1조사지역인 원북면 황촌리의 경우 총인구는 393명이며, 남자 192명과 여자 20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사지역인 원북면 방갈리의 총인구수는 490명이며, 남자 253명(51.6%) 여

를 한정한 이유는 연구기간 및 연구에 소요될 인적 물적 재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언론 보도와 현장에 대한 기초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발생 이후 다양한 차원의 복합적 현상들과 피해자들 간에 야기되는 갈등현상이 마을공동체 내부 구성원간은 물론 단위공동체 사이의 대립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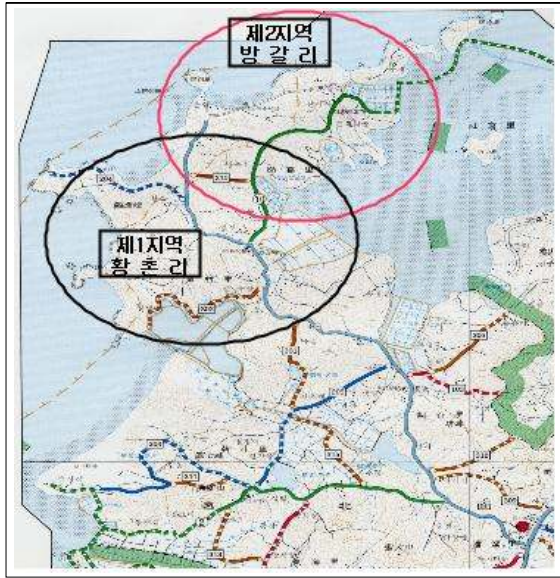
이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피해는 물론 다량의 유독성 물질로 인한 신체적 피해도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피해현상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복합적 현상으로 악화되어가는 상황이다.

둘째, 각종 피해현상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적 여건 및 의존도, 지리공간적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대상 및 내용의 광역성으로 인하여 본 과제의 시간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 영역에서 집중적이고 심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황촌리의 경우 농업을 주요한 생산수단으로 하되 물때(사리 등)와 농한기에는 바다에 나가 굴이나 바지락 등 해산물을 채취하여 획득한 소득이 각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 즉 전형적인 맨손어업활동을 통한 소득활동의 사례이다. 특히 황촌리 역내에 위치한 구례포 등 해수욕장은 여름해수욕철의 관광수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방갈리 역내에는 원북면의 가장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학암포가 위치한 곳으로 관광업과 어업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주민이 다수 생활하는 지역이다. 학암포해수욕장에서는 20여개의 장급여관과 다수의 민박집이 있으며, 회집 등 여러 상가들이 밀집되어 4계절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업종사자들은 주말 바다낚시 출조에 어선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있다.

이 밖에도 두 지역의 내륙에 위치한 주민들은 이번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간접피해자들로 어떤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237명(48.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갈 1리는 인구수가 205명이며, 남자 104명(50.7%)과 여자 101명(49.3%)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갈 2리(학암포해수욕장 포함)는 인구수가 285명이며, 남자 149명(52.2%)과 여자 136명(47.8%)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조사지역의 공간적 특성

셋째, 내용적 범위는 획득 자료의 구체성과 심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관계 등의 차원에서 주민복지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사항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본 조사연구가 주민복지 욕구에 대한 질적 자료의 획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각 영역별 조사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질적 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사과정에서의 조사영역의 여건과 자료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가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내용과 일상생활(개인/ 공동체 차원) 및 복지서비스 욕구 등이며, 이들 변수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에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분석은 연구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 기존 연구자

료 및 국내의 문헌과 논문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지역사회의 여건이나 관련 자료가 내재되어 있는 문헌을 탐색하고, 지방정부차원의 공공부문에서 운용되고 있는 주민복지서비스 관련 기존 서비스와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을 파악하여 지역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본 조사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FGI, 심층면접, 문서 등 서지자료 및 시각자료 활용 등을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본 조사연구가 피해지역민의 지역복지서비스 욕구 및 수요에 관한 조사이므로 피해내용과 주민의 일상생활(개인/공동체) 및 복지욕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지역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서비스도 주민과 정부 간의 불신과 오해로 인하여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피해주민의 경우 자신들의 피해상황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 자료도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본 조사연구는 조사활동을 통해 피해현장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내밀하고 잠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객관화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 및 인과관계를 밝혀봄으로써 문제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구성원들에 대한 정서적 접근이 요구되는 탐색적 연구이며, 현장의 경험을 역동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즉 조사대상의 특성이거나 여건 및 조사내용을 고려할 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에 대한 정서적 접근이 타당하다. 즉 잘 알려지지 않아 막연한 인식수준을 넘지 못하는 맨손어민의 피해내용 및 규모와 같은 내용의 조사인 경우 탐색해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요구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에서는 역동적 조사활동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FGI는 피해지역의 여건과 주민간의 친소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주민을 5-7명 단위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개인적 차원의 피해내용과 개인 또는 공동체 생활에 미친 영향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진술을 유도하여 그 과정에서 본 연구진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코자 하였다. FGI의 경우 상호 진술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바로잡음으로써 풍부한 정보의 도출이 가능하고, 마을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에 대한 원인과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의 획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심층면접은 FGI에서 나타난 피해내용,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직전접적인 피해현상 및 복지수요 등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필요할 경우 보완적 수단으로써 활용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한 부문에 관한 자료의 구체화는 물론 인과관계의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심층면접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을공동

체 내의 갈등구조 및 본질적 이해관계 등을 규명하고 도식화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연구절차

선행연구 및 국내외의 유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유류유출 지역 복지 수요 및 욕구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연안지역에 위치한 한국적 어촌마을의 인문사회적 특성이 해양오염의 피해형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으로 촌락 및 주민생활에 대한 기초연구를 선행하였다.

유류유출 피해지역 주민이 본 조사연구의 핵심적 대상이지만 조사내용의 확인 및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도 병행하였다.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는 사회인류학적 분류기준과 지리 공간적 기준 및 피해특성별 기준 등에 따른 범주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질적 조사연구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정보의 획득상황을 고려하여 임의적 대상자선정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관련 담당자는 면단위의 최일선 행정조직의 공무원 집단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태안군 및 도 소속 공무원 및 중앙정부 소속의 공무원 등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대상별로 습득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각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부문별 복지서비스 욕구 및 수요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I. 지역경제 차원의 분석 결과 및 검토안

1. 경제적 피해규모와 추정방법의 한계

1) 피해규모의 추정

이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피해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나 합의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 특히 피해규모 산정결과는 향후 오랫동안 직·간접적으로 유사사고에 대한 처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나뉘고 있다.

녹색연합은 약 3조원 이상규모로 추정한다. 즉, 주민들의 수산, 관광, 상업 등에서의 피해, 공무원,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방제비용, 국립공원의 환경복원 비용 등 서

해의 피해를 합산하였다(2008.5.29). 경기개발연구원(2008)에서는 약 1조 3,137억 원으로 추계한다(유영성, 2008.6). 이 방법론은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 자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조건부 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하였다. 즉, 이번 사고와 같은 규모의 해양오염이 앞으로 10년에 1회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이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세금을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은 추정 피해액을 최대 5,735억원으로 추정하였다. 근거로서는 방제작업의 지연과 이에 따른 조업활동의 지연, 태안지역 생산 수산물의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 관광객 감소이다. 분야별로는 방제활동분야 1,345억원, 수산양식분야 2,060억원, 그리고 관광분야 2,330억 원 등이다.

<표 1> 태안지역 피해규모 추정

구분	인원	연간수입 및 가치(만원)		최소생산 (억원)	최대생산 (억원)	감소율	IOPC추정 (억원)	추정 (억원)
		최소	중간	최대				
맨손업	· 8,204명 · 14,805명	최소	1,800	1,476	2,664	77%	2,060	1,136~ 2,051
		중간	2,700	2,215	3,997			
		최대	3,000	3,997	4,441			
수산 및 양식분야		1,306					1,005	
관광업	1,369만명	33,933원/1인	4,645			88%	2,330	4,085
환경 부문	방제분야 4,648ha	1,098/1ha		510			1,345	-

- 주1) 맨손업의 경우 거의 신고가 되지 않았음을 가정하고 중간소득으로 가정함
- 주2) 환경(갯벌)피해는 태안지역만 계산 함
- 주3) 어획고 감소율 기간은 2007.12~2008년 7월
- 주4) IOPC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전체에 대한 피해규모 산정임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기관들의 피해 사정과는 별도로 나름대로의 피해규모를 추정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업 관련분야의 피해액 추정치이다. 2008년 여름휴가기간 중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88%가 급감했다. 즉 전년대비 1,204만 명이 감소했다. 태안해안을 방문한 방문객의 1인당 지출금액이 3만 3,933원이다. 2006년도 태안관광객 숫자에 1인당 지출금액을 곱하면 총 4,645억 원 규모이고 여기에 감소율을 계산하면 4,085억 원으로 계산된다.

둘째, 수산업 분야의 피해액 산정치이다. 수산업의 경우 2006년 기준 1,306억의 생산고에 최근 8개월간의 어획고 감소비율 77%를 계산하면 1,005억 원이다.

셋째, 맨손어업의 피해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보수

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감소비용을 계산하면 1,136억 원이다.

넷째, 갯벌(환경피해) 피해는 태안군 피해면적이 4,648헥타이고 ha당 가치 1,098만 원(2)을 계산하면 510억 원이다.

따라서 태안군 2008년 한 해 동안 총 피해규모는 약 7,456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3).

2) 피해규모 추정의 한계점

어떤 사건으로 인한 피해추정은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사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대상마다 상황이 다르고, 특히 환경피해사건의 경우 사고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기간 추정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간산정과 피해주체들에 대한 각각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의 영향으로 인한 그 지역의 이미지에 미칠 영향과 같은 비가시적이고 잠재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추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전 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가치파악이다. 이는 피해산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소 3개년의 생산물 가치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수산업의 경우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균치를 계산해야하기 때문이다. 각종어류의 시장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둘째, 태안지역이 관광산업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광분야 피해민들의 소득구조가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전 3년간의 태안군 어업과 관광업 및 농업 등의 소득수준을 가구별, 영위 업종별 등 종류별로 정확히 추정하여야 한다.(4) 소득구조파악은 차후 보상금 수령과 그 분배에도 핵심적인 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지만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각 피해자의 금융기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도 된다.

셋째, 사건의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4년 이상은 산정해야 한다. 3년의 기간은 전복이나 굴을 양식하여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다. 환경생태복원의 기간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식의 주장을 통해 미래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2) 갯벌의 1헥타르 경제적 가치는 해양수산부 2000연보, 이홍동(2001)은 갯벌의 수산물 생산가능, 어류 서식지 기능, 정화기능 및 심미적 기능을 감안하여 1헥타르(ha)당 약 2,025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추정한다.

3) 이 피해규모 산정에서 방제비용은 태안지역의 피해가 아니므로 제외하였고, 향후 복원비용은 추정이 불가하여 제외하였다.

4) 모든 어업인 및 어업 관련업(어류가공업, 수산식품가공업, 급유업, 열음사업자, 생선운반업, 수산물 창고업, 소매상)이다. 관광분야의 숙박업(호텔, 콘도, 펜션, 민박 등), 요식업(횃집,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등), 해수욕장 시설(야영장, 주차장, 대여업, 보트 등 놀이기구 등), 유어업(낙시배, 낚시도구 판매업), 편의시설(편의점, 슈퍼마켓, 관광 상품 판매업 등), 목욕시설(해수탕, 찜질방 등), 기타시설 등이다. 또 기타업종은 건물임대업, PC방, 커피숍 등

불합리 하다.

넷째, 미래가치추정에 있어서도 각 분야별로 영향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 미래가치 추정이 되어야 한다. 가령 사건으로 인한 어종별 감소와 이에 따른 시장가치의 손실, 해수욕장, 갯벌생태계 등이다.

다섯째, 환경피해에 따른 향후 복원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OPC피해규모산정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생물에서 대형어류에 이르는 먹이사슬의 파괴는 자연 그대로의 자생력으로 복구되려면 최소 10~20년은 소요된다(녹색연합,2008).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직접적인 피해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브랜드가치 혹은 이미지 가치 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물론 태안이라는 특정지역만의 배타적인 브랜드를 가치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청정해역, 해안국립공원에 대한 이미지 손실 등이다. 결국 브랜드가치하락은 관련 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5)

일곱째,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포함해야 한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지역의 가공물을 생산하는 업체의 예상피해규모, 도산 및 종업원의 실직은 물론 주민의 건강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6)

여덟째, 피해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도 피해규모에 합산하여야 하고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정신적 피해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적절한 위로금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7)

2.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발전방안의 문제점

태안주민들이 이번 유류오염사건이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 65.4%가 "경제적 지원 및 보상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28.6%가 "경제 살리기 캠페인의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1월 태안지역 신용카드 매출액이 음식점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37.7% 수준으로 감소하

5) "태안?, 이미지가 말이 아니, 전국 방방곡곡에 대고 웬 종일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 대니 그 결과는 태안지역은 오염지역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2008.9.19, 구례포, K씨)

6) "눈도 따갑고, 머리가 아프고, 어질어질하요. 여기, 이것 보면 알잖어요? 여기 이 피부가 별정계 타고, 가렵고 해서 피부병이 나오. 잠도 잘 오질 않고..."(2008. 6.21, 근흥면 L씨 등, 대부분어민)

7) "내가 봐도 기름유출사고가 날 땐, 그전엔 바다가 파랗더니 요새는 시커매보여. 내가 살면서 컸잖아요, 그니 서울사람들이 어떻겠나 이 말이야. 마스크만 든던 사람들이, 내가 봐도 아까 꽃도 시커매 보이고 다 시커매 보이는데. 바위도 시커매, 바위가 원래 시커매데 시커매 보이는 거야. 다. 참엔 무섭더라고. 나중엔 겹도 나고, 가슴이 울렁거리"(2008.4.20, 학암포, K씨)

였고, 숙박업도 61.2%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태안신문, 2008). 아울러 앞서 언급한 피서객의 급감은 우려했던 바대로 태안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사건의 심각성 및 불확실한 미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주민으로 하여금 매우 다양한 요구사안을 표출 하도록 하였다. 그간 논의된 모든 도로망의 건설, 관광산업, 산업단지, 건강 및 교육, 기금 및 보험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사안, 자금지원, 제도개선 등을 이 시점을 통해 일거에 정치적 관점에서 관철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요구한 모든 사안들이 그동안 태안지역에서는 필요한 것임을 전제로 해보면 이와 같은 사업들은 우리나라 모든 어촌 마을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즉 간단하게 제도의 개선만으로 필요한 것이면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재정이 크게 투입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면밀한 타당성과 함께 예산 및 재원조달 방식과 투입에 대한 효율성 검증이 필요한 것들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며 설득력도 약하다. 따라서 많은 요구사안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 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이 중요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1차적이다. 그리고 향후 3~4년간의 생활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 이후 태안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한 이후 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한 지역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철저히 계획된 개발이 아니면 특색 없는 지역, 혼잡한 지역으로 전락함은 물론 난개발이 충분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는 친환경 생태관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산업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매우 당혹스러운 내용도 있다(<표 2> 참조). 국립공원 축소와 파괴가 우려되는 사안들도 있다. 이미 시 의회에서는 사건 초기 그와 같은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외형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 관광인프라구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대부분 건설관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특히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건설관련 사업들은 지역민원에 기준해서가 아니라 매우 정밀한 절차를 통하여 산업연관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계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표 2> 태안지역의 지역경제회생 프로젝트관련 주요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SOC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 ~ 당진 간 고속도로 태안연장 · 국도32호선 확장사업 조기 착공, 국도 77호선 특별지원(태안읍↔만리포해수욕장) ·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 : 서산산업단지와 태안 관광단지를 연결, 충남 서북부권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및 낙후지역 개발 · 해안선 경관 순환도로 등의 개설 : 신두리-의항2리-천리포-만리포-모항항-파도리 간 해안경관 순환도로 개설; 신두리해수욕장↔의항2리간 다리개설; 안흥 마도↔파도리 연륙교 	정책 사업
관광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항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실시 · 『모항항&만리포, 천리포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 모항항 복합 다기능항 개발(마리나, 관광, 테마파크 등) · 안흥 다기능항(특별지원). 안흥항을 대중국 관광교류 전초지로 개발 · 아쿠아월드(대형수족관, 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형콘도 및 호텔유치 ·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 · 『도·농교류센터』 설치 · 태안군 관내 어촌어항법에 의거 환경개선사업 · 국제행사 개최 : 피해지역이라는 이미지 개선, 군민들의 단합 등 국제관광엑스포, 환경엑스포 등 국가 주관 유치 	정책 사업
산업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 농업진흥지역 및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 범 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건립 · 이원간척농지 지구내 에너지특구와 연계한 경제 산업발전특구(친환경 산업 유치 및 신 성장 동력원 유치)지정(이원간척농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첨단산업 육성) 	제도 개선
건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 개선 :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신설 및 국책 연구기관 등 설립 · 유류피해 전시장 건립 : 유류 피해 상황과 방제활동, 생태계복원 등 교육·홍보·전시·체험시설을 두루 갖춘 종합전시관을 건립, 제2의 유류피해가 없도록 경각심 제고 · 종합병원 신설 : 종합병원 설립을 통한 군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혜택 	정책 사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 지정 및 축소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제도 개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비 지원 · 피해 지역민에게 재원확보를 통한 연금 지급 · 만리포 및 천리포 관광지개발특별사업비지원 	자금 지원

자료: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2008), 삼성유류피해지역민살리는특별법(안), 특별법(안)정책패키지 지원방안.

보다 근본적인 접근은 환경과 관광의 공생관계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태안군에서 지향하는 미래전략을 기본 틀로 하고 이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주변지역의 환경 및 산업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태안군에서는 타당한

것이라 하여도 다른 지역과 연계하였을 경우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가령, 관광산업과 첨단 에너지산업화가 장기적 계획이라면 위에서 요구되어지는 많은 사업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호텔 및 콘도 유치 추진 등이다. 이는 새로 건설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감안해야 한다. 즉, 피해지역과 멀지 않은 남면에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새 도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다른 컨셉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과 경쟁을 하고자 하는 전략은 하위 전략이다.

관광-레저 기업도시는 태안지역을 3차 산업으로 이끌어 갈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군내 및 주변지역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계획한 대로 진행 된다면 2012년 이후 약 5천여 개의 초호화 객실과(최고급호텔과 콘도), 골프장 및 각종 위락시설 및 해양공원 등이 들어설 것이다. 이 경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되고 각종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마트(mart)가 들어섬에 따라 마을에 생존하고 있던 슈퍼마켓이 사라지고 기존의 재래시장이 죽어가듯이 태안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지역과 주변을 황폐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핵심은 차별화가 필요하다. 태안의 해안은 단순히 드라이브 코스로 전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로를 확장하기 보다는 옛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태안 해안의 특색을 충분히 감안한 차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다음은 <표 3>의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 요구사안들이다. 수산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실현 가능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 및 중기의 생계대책 마련에 근접한 것들로서 특히 피해가 집중된 업종인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능한 분야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분야도 앞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수산분야는 생산기반구축에 중심이 되어 있다.

가령 태안지역의 수산물 가공시설 혹은 산업이 매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 연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함에 따라 태안지역의 2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물론 전체적인 지향이 3차 산업으로 전이 되어가는 추세이고 관광산업으로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에서 2차 산업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산업은 유지되어야 관련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또 다른 인근산업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수산물 가공 산업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표 3> 태안지역 수산분야 지원요구 사안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생산기반구축 및 시설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가공 공장설치 지원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HACCP시설 갖춘 가공시설 및 가공공장 설립 · 마을어장 파조류 방류사업(바다목장사업, 태안중부, 북부확대지원) · 해상 양식어장 시설물 현대화 사업지원 · 수산위판시설(공판장)사업지원 ; 수산물유통, 수산물유통자금 지원을 통한 수산물 위판장 시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냉동·냉장시설 · 노후어항에 리모델링, 유지, 보수, 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수립 촉구. · 해양수산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태안군과 직접관련 사업) : 해양생명공학,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문화 및 수산 등 6개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자금지원 	자금지원
기금 및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발전기금(융자사업,경상사업 등) · 서해유류피해자 신용보증법의 제정 : ① 재정피해 주민들에게 대출형식으로 지원 ②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근거 ③ 지원한 자금과 성금 등 우선 확보한 자금을 출연금을 기금으로 확정해 운용 ④ 장기적으로 정부가 사고 가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피해 배상 방식을 통해 수 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이 지역의 수산자원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 담보와 신용력이 부족한 이들 유류오염 피해자의 생계비 대출금 목적으로 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의 범위확대 및 보상수준 확대 : 유류피해 포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10~15%에서 70~80%까지. · 선박검사수수료를 전액면제, 기타검사(유어선) · 연.근해 어선원 건보료 50% 인하 	제도개선
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흥-파도리간 , 의항-신두리간 연육교 건립 · 대규모 수산자원센터 건립 및 마리나, 테마파크 건립 · 국제수산박람회 개최, 각종 국제행사 유치, 컨벤션센터 건립 · 어촌체험마을 	정책사업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채취관련 사업 재검토 : 건교부에서 모래 개별채취에 대한 사업과 관련하여 권한 위임을 피해민단체로 한정하며, 그 수입재원의 사용은 환경복원과 관련하여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에 위임 	수익사업

자료: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2008: 삼성유류피해지역민살리는특별법(안), 특별법(안)정책패키지 지원방안-, 법률대책회의.

아울러 활어 상태보다는 가공 상품이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한편 농어촌 체험마을의 육성은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해 볼만하다. 주의할 점은 이 부분도 태안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족히 몇 년 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특히 2006년 현재 태안군의 재정자립도가 26.6%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철저한 현지 조사와 사업과급효과 및 투입산출에 의한 효과까지를 감안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안지역 장기비전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IV. 보건 의료 차원의 분석 결과 및 검토안

1. 원유유출사고의 신체적 심리의학적 영향

1) 신체적 위해

대규모 원유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헥산, 벤젠, 톨루엔 등과 같은 휘발성 탄화수소류 물질의 30% 정도가 대기 중으로 휘발된다. 이로 인해 사고지역내 사람들의 호흡 자극 등의 급성 영향과 반복 노출에 의한 두통, 현기증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VOCs 중 건강에 가장 위해가 되는 것은 벤젠이다. 또한 정제되지 않은 원유이므로 타르볼(아스팔트 주원료)과 같은 점성이 높은 원유 성분이 인근 해안가로 이동되면서 피부 접촉에 의한 급성 피부 자극이 유발될 수 있다. VOCs에 의한 만성적인 위해의 예로는 중추신경계의 장애와 말초신경계의 장애를 우선 들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의 장애로는 VOCs에 의한 비특이적인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인 신경행동학적 장애를 들 수 있다. 증상으로는 감각이상, 시각 및 청각장애, 기억력 감퇴, 작업능력 저하, 수면장애, 혼돈, 신경질, 불안, 우울, 무관심 등의 정서장애와 사지무력감, 조화운동의 저하, 피로 등과 같은 운동장애인데, 급성 중독과 달리 신경세포의 병리조직학적 변화에 기인되는 비가역적인 현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일부의 VOC는 말초신경장애를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 이황화탄소, 노르말 헥산, 스티렌 등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말초신경계 장애를 가져 올 수 있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부위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무감각 내지 이상 감각인데 마치 장갑이나 양말을 신듯이 점차 진행된다(대전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UNDP국가습지사업단, 2007.12.5). 또한, 고농도의 벤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증상의 유발사례를 고려해 볼 때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입한 자세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건강에

무모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다급한 재난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방재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고무장갑만을 끼고 방재현장에서 작업했기 때문이다. 방제작업을 며칠 혹은 몇 주간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안전의 기본조건인 중간 휴식조차 거의 없이, 거의 하루 종일을 타르 덩어리 제거에 전념하는 강행군을 감행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주민과 자원봉사자 사고 초기에 다량으로 유출된 원유로부터 방출되는 고농도의 휘발성 유독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필연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받았을 것이다(손영수, 2008: 86-87). 특히 이와 유사한 사고의 경우 발생 후 5일내에 유출된 원유량의 40-50%가 증발한 것으로 추정할 때, 초기 방제작업 투입자들이 특히 고농도의 유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신문, 2007.12.21).

2) 심리의학적 스트레스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경우에도 주민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정도의 심리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심리적 충격은 급성기의 문제만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다른 모습으로 주민들의 심리의학적 건강에 만성적 형태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만성적 심리의학적 위해의 대표적인 예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⁸⁾가 있다.

5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생명인권운동본부가 2008년 2월 16~17일 이틀간 태안주민 325명(태안군 소원면 모항, 법산, 의항, 송현, 소근, 신덕리)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8.03.04. 미디어다음). 이 조사에 따르면 태안주민 10명 중 2명꼴로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의 62%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심각한 수준이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주민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49.7%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소견자 중 80.1%) 이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적인 심리의학적 스트레스의 피해자 중에서 이상조건 중에는, 우울증 소견을 보이는 사람이 44%, 강박장애 39%, 불안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28%로 각각 조사되어, 대조군에 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4.1배, 적대감은 11배, 강박장애와 불안장애는 약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자살충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1주일동안

8) 급격하고 심각한 충격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반응인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PTSS)은 충격후의 일반적인 심리적 체험으로서 6일-6개월 이내에 보통 회복된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이고 심각한 후유장애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충격 후 2일-3개월 후부터 나타나서 3년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만성적·장기적 문제를 남겨 인격을 황폐화시킨다(최남희, 2006: 4-16).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63명(20%)로 이들 중 41%(65명)가 하루에 한번 이상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충동의 이유는 90% 정도가 '기름유출사고후의 경제적 문제'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유의 문화에 기인한 화나 홧병의 형태로 잠재해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표출되는 것을 현지 주민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태안주민의 심리의학적 병리현상에 대한 분석결과

1) 영향요인

본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태안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심리의학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사실은 이들 주민들에게 재난이 직접적으로 주는 심리의학적 충격에 대한 급성 혹은 만성적 문제점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홧병⁹⁾으로 발전할 잠재적 요인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심리의학적 병리현상에 대한 우려는 주민들과의 FGI 및 심층면접의 녹취록으로부터 추출한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예견되는 장면이나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로 인한 직접적 심리의학적 충격의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여겨온 바다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린 처참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의 결과이다. 이러한 충격이 분노이나 소통 등의 방법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가슴속에 남아서 홧병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손해배상 대상 소득증명 절차와 보험회사 관계자, 지루하게 진행될 소송 등에 대한 답답함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사고 초기단계의 의료지원체계의 부재에 대한 실망감과 의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작용하고 있다.

넷째, 주민이 받은 마음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고, 생색내기과 기계적인 조사목적 위주의 복잡한 심리건강 테스트에 대한 반감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특별법제정 등 보상관련 사안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및 공무원의 전시행정적 무뇌아적 대응에 대한 강한 실망감이 심리적 스

트레스를 악화시키고 있다.

여섯 번째, 사건발생으로 황폐화된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현지에 남아 있어 이 꼴 저 꼴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저지에 대한 자괴감과 보상을 노리고 덤벼드는 주변의 보상병자들에게 대한 적개심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있다.

일곱째, 보상대상 선정 및 등급분류 기준의 미비와 미흡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행정행태에 대한 불만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자극하고 있다.

여덟 번째, 구호품의 불공정한 분배와 전시행정에 대한 분노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자극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의 국립공원 관리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 전시적(쓰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실망감과 거부감, 정부차원의 체계적 의료서비스의 부재에 대한 불만, 허울뿐인 주민에게 감동이나 실질적 이득이 전혀 없는 공청회 개최에 대한 반감, 사고원인 제공자인 삼성에 대한 불만과 분노 등이 피해주민들의 화를 자극하여 홧병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심리의학적 반응으로서의 병리현상

주민들이 경험하는 심리의학적 반응으로서의 병리현상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현장 방문 면담의 과정에서 느낀 점은 다행히 많은 수의 주민들이 유래가 드문 큰 역경을 우리나라 국민 특유의 인내심과 극복의 의지로써 이겨 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의학적 후유증이 결코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염려되었다.

재난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큰일을 당하여 곤궁에 처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나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에 무시를 당하는 상처받게 되면 나타나는 내면적 현상을 화 혹은 분노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자의 경우는 화나 분노라는 감정 대신 슬픔, 절망, 허무, 우울 등을 느끼게 된다. 분노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 대단히 의미있고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감정임에도 이와 같이 억압적으로 없애버리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정신세계가 황폐해 지는 것은 물론, 숨겨진 분노가 마음속에 쌓이면서 심신을 모두 망가뜨리게 될 수 있다(나카지마 요시미치, 2003: 20-23).

재난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신심리의학적 관심을 재난 초기부터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이와 같은 심리적 충격은 급성기의 문제만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다른 모습으로 주민들의 심리의학적 건강에 만

9) 홧병이란, 대인관계에서 화가 날 충격적인 일이 있을 후에 생기는 분노반응으로서 한국의 억압문화가 중요한 발생배경이 되는 우리 문화권 특유의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이시형, 1977: 63-69). 1994년도 미국정신의학회의 진단기준표(DSM-IV)에도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관련된 정신의학적 증후군으로 등재되어 있다(박지환·민성길·이만홍, 1997: 496).

성적 위해를 장기적으로 줄 수 있으며, 대표적인 만성적 심리의학적 위해로서 뇌의 기질적 손상과 인격적 황폐를 초래할 수 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현저하면서 더욱 늦게 발현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문화에 기인한 합병에 대한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사회복지 차원의 분석 결과 및 검토안

1. 재난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실천방법

재난상황에서 관련 전문가 집단이 제공하는 것과 그 희생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게 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이는 재난지역과 피해 주민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난은 지역적 집중성을 띄고 있고, 결국에는 지역주민이 재해발생 직후의 피해자로부터 복구, 부흥 단계의 주역으로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김경남, 2007), 재난현장에서 사회복지의 실천방법인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과 개별화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case management)도 지역사회 개입과 지역민의 욕구에 적합해야 한다.

1) 위기개입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재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는 거의 없다. 이러한 외상자국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위기사건에서 초래되는 압도된 감정에서부터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마침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까지 전환될 수 있다(Mayer & James, 2005; 한인영, 장수미, 최정숙, 박형원, 이소래 역, 2006). 따라서 위기개입은 재난을 경험한 직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서비스이다

위기개입은 재난과 같이 예상치 않았던 외상사건으로 발생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왜곡을 표적으로 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 행동, 인지를 인식하고 위기 이전 기능에 가깝게 고쳐가도록 돕는 개입방법이다. 따라서 개입은 평형감각 회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둔다(Counoyer, 1996).

위기개입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Kleespies, Deleppo, Mori, & Niles, 1998). 라포 형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재빨리 참여시키는 행동지향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또한 위기와 관련된 정보는 가능한

신속하고 간략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 위기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내담자가 그 위기를 해결하고 위기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Myer, 2001).

위기개입에서는 내담자와의 만남의 시간에 유연성이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위기개입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분 정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 전화는 이러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내담자가 전화를 걸거나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거는 것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접촉을 할 수 있게 한다.

위기 개입 의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이윤로, 2007). 첫째, 한 번에 3~4곳에 의뢰함으로써 내담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내담자가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반복해주든지 아니면 적도록 한다. 셋째, 내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가 스스로 의뢰된 기관과 연락하도록 고무한다. 넷째, 의뢰를 반드시 즉각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갖고 생각할 필요할 필요도 있다. 다섯째, 의뢰를 하기 전에 내담자가 개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의뢰 후 확인전화를 한다. 이는 연속성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심의 표현방법이며, 의뢰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2)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질적인 서비스 확보, 접근성 확보,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이 가족과 이웃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보호 서비스를 통하여 자기 충족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Goodman,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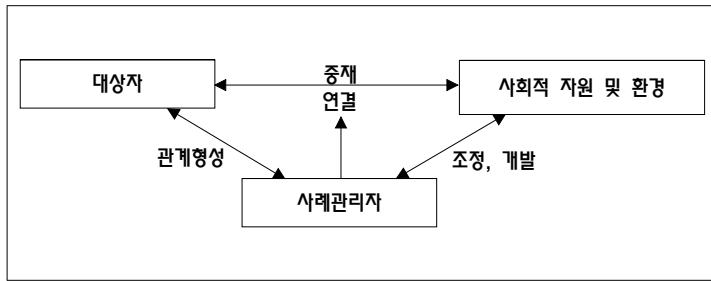
사례관리는 '환경속의 인간'을 의미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 및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자원 제공자들의 기능을 향상시켜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고,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인 접근방법이다.

사례관리의 목적은 ① 내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 ② 보호의 지속적 제공, ③ 서비스 조정의 개선, ④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가장 적합하고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 ⑤ 효과적인 자원의 개발과 분배 등이다.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원조자의 도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원조자에게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원1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가지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1 사례관리의 구성요소는 <그림 1>와 같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욕구의 중복으로 인해 한 가지 이상의 사회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각종 서비스를 조정·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서비스 체계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자원을 의미한다.

사례관리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자가 따르는 절차는 사정, 서비스의 계획, 실행, 모니터링, 검토 또는 평가의 5단계에 이루어진다.



<그림 3> 사례관리 구성요소

2. 사회복지자원의 분석결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경험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언어로 재 진술한 의미들을 가지고 <표 4>과 같이 22개의 하위 범주를 조직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욕구로서의 해결과제는 '지원기준에 대한 기존 행정자료 미흡', '체계적인 행정지도 미흡', '민과 관의 정보교류 부재', '지역민의 스트레스 고조', '갈등의 골 심화', '살 궁리' 등의 6개 주제묶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조사지역은 태안화력발전소의 입주과정에서부터 이주민과 원거주민 간에 형성된 관계가 이후 계속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대가 변화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가족관계로 인한 갈등과 같이 잠재해 있던 갈등들이 사고이후 다양한 모습

으로 투영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표 4> 기름유출 재난에서 체험한 지역주민의 해결욕구

해결과제	세부내용
지원 기준에 대한 기존 행정자료 미흡	1. 정할 기준이 없음 2. 비공식적 통로로 기준을 정함
체계적인 행정 지도 미흡	1. 자원봉사 지도가 적절하지 않음 2. 지역주민의 건강 지원이 미비함 3. 행정전달체계의 복잡함 4. 방재지도가 우왕좌왕함 5. 방재업체 관리를 방임함 6. 지원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함
민과 관의 정보교류 부재	1. 정보 전달이 정확하지 않음 2. 질의에 대한 관의 답변이 부실함
지역민의 스트레스 고조	1.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음 2. 가족에게 짜증을 냄 3.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함 4. 의지할 곳은 나 밖에 없다는 회의감이 듦
공동체내 갈등 심화	1.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일어남 2. 세대간의 갈등이 일어남 3. 자식과의 갈등이 일어남 4. 아동의 동심에 갈등이 일어남 5. 자원봉사자와의 갈등이 일어남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 (살 궁리)	1. 방재지원비에 올인 함 2. 성급한 결론을 내림 3. 다른 자원과의 연결을 시도함

VI. 결론 및 정책적 대안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가 단순히 특정계층이나 그 지역사회의 한 부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지역사회의 구조와 주민복지 전반에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에서 지역복지적 관점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코자 하였다.

따라서 피해지역의 주민이 생활기반의 상실로 인하여 입게 된 경제적 재산상의 피해규모와 그에 따른 경제활동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조

사분석과 함께 유출된 유류의 독성이 미친 신체적 영향으로 파생되는 각종 병리적 후유증 및 삶의 터전 상실의 충격으로 인한 심리의학적 병리현상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것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장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지역주민의 가족생활과 노인 단독가구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욕구조사 및 현상 간의 인과관계와 함께 현재 피해 보상 및 복구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야기되고 있는 복합적 갈등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안코자 한다.

첫째, 마을공동체 구성원 간의 공동체의식 회복과 소통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구성원 간에 이미 잠재해 있던 다양한 갈등구조가 유류유출 사고로 인하여 더욱 복잡해지고 갈등양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을 공동체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면단위의 지자체 사업 등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새로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사업으로는 주민이 기획하고 주관하는 주민에 의한 마을 축제를 유도하여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 이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심리적 치유프로그램과 민주시민의식과 실천적 행동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심리의학적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참고 인내하는 미덕을 덕목으로 하는 우리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충격을 피해주민 개개인이 스스로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슴에 응어리지고 이는 화나 합병으로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피해지역의 복원과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협의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바르게 이해된 이기주의”(A. Toqueville, 2007: 690-694)에 기반한 민주적 시민의식에 대한 소양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집합적 의사결정시 마을공동체나 지역사회의 공유되는 이익을 실현하여 보편적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의 선택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태안지역 고유의 지역브랜드(local brand)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는 인내와 용기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이는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면서 지속가능한 발

전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잘 보존되었던 국립해안공원에 대한 보호막을 약화시키려는 악의적 시도들이 자주 목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공구조물의 건설이나 인위적 개발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창출할 것을 설득하는 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이미지는 외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내용적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장기적으로 구축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경경적 도전을 극복하여야 한다. 태안지역이 세계적인 하계휴양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자 한다면 현재 보존되어 있는 해안의 자연환경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면 외국의 관광객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고, 그것을 앞당기고자 한다면 태안이라는 특정지역만의 배타적인 브랜드를 가치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넷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개발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주민의 생존이나 개발가치 등 그럴 듯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태안의 미래발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맨손업 어민들에 대한 대안적 소득창출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해안국립공원이 인접해 있는 잘 가꾸어진 산지와 바다를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대안으로 관광산업 발전 전략수립하여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관광패자에 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광 수요는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 등이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1인당 가치분 소득의 증가에 의하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태안의 산업은 관광산업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우월적인 전략이다. 관광산업은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충분히 살리는 것은 물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해야 한다. 낡은 지구 일원에 건설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현대를 대표한다면 현존하는 태안 해안지역과 해안국립공원은 전통을 간직한 곳이라는 점에서 태안은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곳이 될 것이다. 특히 관광산업은 천혜의 자연적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국립공원지역의 축소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너지효과를 위한 관광연계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산업의 발전은 연관산업의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때 바람직하다. 즉, 범위의 경제효과가 있어야 한다. 관광업을 보완할 수 있는 수산업과 수산물 가공 산업, 문화산업 등 이와 관련된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가령 수많은 어종 가운데 태안지역의 특색 있는 어종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해 국민적인 먹거리로 개발

할 필요도 있다. 태안 관광은 전통문화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태안군 내에 산재하고 있는 사장된 문화재 등을 적극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다양한 설화나 전설을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할 필요도 있다. 대부분 태안을 찾는 국내 관광객은 여름휴가를 즐기러 온다. 그 숫자가 연간 1천 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태안군에서 육성한 상설 '전통문화단'을 운영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구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볼 거리와 즐길 거리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내방객들이 오래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절적 특수를 감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색 있는 체험을 하게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고기잡이 방식(죽방염, 독살)이나 태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 온 것의 발굴 작업을 통해 태안만의 특색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제조업 및 가공업도 발전시켜야 한다. 시너지 효과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수준의 제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속가능하며 그 결과들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제조업적 관점에서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존재가 오히려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즉, 수많은 관광객의 수요에 적당한 한 다품종 단품생산 방식이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태안을 대표할 만한 특이제품이 없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손수건, 타월, 모자, 뱃지 일색이다. 일반관광객이 태안을 방문하고 그 기념으로 가져가야 할 수백 종에 이르는 태안만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가령,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크레인선의 모형제작 등도 좋다. 아울러 한정된 옥쪽 마늘의 생산과 2차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대량생산으로 많은 소득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옥쪽 마늘의 타제품과의 독특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영농조합차원에서 철저한 품질 및 유통관리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수산업 관련 2차 가공 산업은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안이다. 이를 통해 수산과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은 가공하지 않고 반출할 때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 효과는 지역에 축적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불어 지역의 재정은 물론 사회적 인프라가 축적된다.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의 자연조건과 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태안은 천혜의 조건인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은 이미 충분히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조건인 지역사람들이 그 조건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고자하는 지혜와 지식을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쟁력의 핵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주어진 천혜의 조건을 충분히 적용시킴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쟁

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 모든 결정은 지역주민의 몫이다. 결국은 태안의 장래는 지역주민의 뜻에 달려있다.

[참 고 문 헌]

- 곽승준·유승훈. (2001). 동강자연환경 보존의 경제적 편익추정 :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9(2): 163-18.
- 권오상. (2005). 확률효용모형 분석을 통한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환경경제연구」, 14(1): 51-78.
- 김접훈. (2008). 유류유출지역 피해지역의 미래발전 구상 및 전략. 「우리바다살리기 제2차세미나」, 15-31. 희망제작소·충남발전연구원.
- 김석구·김태유. (2002). 유류오염에 따른 해양환경피해의 측정 : 조건부 가치추정을 이용하여. 「경제학연구」, 50(3): 59-81.
- 나카지마 요시미치.(2003). 「화내는 기술」, 유준칠 옮김, 서울: 해바라기.
- 녹색연합. (2008). IOPC 피해산정액 터무니없이 작다. 태안 기름유출사건에 관한 성명서. 3.10.
- 대전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UNDP국가습지사업단. (2007).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및 THC(총탄화수소) 발생 조사(측정물질설명)”.
- 박광열.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 충청남도. 「기름재앙 150일, 무엇을 할 것인가?」, 45-59.
- 박태윤. (2008). 유류유출피해지역의 생태와 관광 활성화 전략. 「태안살리기 2차 토론회」, 59-71. 희망제작소·충남발전연구원.
- 서재희기자.(2007.12.21). “태안 앞바다 기름 초기 방제인력 유독성 물질에 노출 가능성 자원봉사자 등 건강검진 시급”, 서울신문(20판): 16면. <http://www.kinds.or.kr>.
- 손건수. (2005). 해양유류오염사고(씨프린스호)대응활동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시프린스호 해양 유류 오염사고 10돌 국제 학술대회」. 48-65. 여수환경운동연합.
- 손영수. (2008). “유류오염 사고와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보건”,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유류유출 피해지역의 미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충남발전연구원·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주최·주관), 세미나자료집.
- 송두범.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지역발전전략. 충남발전연구원.
- 윤박경. (2005). 새만금, 그곳엔 여성들이 있다. 「씨알」, 127-135. 씨알의 소리사.
-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태안 주민 10명중 2명 '자살충동'”, 서울=메

- 디컬투데이/뉴스시스, 2008.03.04. 미디어다음.
- 이시형. (1997). “화병에 대한 연구”, 고려병원잡지 I : 63-69.
- 이영호. (2007). 어가부채경감으로 어업인을 살리자. 국회보, 제485호: 22-25.
- 이흥동, (2001). 갯벌의 생태경제적가치. 「우리나라 해양생태자원의 현황 및 가치」. 52-6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조연상. (2008). 유류유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과 발전방향. 「열린충남」, 42: 41-52. 충남발전연구원.
- 조정제·이지현. (2000). 연안통합관리를 통한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해양21세기」, 1-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최 협. (1997). 한국에 있어서의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인류학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2: 171-183.
- 최남희, 「재난 피해자의 사후 지원」,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권 제2호, 2006. 겨울, p.4, p.16.
- 황달기. (2003). 지역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일본비역연구 방법론 모색을 위한 시론 -. 「일본어 문학」, 22: 477-504.
- 「2004 해양수산백서」. (2004). 서울: 해양수산부.
- 「2005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05). 대전: 통계청.
- 「2007년 태안지역 수산물 실적」. (2008). 태안군 해양수산과.
- 「세계일보」. (2008). 태안 관광객 격감. 8.19 : 18
- 「지역농업클러스터지원조사-시군별집계자료,2005」. (2005).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태안신문」. (2008). 태안사건 이후 군민 의식조사발표. 3. 7: 1
- 「태안통계2007」. (2007). 충남: 태안군.
- 「특별법(안) 정책패키지 지원방안 자료」. (2008).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 「허베이스피리트호 대어민 피해보상관련 질의 답변 집」. (2008). 해양수산부.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사건 개요 정부보고서」. (2008). 중앙재해대책본부.
- 小林泉. (2002). 地域研究概論, 92-114. 東京: 晃洋書房
- 鈴木一郎. (1990), 地域研究入門-異文化理解への道, 39, 東京大學出版社

- Bjornstad, D. J. and J. R. Kahn(eds.). (1996) *The Contingent Valuation of Environmental Resources : Methodological Issues and Research Needs*.
- Cameron, T. A. and M. D. James. (1987). Efficient Estimation Methods for 'Closed-Ended' Contingent Valuation Surveys. *Review of Economic and*

- Statistics*, 69: 269-276.
- Freeman, A. M., (1979), Hedonic Prices, Property Values and Measuring Environmental Benefits: A Survey of the Issue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81: 154-173.
- Grossman, G. M. and A. B. Krueger. (1993), *Environmental Impact of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n P. Haber(ed), *The US-Mexico Free Trade Agreement*, Cambridge, MA, MIT Press.
- Grossman, G. M. (1995). *Pollution and Growth : What Do We Know?* in I. Goldin and L. A. Winters(eds), *The Econom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r OECD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Heide, Erik Auf Der. (1989). *Disaster Response : Principles of Preparation and Coordination*, the C. V. Mosby Company.
- IOPC Fund. (2002) 71FUND/AC.9/13/3, *Incidents involving the 1971 Fund, Sea Prince*. London. IOPC.
- Jung, Hyung-Chan. (2003). The Economic Assessment of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s: The Canadian Experience, *The Journal of Fisheries Administration*. 34(1): 157-183.
- Mowforth, Martin and Ian Munt. (1998). *Tourism and Sustainability*. New York: Routledge
- Pierre Daniel et al. (2001), *Forecasting the Erika Oil Spills*. 2001 INTERNATIONAL OIL SPILL CONFERENCE. London. IOPC.
- Riki Ott, Ph.D, (2005), The Legacy of the Exxon Valdez Oil Spill. 「GS칼텍스 시 프린스호 해양유류오염사고 10주년 국제심포지엄」, 여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Wall, Geoffrey. (1997). *Sustainable tourism-Unsustainable development*. Wahab, S. and J. Pigrim (Ed). *Tourism, Development and Growth*. New York: Routledge.

□ 제3분과

허베이 스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심리적 영향과 정신보건

좌장 : 최남희(서울 내러티브연구소 소장, 서울간호대 교수)

[논 문 발 표]

1. “재난으로 인한 생태계의 혼란과 공동체의 위기”
변주훈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2. “기름유출 피해자들의 외상경험과 심리적 충격에 대한 조사”
유정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연세대학교 인지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3. “재난이 태안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 시점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교현(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권선중(충남대 중독행동연구소 연구원),
김세진(충남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토 론]

허종일(태안보건의료원 원장)
구본춘(태안군 모항리 어촌계장)
허장(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철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재난으로 인한 생태계의 혼란과 공동체의 위기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를 중심으로-

변주훈(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재난, 환경, 그리고 문화

1960년대 Fritz(1961)가 처음으로 재난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 이래, 그 동안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수많은 재난연구가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심리학, 의학 등의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재난의 사회적 영향을 거시적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재난관리, 경제적 손실 등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어서 재난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고유한 문화적 대응양식 등이 어떻게 현재의 문화적 양식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연구된바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역시 외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재난관리 측면에서 볼 때 물리적 복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재난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재난이 인간과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재난관리 정책 역시 물리적 복구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적 복구가 결합되고 있는 상황이다.(2008, 소방방재청)

그렇다면 인류학적 시각에서 재난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¹⁰⁾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라는 수단을 이용해왔고 나름의 적응전략을 발달시켰다. 이는 오랜 적응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각 사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 고유한 문화양식의 발달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응체계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에 보다 가깝게 근접해볼 수 있다. Keesing은 적응체계를 구성하는 데는 다음 세가지의 하위체계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첫째, 문화란 인간과 생

10) 환경은 어떤 자극의 운동방향과 그 운동의 정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변화까지도 포함하며 그 속에서 생물이 감지하고 감응할 수 있는 힘과 제반여건 그리고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 총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이란 자연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지식 및 지각의 차원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유효환경의 개념까지 창출하고 있다.(전정수, 1994: 57 참조)

태학적 제요소들과 관련된 사회적 전승행위라는 점이고 둘째, 문화변동이란 환경의 도태압력에 대한 적응과정이며 셋째, 생산기술, 생업경제, 정주유형, 정치조직, 종교, 관습 등은 적응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이다.(Keesing, 1974 : 73~95) 이러한 입장에는, 모든 자극에는 반응이 있고, 환류작용에 의해서 안전상태로 환원하려는 자동제어적 상태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Rappaport, 1969: 186)

그러나 이들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생태적으로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재난과 같이 특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Vayda와 McCay(1975)는 지역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생태적 이슈들을 다루기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딪혀야만 하는 삶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생태인류학의 분석의 중심은 시스템이 아니라 자연선택의 중심이기도 한 개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험”접근법(Hazard Approach)을 통해 개인이 어떻게 위험에 대응하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들이 보기에 위험이라는 요소가 특정사회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응체계로서의 문화라는 틀 속에서 ‘위험’과 ‘재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재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재난의 정의를 살펴보면 각 국가와 기구, 그리고 학문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UNDP(유엔개발계획)와 UNCRD(유엔지역개발센터)에서는 재난을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와 기본조직과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조 1항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008, 소방방재청) 이에 반해 사회과학적인 배경에서는 재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재난(Disaster)과 위험(Hazard)을 구분하고 있다. Oliver-Smith(2002)에 따르면 “위험은 사회·하부구조 또는 환경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힘, 조건 또는 기술을 의미하며, 위험요소로는 허리케인, 지진, 눈사태 또는 핵시설과 농약의 사용과 같은 사회적 행위가 포함된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어서 “재난을 자연적·인공적 환경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파괴요소(Hazard)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있는 인간과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으로써, 개인적·사회적 욕구의 통상적인 만족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험’은 환경에 내재하는 파괴적인 요소이며 지역사회의 기본조직과 정상기능을 와해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힘으로 특정사회의 존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재난’은 잠재적인 힘의 실제적 발현이 인간과 사회·문

화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기존의 적응체계를 혼란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인간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내재한 위협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오랜 세월 에 걸쳐 자신들만의 토착 지식과 적응전략을 발달시켜왔으며, 이는 그들의 경험의 일부로 통합되어 사회조직과 제도, 생계양식, 관습 등으로 형성되었다. 이 토착지식과 적응전략이라는 것이 바로 문화를 뜻하며, 문화라는 수단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하라 지역의 유목민들은 주기적인 가뭄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동경로의 주기적인 교체와 이웃부족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이라는 적응전략을 펼쳐왔다.(2002, Hoffman & Oliver-Smith) 이러한 전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실패와 수정을 되풀이 해 얻은 결과물인 것이며, 해당 사회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 문화의 역사적 흐름은 그것이 개발하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의 흐름이다. 문화는 그 생존의 기회를 높여가기 위해 그 문화에 의미있는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변형시켜 나아간다. 이는 지속적인 환경-문화간의 변증법적 관계이다.(전경수, 1997: 6 참조) 결국 재난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적응기제의 적용범위를 초월해 환경과 문화간의 관계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재난연구는 한 사회의 환경과 문화의 관계, 즉 생태적 적응과정을 살펴보고, 재난이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과 그로인한 변화와 재적응을 추적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속화하며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때로 한곳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피해와 고통을 주고 또한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고통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한경구 외, 1998: 34-35 참조) 또한 Oliver-Smith(1996)가 지적한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난의 피해와 고통은 계층,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인종 등에 따라 대단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얼핏 보기에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며 피해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와 좀 다르다. 재난은 물질적 사건임과 동시에 사회적 구성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기 때문이다. 재난은 자연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경제적 환경의 산물이기도 해서 이 양자를 분리하면 사회적 환경에 대한 충분한 강조 없이 자연적 위험에만 너무 중점을 두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2005, Blaikie et al) 태안지역 주민들 역시 1차적으로는 기름유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나,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재난구호 정책으

로 인해 주민들의 간의 불신과 반목이 커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필자는 바로 이런 점에서 인류학이 재난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재난연구를 통해 특정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의 사회적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지역민을 위한 효율적 재난관리와 구호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생태계의 혼란이 지역 사회에 미친 사회, 문화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사고 이전의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재난이 주민의 생계활동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11) 이를 위해 연구지역으로 선정된 의항리의 생태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기름유출 이전의 삶을 재구성하고 사고의 영향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엔 생산기술, 생업경제, 마을 내 사회조직의 기능 변화와 보상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주민갈등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생애사와 사건 이후의 변화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참여 관찰을 함께 실시하였다.

II. 연구 대상지역 개황

1. 지리적 배경과 자연환경



<그림 1> 하늘에서 본 의항 2리의 모습.

<그림 2> 그림 1의 확대사진. 12)

의항13) 2리는 태안반도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충청남도

11) 2008년 12월 19일에서 22일까지 약 4일 동안 예비연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모아진 자료를 바탕으로 의항 2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2009년 1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현지연구를 실시하였다.

12) 그림 중앙에 보이는 농지는 60년대에 간척지 매립으로 마련된 것이다. 마을의 입지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 형성되어있다.

13) '의항'이라는 지명은 지형이 개미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졌으며, '개미목', '개목'으로 불려진 것으로 봐서 지형의 특징에 따라서 이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속칭을 한자로 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 소원면에 속한다. <그림 1>에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의항리 일대의 해안선 역시 다양한 크기의 만과 곳들이 끊임없이 교차한다. 특히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황해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친 파도를 직접 받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미터 내외에 이르는 조수의 급격한 진퇴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간척 및 수산자원 개발에 천혜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동시에 해안 곳곳에 기암절벽과 백사장이 발달하여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어 해안선의 전체 지역이 대부분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안지형은 의항리의 서쪽 해안에 한정된 특징이고 동쪽 해변은 전혀 다른 경관을 보인다. 북쪽을 향해 뻗어나간 의항리의 지형이 서쪽에서 내몰아치는 파도를 막는 동시에 강한 북서 계절풍을 차단함으로써, 동쪽 바다는 내륙의 호수와 같이 잔잔하게 된다. 여기에 7~9미터 내외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합세하여 의항리의 동쪽 해안에 수십만 평 이상의 개펄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 마을에서 개펄은 어업 생산의 기지이고 간조시에는 이웃 마을을 오가는 길로도 이용되어 왔다. 이 같은 자연지리적 조건 때문에 큰말, 건넌말, 재너머, 말막금 등 모든 자연촌락은 바람이 적고 개펄이 넓게 펼쳐져 있는 의항리 동쪽 해안에 집중되고 있다.

2. 인구·경제적 배경

1) 인구구성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인구에 대한 도시의 흡입요인과 농촌의 배출요인으로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 전 가족의 이주가 아니고 비교적 청장년층인 2~3세대들만의 일부전출이 많았다.(김택규, 1990: 194) 의항리 역시 여느 농·어촌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 이 마을에서의 인구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특징적인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마을 내 젊은 층의 외지로의 이출현상이며 둘째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태안읍이나 서산시 등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의항 2리의 세대수와 인구수의 변화는 다음의 <표1-1>와 같다.

<표 1-1> 의항 2리의 세대수와 인구수의 변화.

연도	세대수	인구수		
		총계	남	여
2002	138	415	212	203
2003	141	405	206	199
2004	129	358	188	170
2005	132	342	177	165
2006	134	334	170	164

* 자료 : 『태안군 통계연보』

표를 보면 세대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총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 젊은 층들이 육체적으로 고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어업을 버리고 도시산업부문으로 진출하면서 마을내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 시키려는 부모들의 교육열도 이출현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의항 2리의 경우 교통이 불편해서 직장을 얻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외지로 나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학업을 위해 외지로 나가있는 자녀들의 경우 졸업을 한 후 마을로 돌아오기 보다는 대부분 서울, 인천, 안산 등 외지에서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들도 이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내 젊은 층의 감소는 곧 바로 농촌사회의 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져 마을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표1-2>에서 볼 수 있듯이 4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인구도 36%가량이나 되어 마을내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거주자 사이의 차가 커 마을의 고령화 현상이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마을의 주민들도 앞으로 1세대가 지나면 마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인구수에서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세대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외지인들의 전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 인천 등지에서 태안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이 일대가 외지인들의 별장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전입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 1-2> 의항 2리의 연령집단별 인구분포.

연령집단	의항 2리 인구수			합계(%)
	남	여		
90세 이상		1	1	6
80~89세	1	4	5	(2.4)
70~79세	16	15	31	84
60~69세	25	28	53	(33.3)
50~59세	29	37	66	115
40~49세	24	25	49	(45.7)
30~39세	8	8	16	22
20~29세	3	3	6	(8.7)
10~19세	13	6	19	25
0~9세	1	5	6	(9.9)
합계	120	132	252(100)	252(100)

* 자료 : 『태안 개미목마을』 :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2006).

2) 경제활동

우리나라의 대다수 반농반어촌의 어업활동은 소규모 망어업과 자연 해조류·패류의 단순 채취·포획과 양식이 주종을 이루며, 영세한 농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김세건, 1993:1) 의항리 역시 마을의 동쪽은 드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 어업활동에 더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어선업, 양식업, 채취업 등이 발달했으나, 이와 달리 육지의 환경은 낮은 야산을 배경으로 평지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농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농지가 부족하고 농업용수마저 충분하지 않아서 한밭의 영향도 크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주민들의 생계활동의 주무대는 바다와 갯벌이고, 육지에서는 가정 내에서 소비할 벼농사와 조미채소의 경작을 위주로 한 소규모 농업만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⁴⁾

이처럼 농업을 통한 재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자연히 농업보다는 어업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농지의 부족은 곧 적은 노동력으로도 농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굴양식업의 도입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마을주민들은 농업활동을 할 1~2명의 인원을 제외한 모든 가구 노동력을 굴양식업에 투입하게 되었다. 간혹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농사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수확물의 일정량만을 취하는 등 마을 주민들은 토지자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

14) 반농반어촌의 경우 농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바다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이용과정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세건(1993)의 글 참조.

러한 모습은 1980년대 이후 농업의 기계화가 진전되면서 의항리 일대에 넓게 퍼졌으며,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농업보다는 굴 양식업을 비롯한 어업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1960년~1970년대 이 지역의 어업 활동은 이른바 맨손어업이라 불리는 채취업과 소규모 어선을 이용한 어로활동, 그리고 투석식과 송하식으로 이루어지던 굴양식업¹⁵⁾으로 구분된다. 주민들은 맨손어업을 통해 자연산 굴과, 바지락, 해삼, 전복, 다시마, 세모 등을 채취하였고, 연안에서는 이른바 풍선이라고 하는 돛배를 이용하여 민어, 조기, 우럭, 간재미, 꽃게 등을 잡았다고 한다. 이러한 어업활동은 남녀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맨손어업은 대부분 여성들이 담당하였고 어로활동은 남성들이 담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구분은 노동의 강도와 숙련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힘이 들고 기술이 필요한 어로활동은 남자들이 담당하는 한 편, 여성들은 조새와 호미만 있으면 어디서나 쉽게 굴이나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업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은 여전히 빈곤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작물의 생산량이 좋지 않아 끼니를 잇기 위해서는 채취한 수산물을 멀리 태안읍과 원북면에서 열리는 5일장에 가서 곡식과 바꾸어 먹어야 했다고 한다. 때문에 감자로 끼니를 때우던 때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러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들어서 굴양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을의 어업활동에 있어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종전까지 투석식과 송하식을 활용하던 이 마을에 지주식 이 도입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으나 마을 전체에 보급되면서 마을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맨손어업에 의존해 소량의 수산물을 채취하던데 비하면 굴양식으로 얻을 수 있는 수확의 증대는 의항리 마을의 주민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어선을 운영하던 주민들에게도 위험하고 수확량을 장담할 수 없는 어선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확량을 담보하는 굴 양식업은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맨손어업을 하던 주민들과 어선을 운영하던 주민들 모두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 굴양식업에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고, 굴양식업의 확대는 임노동의 출현과 굴의 상품화로 진전되었다.¹⁶⁾ 의항리에서 이처럼 굴양식업이 빠르게 확대된 배경으로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는 농업 재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양자원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

15) 이 지역의 굴양식업은 서남해안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의 단계를 따르고 있다. 서남해안의 굴양식은 크게 투석식과 송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석식은 지구별수협이나 어촌계에서 많이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 양식법은 시설면적이 넓고 수확기까지 2~3년이 소요되므로 어민의 공동경영의 형태를 띠는 일종의 협업화 조성의 방식이다. 반면에 송하식은 개인경영체, 즉 어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농업이나 다른 생업방식과 결합된 경우가 많으며, 생산물 수확기에 한하여 고용노동력을 사용하고 있어 어장이나 자본력에 따라 기업경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김준, 2006: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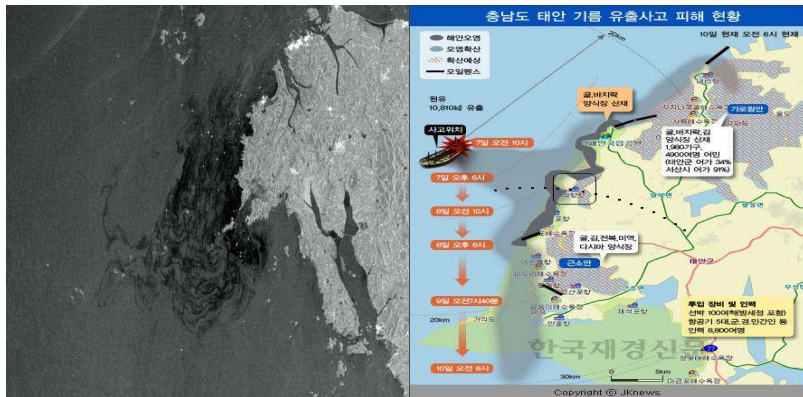
16) 굴양식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과정의 변화와 임노동의 등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성문(1991)의 글 참조.

구할 필요가 있었고, 둘째로 연안어업에 주로 종사하던 영세한 어민들은 어족자원의 고갈상태를 맞게 되었고, 어민들은 그 대안으로써 해조류와 패류 양식이란 대안 전략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전경수, 1992: 4)

관광업은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태안군 일대의 유명관광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의항리 일대에도 서서히 관광객의 발길이 닿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마을 안에 민박집, 펜션, 식당 등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모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광업으로 인한 수입은 6~8월 사이의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다.

III.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한 생태계의 혼란과 생존의 위기

1. 사건 개요



<그림 2> 피해당시의 모습을 포착한 항공사진.

<그림 3> 기름 유출사고 피해 현황.

* 가운데 네모 표시 한 곳이 의항리 일대임.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고는 유출된 기름 양에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인 만큼 직·간접 피해액도 천문학적이다. 특히 태안 해역은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해안국립공원이어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생태계 파괴도 엄청나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07년 12월 9일 기자회견담회에서 “기름이 상륙한 해안 17km의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며 “수산생물 뿐 아니라 해역 생태계에 큰 영향 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름이 상륙한 태안군의 개펄면적은 100km²에 이른다. 개펄 1km²가 수산물생산·어

가·재해방지 등 연간 생산하는 가치가 39억 원이라는 해수부의 추정을 적용하면, 연간 피해액은 3900억 원에 이른다. 태안군 이외 지역의 증장기적 오염피해와 손상되는 생태계 가치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액은 더욱 커진다.

해양오염 피해에 관한 국제관계 상 보험사는 3년 동안의 수산물 생산액을 배상한다. 기름유출이 적어도 3년은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오래 지속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998년까지 시프린스호 사고의 환경영향을 조사했던 이종협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원유에는 저 농도이지만 장기간 남아 플랑크톤, 조류, 갑각류 등에 축적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독성 물질이 많다”며 “1989년 4만여t의 기름을 유출한 ‘엑손 발테즈’호 사건의 환경영향이 아직까지 보고되는 등 그 영향은 장기간 계속된다.”고 말했다.(2008, 환경운동연합)

이와 같이 연안에서의 원유유출은 일차적으로 연안과 해안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그 영향도 수일에서 수개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에 이른다. 이러한 영향이 바다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지역의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름으로 뒤덮힌 바다는 어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 특히 의항리와 같이 농지가 적어 어업활동의 비중이 큰 마을에서 더 이상 바다에 나가 생계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¹⁷⁾ 바꾸어 말하면 환경재난이 사회재난으로 전환된 것이다.(박재목, 2008) Exxon Valdez 기름유출 사건과 같은 대규모 기름유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름유출은 해당 지역의 생태적 균형을 붕괴시켜 지역사회에 장기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인한 급격하고 장기적인 사회변동을 초래한다.(2004, Picou et al)

사고가 발생한 2007년 12월 7일에도 주민들은 새벽부터 굴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매년 9월에서 이듬 해 4월까지의 굴 작업이 한창 바쁠 때이고, 이때가 주민들의 1년 수입을 좌우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마을주민 모두가 굴 작업에 참여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마을 전체가 굴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칸¹⁸⁾ 정도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의 경우 약 7개월간 작업해서 약 2,000만원 가량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또 양식장을 운영하지 않는 주민의 경우 마을에서 굴 양식장을 운영하는 집의 작업을 도와주고 하루 일한 것의 1/3을 품삯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3~5만원 가량 된다. 이

17) 한상복(1976)은 ‘농촌과 어촌의 생태적 비교’라는 글에서 어민과 바다와의 관계를 기생적 관계로 규정하고 어민이 자연상태의 동식물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다 생태계의 혼란이 어민의 생존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한상복, 1976: 88 참조)

18) 1칸은 약 2평.

처럼 부지런만 하면 매일 하루에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의 소득을 현금으로 올릴 수 있던 것이 유출된 원유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중단이 된 것이다. 또한 의항리 일대의 굴양식장이 모두 원유에 노출되어 양식장의 굴이 모두 폐사하는 지경에 이르러 당장은 물론 앞으로의 생계수단이 사라지고 말았다.

원유가 유출되었을 당시에는 방제작업이 우선이라 주민들도 심각성을 잊고 지냈으나, 2008년 6월 1차 방제작업이 완료되면서 주민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겨울부터 방제작업을 하느라 농사 준비도 못했으니 이제 와서 농사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바다가 오염되면서 어업활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다시 마을을 찾아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이러한 기대도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한다. 2008년 6-8월간 태안군을 방문한 관광객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1/5정도로 급감했다고 한다.(동양일보, 2008년 8월 7일자) 이에 주민들은 정부에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항의를 하였으며 태안군에서는 공공근로¹⁹⁾의 형식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생계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참가자격의 기준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도 많았다고 한다.

2009년 현재 의항리 주민들은 농사일로 약간 분주한 모습을 보일뿐 여전히 굴양식업이나 맨손채취업은 전면중단 상태이다.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출항은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²⁰⁾ 이러한 원인에 대해 어민들은 어획량의 감소가 기름유출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 해답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걱정에 시름이 깊어갈 뿐이다.

IV. 재난으로 인한 사회 문화·심리적 영향 : 공동체 위기

태안 지역을 휘몰아친 기름유출 사건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 촌락사회는 지연과 혈연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공동체적 통일성을 지니며 그 마을 특유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지니고, 공동의 생활 요건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동제, 공동오락과 같은 상징적 행위까지도 공유하는 거주집단이 촌락사회이다. 그래서 촌락사회는 대면사회적 근린관계를 이루며, 사회적 통제 및 제재와 더불어 철저한 협동으로 유지되어 왔다.(김택규, 1980: 375-376)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의항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굴양식 기술

19) 마을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공공근로는 방제작업이 완료된 시점 이후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어졌으며, 일당 3만원에서 상해보험가입비 5천원을 제외한 2만5천원을 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나마도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여 공공근로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강OO, 69세, 여)

20) '농식품부 발표자료 : 태안일대 수산자원 밀도 절반으로 감소.' 2009년 3월 22일 SBS보도.

의 발달로 개별화가 진전되면서 공동소유와 분배에 기초한 강한 결속은 사라졌지만, 의항리의 주민들은 여러 생산활동에서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협동노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결속과 공동체 의식을 공공히 하고 있다.²¹⁾ 하지만 금번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 경제기반이 무너지자 마을을 지탱하던 공동체의식, 사회조직과 제도의 기능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마을의 생태적 적응과정이 무너지자 사회제관계가 함께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태적 혼란이 의항 2리에 미친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4가지 경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²²⁾이다. 사건 이후 피해지역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상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당장의 피해가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보상액을 놓고 정부와 보험회사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는 금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액이 5,663억에서 6,013억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주민들의 경우 환경복원 비용과 향후 생계비 지원까지 산정해 총 1조원 가량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추정액 6,013억원까지 선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²³⁾(2009년 3월 25일, 오마이뉴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선부른 결정은 피해지역 주민의 갈등을 부채질 하는 꼴이 되어버렸다.²⁴⁾ 정부가 보상액의 한도를 정하자 주민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기름

21) 김준은 공동체 개념을 범주화하여 가장 넓은 범위의 공동체를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관념적 관계, 다음으로 생활과 문화적 의례행위가 이루어지는 범주로서 사회적 관계, 자원의 공동이용은 이루어지지만, 노동과 분배방식이 개별화되어 있으며, 소유적 관계는 민법적 의미에서 어장의 총유, 문종재산, 법인재산 등에 기초한 생산적 관계,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실체로서 이는 소유관계에서 규정되며, 공동노동 공동분배가 이루어지는 집단으로 매우 강한 우리의식, 접촉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준, 2004: 45-46)

22)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은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한다. 김택규(1990)는 댐 수몰지역에서 보상금 지급의 기준을 두고 지역민과 당국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양상에 대해 논한바 있으며, 윤형숙(2001)은 탐진댐 수몰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두고 일으키는 가족간의 갈등 양상을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결부해서 논한바 있다. 한경구, 박순영, 주종택, 홍성흡(1998)은 시화호 방조제 건설로 인한 주민 보상이 결국 지역 공동체의 약화와 침식으로 이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새만금 간척사업 당시 보상의 방법과 절차를 두고 벌어진 주민과 정부, 업종간의 갈등에 대해서 다룬 연구도 있다.(함한희, 200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과 관련된 갈등은 주민과 정부, 지역간, 업종간,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 등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며 공동체의 유지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23) 실제로 국제사회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국의 경우 기름 유출에 대한 배상을 IOPC펀드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Oil Pollution Act를 제정하였고, 그 외 OECD가입국 들은 2005년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1조원으로 늘이는 추가보상의 정서를 체결하여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추가보상의 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IOPC펀드의 기존 배상한도인 3,000억원 내에서만 보상 및 복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ttp://blog.jimbo.net/save_nature/?pid=1213 에서 발췌.

24) 보상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게 된때에는 정부의 정책의 독단성에도 원인이 있다. 함한희(2001)는 "새만금 사업으로 파괴되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의 삶"이라는 연구를 통해 지역 여론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유출로 인한 피해범위가 워낙 넓고 그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²⁵⁾ 2008년 5월 기름에 오염된 굴양식장 마저 철거를 하면서 더 이상의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진 지금, 보상의 문제는 생계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경은 한층 날카로워졌다.

주민들 개개인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보상금을 받고자 했다. 그래서 되도록 꼼꼼히 자료를 챙기고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심사를 할 때도 될 수 있는 한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누군가 보상을 많이 받으면 누군가는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생겨나자, 어제의 이웃이 오늘은 적이 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주민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만큼 내 이웃이 받을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궁금해 했다. 전형적인 어촌마을답게 서로가 서로의 속사정을 훤히 아는지라 피해신고금액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주민들도 경제적인 형편이 극도로 악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자 이웃을 협동과 상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때문에 저마다의 셈으로 이웃의 피해액을 산정하다보니 결국 ‘OO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를 했다.’, ‘이장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신경을 써 주더라.’와 같은 소문이 마을을 떠돌게 되었다. 좁은 마을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돌다 보니 날이 갈수록 분란과 갈등이 커지게 되었다. 그 동안 마을에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던 마을총회도 무력해지고 말았다. 이장과 어촌계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게 되는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현상이 나타났다. 마을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든 것이다. 주민들간의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결속은 급격히 무너졌고, 개별가구를 기반으로 한 ‘우리 식구’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주민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피’의 전략을 취하게 되어 주민들간의 관계는 보다 소원해지게 되었다.

둘째, 관계망의 변화다. 관계망의 변화는 보상으로 인한 갈등과 생계활동의 단절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사고 이후 마을에서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인냐고 물었을 때 주민들은 심중괄구 “사람들이 변했어, 모두 자기 생각만 하고 돈 밖에 몰라.”라고 응답했다. 사고 이전의 마을의 사회적 결속은 친족관계에 기반한 것과

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한바 있다.

25)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009년 5월 8일 사고 유조선 허베이스퍼리트호의 선주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따른 제한 채권 신고를 마감한 결과 전체 신고건수가 12만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신고 금액도 당초 국제 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이 추산한 5천663억~6천13억원을 훨씬 넘어서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09년 5월 8일자.) 신고건수와 IOPC의 추정금액을 단순계산하면 1인당 500만원 가량 보상금을 받게 된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05/08/0701000000AKR20090508127700063.HTML?template=20>

노동력의 교환을 통한 협동관계를 통해 형성되었다. 어업이나 농업 모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인 만큼 가구 노동력만으로는 생산력을 끌어올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 임노동자를 고용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친척과 이웃을 비롯한 가구의 노동력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서로 번갈아 도와가며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고, 이는 농어촌사회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적응기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는 생산활동은 물론이고 상장례, 혼례, 그리고 친목계와 같은 대소사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근대적 생활양식이 많이 스며든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이후 생계활동이 중단되고 보상금의 분배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호혜적 관계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인해 공동의 작업 자체가 사라져 버렸고, 생존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개별 가구를 기반으로 삶을 모색하는 새로운 적응전략이 만들어졌다. ‘우리를 위한’이 아니라 ‘나를 위한’이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면서 직계가족이라는 핵심적인 관계망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형식적인 관계망으로 변해갔다. 심지어는 친족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관계를 느슨하게 유지하는 형태가 보였다. 마을 주민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면서 ‘나’의 생존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졌기 때문이다.

셋째, 마을내의 공식, 비공식 조직의 활동이 침체되어 공동체의 결속이 약화되었다. 기름유출 사고 이전 의항리에는 다양한 공식·비공식 사회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다. 공식조직으로 마을주민총회, 어촌계, 부녀회, 어민회, 각 반모임 등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소규모 친목조직이 존재했다. 공식조직들은 마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의결하여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적절한 규제와 통제를 통해 마을내의 기강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였으며, 비공식조직의 경우 친목활동을 통해 주민간의 결속을 증진하고 생활에서 오는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기름유출 사고 이후 이들 조직의 활동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아예 활동이 중지됐다. 2008년 12월 7일 이후 약 6개월간 방재 작업을 하느라 모든 힘을 쏟았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그간 보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민간 갈등으로 인해 조직의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때문에 마을의 의사결정 기구인 마을총회와 기름유출대책협의회를 구성한 어촌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식·비공식 조직의 활동이 사건 발생 후 1년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경우가 많았다. 사고 이전 의항리의 여성들의 관계의 범위는

작업단위와 마을의 각 반, 동년배로 구성된 친목계를 위주로 형성되어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의 활동은 1달에 1번 친목계에서 당일 온천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나마도 굴 작업을 하는 시기에는 당장의 수입 때문에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목단위는 자연스럽게 작업단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름유출로 인해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주민간의 갈등이 폭발하자 비공식 조직인 친목계조차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조직 활동의 침체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더 큰 것 같고 주민들도 이러한 상황은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마을의 주요 의제를 다룸에 있어 주민 전체의 합의도출을 어렵게 만들어 향후 마을이 취해야 할 대응과 활동방안의 시의적절한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마을의 갈등조정 기제가 사라져 갈등을 증대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으며, 주민간의 접촉이 적어짐으로 인해 루머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을 들 수 있다. 재난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고통과 함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홍수나 기름유출과 같은 사건에 노출되었을 경우 단·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난의 경우 외상성 사건(traumatic event)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증후군을 일으키고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시련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우울이나 불안,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 곤란, 흥미상실, 대인관계에 무관심하고 멍한 태도를 보이며 짜증, 놀람, 수면장애등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증상은 그대로 두어도 치유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등을 노출하며 일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늦어진다는 점이다.(2007, 최남희 외)

사건에의 노출과 PTSD²⁶⁾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Russel(1991)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진다. 양자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 더욱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양식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우 확연히 차이가 나며 이것이 가정 내, 마을 내에서의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의향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업종에 종사하거나 동년배인 소규모 집단끼리

의 모임을 자주 갖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이후에도 별 일이 없어도 자주 만나서 술자리를 갖거나 도박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따라서 술이 좀 과하게 되면 수면아래에 있던 갈등이 표면화되어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는 것이다. 평소에 보상건과 생계비 지급문제로 인해 서로 앙금이 남아 있었지만 분란이 일어날까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것을 술의 힘을 빌려 이야기 하다 보니 한 마을에서 수십년간 지내오던 주민들끼리 주먹다툼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다툼 뒤에 적절히 갈등해소가 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성들과 반대로 의향리의 여성들은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는 듯 보인다. 여성들의 경우 사고 이후 할 일 없이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여성들이 기분이 우울하거나 우울중에 걸릴까 염려가 된다는 호소를 많이 하였다. 특히 일손을 놓고 있다는 것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많았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이 가정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대부분 남성들이 현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나 의지가 없이 화만 내고 있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밖에서 돌아온 남편이 술이라든가 마신 경우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이 마을의 여성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의 성역할을 따르고 있으며 현재의 어려움도 남성들의 결단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은 그들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은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난은 기존의 생태적 적응과정을 무력하게 만들어 사회제 관계를 붕괴시켰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새롭게 세계를 인식하고 개별 가구의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한 적응양식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이는 관계망의 변화와 사회조직의 침체로 이어졌다. 공적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내부의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마을의 생존을 위한 어떠한 논의조차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언제 마을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주민들은 과거의 살기 좋았던 마을을 추억하며 현재 자신들의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뿐이다.

26) 재난 생존자에서 발병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교통 사고, 전쟁, 고문, 자연재해, 폭행 등과 같이 신체적 상해나 혹은 생명의 위협에 수반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유발 사건을 겪은 후 사건에 대한 재경험, 회피 및 둔마, 과각성의 증상을 겪는 정신과적 장애로 정의될 수 있다.(1994, APA)

V. 결론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재난연구는 주로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로 인해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 역시 경제적 손실과 물리적 환경의 복구를 위한 측면에서 다루어져,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그로인한 영향으로 실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재난의 발생은 인간과 잠재적인 위협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 위험요소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사회환경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인간은 문화라는 수단을 통해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최소화해 안전상태를 유지해왔다. 인간 사회는 근대화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도문명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요소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각종 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인간이 과학기술을 맹신한 나머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로 인한 생태계의 혼란이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생태계의 오염으로 인해 생계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고통 받고 있다. 생계기반인 바다의 오염은 이 지역의 생태적 적응과정을 무너뜨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제관계를 혼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공동체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감소로 농어촌 마을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 지금 재난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지 단언 할 수는 없으나 Exxon Valdez호 기름유출 사건과 같은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그로인한 공동체의 변화의 가능성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주민들이 이주를 선택함으로써 겪게 되는 이주와 재적응의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역시 물리적 복구와 함께 인간사회의 복구를 포함한 총체적 재난관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신문, 방송, 및 간행물>

“통계연보,” 2002. 태안군청.

“통계연보,” 2003. 태안군청.

“통계연보,” 2004. 태안군청.

“통계연보,” 2005. 태안군청.

“통계연보,” 2006. 태안군청.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8. 소방방재청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50일관 백서,” 2008. 환경운동연합.

SBS. “농식품부 발표자료 : 태안일대 수산자원 밀도 절반으로 감소” 2009년 3월 22일.

연합뉴스. “태안 기름피해 신고금액 수조원대 전망,” 2009년 5월 8일자.

동양일보, “관광객 ‘기적태안’ 외면,” 2008년 8월 7일자.

<논문 및 저서>

김세건, 1993. “반농어촌 자원이용방식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완도군 청산도의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김준, 2004. “어촌사회 변동과 해양생태,” 서울, 민속원.

_____, 2006. “어업기술의 변화와 어촌공동체 : 충남 개목리 굴양식 어촌의 사례,” 농촌사회 제 16집 1호: pp. 175-207.

김택규, 1980. “마을생활,” 고려대학교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1)

_____, 1990. “수물민생활의 문화인류학적연구: 댐 수물지역 주민의 이주와 재적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연구, 12권 1호: pp. 161-208.

남성문, 1991. “굴양식업 생산과정과 임노동의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박재목,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ECO 제 12권 1호: pp7-42.

전경수 편, 1992. “한국어촌의 저발전과 적응,” 서울: 집문당.

_____, 1994. “문화의 이해,” 일지사.

_____, 1997. “환경친화의 인류학,” 일조각.

윤형숙, 2001. “탐진댐 수물지역 주민의 가족갈등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한국문화인류학회 34-2: 31-59.

최남희, 변주훈, 한동일, 임숙민, 2007. “자연재난 집중호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신간호학회지 제 16권 제 2호: pp139-149.

-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2006. "태안 개미목마을: 어촌생활의 파노라마," 대원사.
- 한경구, 박순영, 주종택, 홍성흡, 1998.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출판사.
- 한상복, 1976. "농촌과 어촌의 생태적 비교," *한국문화인류학회* pp87-90.
- 함한희, 2001. "새만금 사업으로 파괴되는 마을 공동체와 주민의 삶," *환경과 생명* 28: 132-143.
- _____, 2004. "새만금간척개발사업과 어민문화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회* 37-1: 151-18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1994.
- Fritz, C. E., 1961. Disasters. In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ed. R. Merton, R. Nisbet, pp.651-94.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Keesing, Roger M., 1974. "Theories of cultur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3.
- Oliver-Smith, A., 1996. "Anthropological Research on Hazards and Disaster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5.
- Picou J. Steven, Brent K. Marshall & Duane A. Gill, 2004. "Disaster, Litigation, and the Corrosive Community," *Social Forces* 82(4): pp1493-1522.
- Piers Blaikie, Ben Wisner, Terry Cannon & Ian Davis, 2005. "At Risk: Natural Hazards, People's Vulnerability and Disasters," Routledge.
- Rappaport, Roy. A., 1969. "Some Suggestions concerning concept and method in ecological anthropology," *In Contributions to Anthropology*, David Damas edited.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ultural anthropology, Ottawa(August 3-6, 1966)
- Russell J. 1991. "Cultural and exposure Variables in the expression of PTSD as an outcome of the Exxon-Valdez oil spill and clean up," *Presented Annu. Meet. Soc. Appl. Anthropol.*, 50th, Charleston, SC.
- Susanna M. Hoffman & Anthony Oliver-Smith, 2002. ""Why Anthropologists Should Study Disasters," In *Catastrophe & Culture: The Anthropology of Disaster*, ed M. Hoffman, A. Oliver-Smith,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 Vayda, Andrew P. & Bonnie J. McCay., 1975. "New Directions in Ecology and Anthropology," *Annual Reviews in Anthropology* : pp293-306.

태안지역 어린이 심리지원사례

유정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연구원

개요

- ▶ 2007년 12월 17일
- ▶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예인중이던 크레인선이 유조선과 충돌, 원유 1,2547kl 유출
- ▶ 태안정신보건센터 의뢰
- ▶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주관
- ▶ 어린이 심리충격 프로그램 실시

개요

- ▶ 제목: “소울어린이 마당”
- ▶ 대상: 소원초등학교 의항분교 어린이 19명
원북초등학교 방갈분교 어린이 14명
- ▶ 기간: 2009년 4월 11일 ~ 5월 30일 (총 7세션; 진행중)
- ▶ 장소: 각 초등학교 교실 (5개 교실)
- ▶ 시행: 서울내러티브연구소
- ▶ 주관: 태안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개요

- ▶ 주 1회, 7~8명의 소집단 활동
- ▶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 ▶ 그림과 놀이를 통한 이야기 촉진활동

반	학교	학년	인원
1	의항분교	6학년	6명
2	의항분교	5, 6학년	6명
3	의항분교	2, 3학년	7명
4	방갈분교	4학년	8명
5	방갈분교	4학년	10명

프로그램 개요

- ▶ 어린이들의 심각성 확인
소울어린이캠프
2009년 4월 3일~4일 (아이코리아)
- ▶ CPTSD-RI (Chil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Reaction Index)
CDI (Child Depression Inventory)
SAIC (State Anxiety Inventory)
- ▶ 어린이 생일잔치 참가
- ▶ 교사 간담회 2회
- ▶ 가정방문 1회
- ▶ 소울어린이마당 진행자 회의 10회

[강사]

진행원리

내러티브의 구성과 자기 해석과정

- ▶ 강력한 감정을 정상화-감정의 언어화
- ▶ 트라우마 경험을 전체 삶의 일부분으로 전환
- ▶ 친구 또는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사회기능 촉진
- ▶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기능의 정상화



[강사]

프로그램 진행

횟수	내용	비고
1	규칙설명 친구들에게 나를 설명해봅시다.	나를 드러내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2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작년에 우리집/나/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감정의 재처리 그림 그리기
3	참 슬펐어요.	감정의 재처리 자기 이해
4	슬플 때는 이렇게 해요	경험 연결하기 중간평가
5	아하! 이렇게 즐거운 일이...	경험 연결하기 사건 설명하기
6	이런 어른이 될래요.	미래전망
7	전체과정의 평가 및 마무리 잔치	마무리

[강사]

어린이들의 특성

- ▶ 재난 이후 공격성, 난폭함 등을 보고 (자기보고)
- ▶ 조손가정의 어린이가 많음
; 외할머니 혹은 이모할머니의 슬하에서 자람
; 부모는 따로 살거나 가끔 만날 수 있음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 ▶ 학교 밖이 바로 바다 (소원초 의항분교)
- ▶ 외부(언론, 단체 등)의 관심이 집중
; 갑작스런 관심과 외면을 많이 경험

[강사]

진행자들의 평가

- ▶ 아이들이 많이 산만함
- ▶ 얼버무리거나 감추는 등 감정표현에 서툴던 아이들이 서서히 자기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임
- ▶ 반의 어린이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다.
- ▶ 협동과 배려가 깊어졌다.

[한글]

진행자들의 평가

- ▶ 아이들이 많이 산만함
- ▶ 얼버무리거나 감추는 등 감정표현에 서툴던 아이들이 서서히 자기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임
- ▶ 반의 어린이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많이 알게 되었다.
- ▶ 협동과 배려가 깊어졌다.

[한글]



[한글]

성과

진행중 : 중간평가 (중결 5월 30일)

- ▶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재난피해의 심각성 확인
- ▶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 후 능동적인 태도가 당사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확인
- ▶ 향후 재난피해 어린이 지원방안의 기초 마련
- ▶ 마을공동체의 위기가 어린이들 정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
- ▶ 재난피해지역의 2차 트라우마에 관한 적극적인 관찰 필요 확인

[한글]

개선 및 건의사항

- ▶ 재난 지역의 전문가 협조 필요
; 이동거리와 활동시간
- ▶ 지속적인 관심과 자기해소프로그램 절실
; 마을꾸미기 등 어린이(또는 마을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
; mentor(지역 어린이 : 대학생) 형성 공부 등 협동활동
- ▶ 주민교육 및 활동
; 주민 개인 및 공동체의 갈등해소
; 어린이의 심리적 변화와 특성 공유

사고목적 어린이 심리충격완화프로그램 활동

- ▶ 2007년 5월 17일
- ▶ 원목초등학교 소방훈련 도중 학부모 3명이 크레인에서 떨어져서 사상되는 사고를 훈련대상 4학년 어린이와 담임선생님들이 목격한 사건
- ▶ 서울시 의뢰
- ▶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이화여대 심리학과 주관
- ▶ 어린이 심리지원 프로그램 실시
- ▶ 제목: "햇살나무 합창"
- ▶ 대상: 원목초등학교 어린이 50여명
CPTSD-RI(chil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reaction index)
검사에서 moderate 이상 어린이 중 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
- ▶ 기간: 2007년 7월 31일 ~ 10월 27일 (총 12세션)
- ▶ 장소: 원목초등학교 5개 교실
- ▶ 시행: 서울내러티브연구소
- ▶ 주관: 서울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 ▶ 주최: 서울시

사고목적 어린이 심리충격완화프로그램 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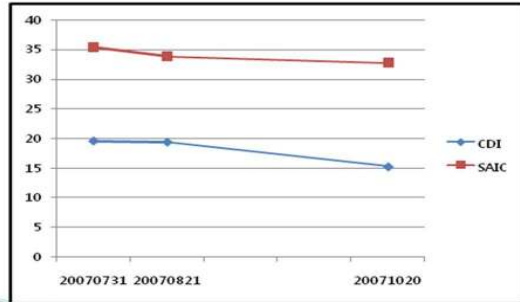
어린이	학부모	진행자
무서움이 많이 없어졌다. 재미있었다. 나쁜 꿈을 거의 안 꾀다. 이 날만 기다렸다. 내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해졌다.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에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들이 변화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 표정이 밝아졌다. - 화도 덜 내고 짜증도 줄었다. - 사고 이전처럼 생활하게 되는 것 같다. 프로그램 이후의 문제 -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의 처리 - 개인적으로는 누구와 만나야 하나 - 학교 졸업 후 대책	표정이 날고 밝아졌다. 회기를 더하면서 어린이들의 참여집중도가 좋아졌다. 사고를 경험한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 협동과 배려가 깊어졌다.



결과

프로그램 진행 중 실시한 설문결과

시간경과에 따른 어린이 우울; child depression inventory(CD I)과
어린이 상태불안;state anxiety of child (SAIC)의 점수변화



미국의 기름유출지역 지원사례

Exxon Valdez
알래스카 기름유출

경제적 손실 : 관광객 감소, 해산물 수요 감소

환경적 손실 : 수천종의 동식물 죽사, 오염된 동식물의 사망률 증가

PWSRCAC(Prince William Sound Regional Citizens' Advisory Council)

8개 위원회 결성: 재정/회계, 법률, 정보/교육, 환경모니터링, 과학, 예방/대응, 운송/교육, 업데이트 운영위원



미국의 기름유출지역 지원사례

Exxon Valdez

알래스카 기름유출



프로젝트 및 주요지원활동

- 연구활동: 환경학, 동물학, 해양학, 의학, 사회학, 보건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 격려
- 주기행사: 1주기 행사로부터 20주기 행사까지 꾸준히 활동
- 마을활동 행사: 장터, 어린이공연, 청소년지역문화 알리기 등
- 전통잇기 행사
- 작품활동전시
- 교육자료제작 및 배포: 어린이 색칠공부책, DVD제작, 학년별 교재제작
- 청소년과 함께 하기: 외국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마을/환경/사람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격려, 1년에 한번 연구활동 발표기회 제공

- 끝 -

재난이 태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 시점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교현(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권선중(충남대 증독행동연구소 연구원),
김세진(충남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요약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연구 틀과 환경재난의 관점에서 태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을 조망하되, 김교현과 권선중(2008)이 시작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려 했다. 아울러, 태안 지역을 면과 읍 단위로 나누어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반응의 내부적인 차이를 살펴려 했다. 이를 위해 비례확률 표집법으로 선정한 20세 이상의 태안주민들(1차 464명, 2차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는데, 사건발생 약 2개월 후인 2008년 2월 14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후 약 8개월 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후 8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태안주민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고 후 2개월 시점에 비해 8개월 시점에서는 불안이나 우울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적대감이 많이 감소했으나, 그 정도는 여전히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자살 생각과 편집증적 사고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이런 증상 역시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역별 차이를 종합해 보면, 2월과 8월 두 시점의 조사 모두에서 이원과 소원면 주민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노출 수준을 높게 보고하고,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적응 증상들을 경험한다고 호소하며, 타인의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는 등의 불신 수준이 높았다. 이에 반해, 원북면과 태안읍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피해노출 수준과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고남, 남, 근흥면 및 안면읍 주민들은 중간 수준의 고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재난 복구와 관련시켜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환경재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지역 및 시점별 비교

1. 들어가며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며 무상하다. 환경이 변화하고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대인관계 및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지나친 변화, 그 중에서도 특히 나쁜 방향의 큰 변화는 상당한 적응 문제를 초래한다. 인간은 이런 변화를 스트레스로 경험하며 이를 통해 병들고 늙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더욱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며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가기도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태안 앞 바다에 유출한 1만 여 톤의 기름과 그로 인한 크고 많은 변화는 태안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수산물 채취와 고기잡이를 할 수 있던 바다가 오염되었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오염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그 심각도가 크다는 점에서 재난이라고 불리고, 그 영향이 오래 간다는 점에서 만성적 재난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환경재난이라 불린다.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환경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접근은 이를 스트레스 연구 틀 속에서 조망하는 것이다. 태안의 사고 역시 스트레스 사건에 해당하며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연구해 온 많은 선행연구와 이론들의 지혜를 빌려서 이 문제를 조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재난이라는 특수한 스트레스 사건이 갖는 특성을 부각시켜 이 문제를 이해하려는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환경재난 중에서도 기름유출 사고가 갖는 특성을, 역순 발테즈 사고 등의 유사한 경험을 참조하며 조망할 수 있다. 끝으로, 태안이라는 지역사회가 갖는 사회경제적이고 역사문화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해서 이번 기름유출사고가 빚어내는 심리적 영향을 분석하는 조망을 해 볼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접근법을 그림이나 사진 작업에서의 ‘원근법’처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환경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다 생동감 있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스트레스 연구 틀로 조망한 기름유출사고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관한 많은 일반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대표적

인 이론가로 의학자인 셀리에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가 모두 유사한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고 보았다(Selye, 1956, 1982). 추위나 더위, 감염이나 독성 물질로부터의 피해 혹은 심리적 위협 등이 모두 동일하게 일반적인 적응 증후군 반응을 유발하고, 이런 반응이 지속된다면 심리적이거나 신체적인 질병과 노화가 발생하며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이런 접근법에서는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지역민들이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가를 분석하려 할 것이다. 이는 의학적 접근의 전형이며, 앞서 소개한 태안 지역민들의 심리적 부적응 증상에 관한 자료도 이에 해당한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사회학자인 홉스와 라헤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연구했는데, 그들은 스트레스의 핵심을 변화라고 보고, 여러 종류의 생활 사건들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재적응의 정도를 평가해서 스트레스의 강도를 측정했다(Holmes & Rahe, 1967). 각각의 생활 사건들은 재적응의 요구 정도라는 면에서 특정한 스트레스 점수를 부여 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사망'은 100, '이혼'은 73, '가족의 사망'은 63, '결혼'은 50,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은 11 등의 스트레스 점수를 부여 받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 점수가 300점 이상이면 그 다음 해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그 강도에 따라, 가장 강력한 '재난적 사건', '중요한 생활사건' 및 '사소한 골칫거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흔히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재난적 사건은 중요한 생활사건(예, 실직, 경제적 곤란)이나 사소한 골칫거리(예,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태안 주민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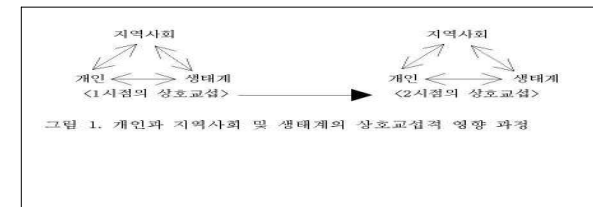
평가로서의 스트레스. 심리학자인 라자루스는 고등 인지기능을 지닌 인간은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평가나 해석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Lazarus, 1984, 1993, 2000). 즉, 사건의 의미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대처 자원에 대한 평가가 스트레스의 정도를 결정한다. 사건이 상실이나 위협으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대처 자원이 없다고 평가할수록 스트레스의 강도는 커진다. 일반적인 대처자원으로는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인 신념' '문제해결 기술' '사회적 기술' '물질적인 자원' 등이 거론된다.

라자루스는 대처를 강조한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란 없으며 스트레스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사건 그 자체로서 스트레스로 작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해쳐 나오기 어려운 인생의 절곡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도전이 되어 오히려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다.

자원 상실로서의 스트레스. 호브폴은 스트레스를 새로 충원되는 자원에 비해 상실되는 자원이 높거나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으로 본다(Hobfoll, 1989, 2002). 앞서 대처자원으로 언급된 것과 유사하게, 경제 및 물질적인 자원, 사회적인 평판과 사회적 지지, 지식과 기술, 자기조절 능력, 건강 등이 인간에게 중요한 자원이 된다. 라자루스의 이론에서는 자원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중시하는데 반해, 자원상실이론에서는 자원의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경제적 및 물질적 생활 터전을 상실하고 이웃 관계가 나빠지며 건강이 악화 되는 등의 자원상실이 크고 이를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수록 태안 지역민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상호교섭적 과정으로서의 스트레스. 알드윈은 라자루스와 호브폴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을 수용하면서, 개인과 지역사회 및 생태환경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교섭적 영향과정을 중시하는 확장된 관점을 제안한다(Aldwin, 2007). 개인이 지역사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며 현 시점의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다음 시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하나가 원인이고 다른 하나가 결과라기보다는 상호 순환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개인과 지역사회 및 생태계의 상호교섭적 영향 과정

환경 및 사회재난으로서의 기름유출사고

특정한 스트레스 사건으로서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원인의 면에서는 기술재해에, 결과의 면에서는 환경재해에 해당한다(김교현, 2008). 재해는 인간의 일상적 대처 능력을 압도해서 재난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기술재난에 대한 평가와 반응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지진이나 태풍 혹은 홍수 등의 자연재해는 흔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데 반해, 기술재난은 평소에 통제력에 대한 기대가 높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실수가 문제를 일으키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상이한 견해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환경재난은 사람과 다른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뿌리인 생태계를 뒤흔들고, 생태계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확산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또 다른 면에서, 이재열(2006)은 회복에 걸리는 시간의 길이와 사건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복잡성이라는 두 차원에서 재난을 구분했는데, 환경오염 사고는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호작용의 복잡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합 증폭형 재난'으로 분류했다(박재목, 2008에서 재인용).

박재목(2008)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환경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번져갔다고 주장한다. 그는 환경재난이 사회재난으로 옮겨간 배경적 요인으로 복합 증폭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특성과 바다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이 거의 대부분인 지역 사회의 특징을 들고 있으며, 그 양상으로는 주민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자살' '대내외적인 갈등의 심화' 및 '정부와 지자체 및 외부 기관에 대한 불신의 심화'를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기름유출사고 후 2개월 시점에서 심리/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선행 연구(김교현, 권선중, 2008; 이시제, 2008)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태안주민들의 심리적 고통을 살펴본 김교현과 권선중(2008)에 따르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20세 이상의 태안주민 464명을 전화조사 한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불안, 우울, 자살생각, 적대감과 공격성 및 편집증 등의 증상에서 일반인 표본에 비해 매우 높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심리적 고통은 사고 피해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이시제(2008)에 따르면 태안주민들은 수면장애, 약물복용 및 생활의 불규칙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했으며, 그 정도는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의미 있게 달라졌다. 주민들은 또한 사고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나 자치단체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으며, 사고 피해에 노출된 정도가 높을수록 이런 불신

은 더 높아졌다. 주민들은 기름유출사고로 소득의 감소, 직장의 상실, 농수산물 판매부진, 관광객의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연구 틀과 환경재난의 관점에서 태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을 조망하되, 김교현과 권선중(2008)이 시작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려 했다. 아울러, 태안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반응의 내부적인 차이를 살펴려 했다. 사고의 영향과 이를 수습하거나 복원하는 과정이 지역별로 상이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차이는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호브폴의 자원상실 모형에 따르면, 환경재난이라는 특수한 스트레스 사건은 '특정 환경(사회경제적 자원의 상실)'을 공유하는 지역민들 끼리 보다 유사한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Hobfoll, 1989, 2002). 이를 분석하기 위해 면이나 읍 단위별 심리적 영향의 정도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태안 전체가 아니라 이질적인 내부적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기름유출 사고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의 세부적인 모습이 보다 잘 드러날 것이다.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의 지역별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소속해서 살고 있는 개별 지역은 각기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닌다. 먼저 지리적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름으로 오염되었던 바다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와 지역의 해안이 기름 오염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다음은 경제적 배경으로, 지역경제의 바다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지역민들 사이의 응집력이나 신뢰, 공동체 의식, 시민의식, 문화적 성숙도 등이 지역별로 다를 것이다. 이러한 생태적 특성들은 개인과 지역사회가 재난을 경험하고 대처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²⁷⁾

본 연구에서는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태안지역을 하위 단위로 구분했다. 태안군에서 구분한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태안의 4개 읍지(28)를 면과 읍 단위로 나누어 표집 하였으며,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이 지난 2008년 2월과 8월에 조사를 실시해서 시점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심리적 건강이나 부적응의 양상은 개별 증상들을 증후군의 형태로 묶어서 보는 방법과 개별 문항 수준의 증상별 분석을 병행해서 주

27) 지역별 생태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치 못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를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에서 다루려 한다.

28) 4개 읍지의 구분은 태안군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지리적(혹은 행정적) 소속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1급지는 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판단하는 소원면과 원북면, 2급지는 이원면과 근흥면, 3급지는 남면, 고남면 및 안면읍이며, 태안읍은 4급지에 속해 있다.

민들이 호소하는 문제의 내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려 하였다.

3. 조사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 참여자

자료 수집 방법: 심리학과 대학원생 7명이 전화를 통한 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발생 약 2개월 후인 2008년 2월 14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후 약 8개월 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2차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대상 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한국통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에서 태안지역 '4개 급지' 별로 전화번호를 무선 표집하고, 다음으로 표집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비례확률 표집법(조성겸, 1990)으로 응답자를 선정했다. 4개 급지별 인구수는 상이하지만, 각 급지별로 100사례 이상의 표본이 추출되도록 했다. 2차 자료의 경우, 무선 표집된 태안지역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차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에 맞춘 할당표집을 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1차 시점 자료는 김교헌과 권선중(2008)의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충청남도 태안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1차 시점은 464명(여성 57.5%, 평균연령 56세), 2차 시점은 500명(여성 57.5%, 평균연령 56세)이 연구에 참여했다. 두 시점 간에 참여자들의 피해노출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1차 노출수준 $M=3.25$, $SD=2.01$ / 2차 노출수준 $M=3.14$, $SD=1.87$; $t=.901$, $p>.05$), 인구 통계학적 특성 또한 유사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전체 참여자의 특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2차 시점 모두, 여성이 57.5%로 남성에 비해 더 많았고, 성인 중기(46-65)의 연령대가 약 45%로 성인 초기(20-45: 약 25%)나 후기(66-85: 약 30%)에 비해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약 80%로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 50%의 유사한 비율을 보였고,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의 의무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이 약 60%로 중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았다. 사고 발생 전 가구 총소득(1년 기준)은 한국의 중산층 수준(중앙값 약 2,500만원)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피해 노출 수준: 미국 Exxon Valdez호의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연구(Palinkas, Petterson, Russell, & Downs, 1993)에 활용된 사고 피해 노출 측정 문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했다. 각 질문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는 일곱 문항(예, 기름 유출이나 방제작업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까? 기름 유출로 인해 귀하 가족의 수산물 채취에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Cronhach's alpha값으로 측정, 이하 동일)는 .75(1차)와 .69(2차)로 적절했다.

PTSD 증상: 한국판 사건충격 척도(이선미, 은현정, 1999)를 사용했는데,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0~3)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PTSD 유무를 분류할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각 문항의 점수를 0, 1, 3, 5로 변환하여 총점 26점 이상을 기준으로 PTSD 유무를 판별한다(Horowitz, Wilner, & Alvarez, 1979).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신뢰도는 .90(1차)과 .92(2차)로 적절했다.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증상: 부적 정서를 포함하는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성(sex)과 연령대별 표준점수가 마련되어 있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의 해당 요인을 선별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각 척도의 신뢰도는 우울 .92(1차)/.92(2차), 불안 .94(1차)/.93(2차), 적대감 .87(1차)/.88(2차), 편집증 .84(1차)/.84(2차)로 모두 적절했다.

자살 생각: 한국판 Morey 성격평가 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환, 2001)의 자살 소척도를 사용했다. 원척도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 4개(“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와 가족의 미래가 절망적으로 느껴진다.”)를 선별하여 사용했고 총점에 2배한 값으로 원점수를 추정하고 그 값으로 표준점수를 구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신뢰도는 .86(1차)과 .84(2차)로 적절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도구의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속성의 정도나 수준이 높거나 많음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방법

노출수준과 증상 간의 관계나 집단에 따른 차이 등을 검증할 경우에는 연속변수

인 원점수를 주로 활용한 반면, 집단 간 비교 결과를 제시할 때는 의사소통의 명료성을 높이기 위해 절단점(cut-off score) 혹은 규준점수(T점수 70이상)를 기준으로 정상과 문제 집단으로 범주화했다.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사후검증을 위해 Tukey법을 활용했다. 분석은 SPSS 15.0v를 활용해 이루어졌다.

4. 결과의 분석과 해석

피해 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노출수준과 각 증상 간의 관계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편집증을 제외하고, 두 시점 모두에서 피해 노출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 증상이 증가하는 ‘용량-반응(dosage-response)’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8개월 시점에는 전반적으로 노출수준과 증상 사이 관계의 강도가 약해졌고, 자살위험의 경우 더 이상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해 노출에 관한 기억²⁹⁾이 불수의적으로 의식 속에 파고드는 ‘재경험’ 증상으로 다른 증상과의 관계를 평가한 결과, 8개월 시점에도 2개월과 유사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억과 편집증 간의 관계 강도는 8월 시점에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의 차이 .14(95% CI .04~.28), $z=2.539$, $p<.05$].

<표 1> 피해노출 및 침투기억 수준과 심리적 부적응 증상 간의 상호상관

		PTSD	불안	적대감	편집증	우울증	자살
2월	노출	.43**	.27**	.24**	.07	.37**	.14**
	기억	.87**	.58**	.50**	.31**	.59**	.32**
8월	노출	.30**	.10*	.10*	.07	.10*	-.00
	기억	.90**	.58**	.52**	.45**	.52**	.32**

노출과 기억 간의 상호상관: 2월 $r=.48^{**}$, 8월 $r=.24^{**}$;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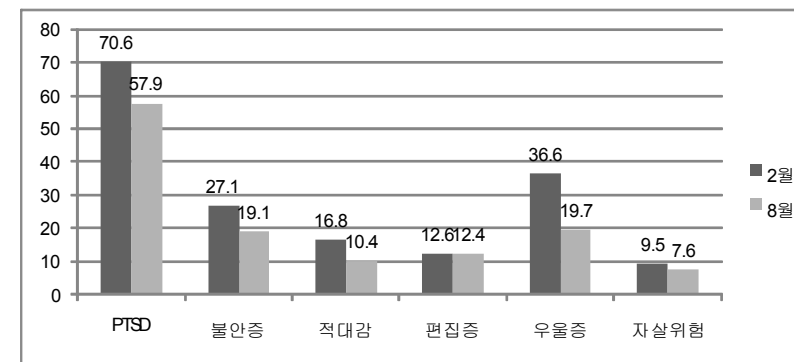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 뒤인 2008년 2월과 8개월 후인 2008년 8월에 태안 지역민들 전체의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조사한 결과는 표 2 및 그림 2와 같다.

29) Rubin, Berntsen, 및 Bohmi(2008)에 따르면 물리적 실체로서의 외상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관한 기억 또한 PTSD의 중요한 병인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표 2> 2008년 2월과 8월에 조사한 태안 지역민들의 심리적 부적응 증상의 표출 정도(%)

증상	시기	정상 집단	부적응 집단 (T70점 이상)	전체	차이검증결과
PTSD	2월	133(29.4%)	320(70.6%)	453(100.0%)	$\chi^2=16.659^{**}$
	8월	208(42.1%)	286(57.9%)	494(100.0%)	
불안	2월	336(72.9%)	125(27.1%)	461(100.0%)	$\chi^2=8.653^{**}$
	8월	402(80.9%)	95(19.1%)	497(100.0%)	
적대감	2월	386(83.2%)	78(16.8%)	464(100.0%)	$\chi^2=8.653^{**}$
	8월	446(89.6%)	52(10.4%)	498(100.0%)	
편집증	2월	402(87.4%)	58(12.6%)	460(100.0%)	$\chi^2=.006$
	8월	436(87.6%)	62(12.4%)	498(100.0%)	
우울	2월	291(63.4%)	168(36.6%)	459(100.0%)	$\chi^2=33.868^{**}$
	8월	399(80.3%)	98(19.7%)	497(100.0%)	
자살 위험	2월	418(90.5%)	44(9.5%)	462(100.0%)	$\chi^2=1.983$
	8월	461(92.4%)	38(7.6%)	499(100.0%)	

** $p < .01$



<그림 2> 2008년 2월과 8월에 조사한 태안 지역민들의 심리적 부적응 증상의 표출 정도

사고 당시 경험을 꿈이나 환각으로 다시 경험하고, 관련 자극을 회피하려 하며, 과

민하고 자주 놀라는 등의 예민한 각성 상태가 계속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PTSD의 정도가 사고 2개월 후인 2008년 2월에는 70.6%, 8개월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57.9%에 이른다. 태안 지역민들의 절반 이상을 PTSD라고 진단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지역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사고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고의 충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충격의 심각성을 전화면접을 통해 호소하고 싶음은 분명하다. PTSD는 사고의 심리적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³⁰⁾

지역사회의 일반인 표본에서는 인구의 2% 이내가 포함되는 불안증, 적대감, 편집증, 우울증 및 자살위험 등의 부적응 지수에서도 태안주민들은 적지 않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증과 불안증은 사고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일반인들 표본에 비해 거의 10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며, 편집증, 적대감 그리고 자살위험도 적어도 3배 이상 높다.

사고 후 2달이 지난 2008년 2월에 비해 그로부터 6개월이 더 경과한 8월에는 태안주민들의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이 의미 있는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편집증과 자살위험은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종합하면 사고 후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2008년 8월에도, 태안주민들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살 생각을 자주하며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숨겨진 나쁜 의도를 예민하게 찾으려 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1) 지역별 피해노출 정도에 대한 지각

지역별 심리적 부적응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지역별 기름유출사고 피해에 대한 노출 정도를 전체 문항의 점수와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 백분율로 살펴보았다.

전체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각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 표 3과 표 4이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30) 본 연구에 나타난 태안주민들의 PTSD 경험 정도를 비교할 기준(norm) 자료가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격을 제대로 갖춘 PTSD 유병률(prevalence)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국 조사의 결과도 변이가 크다. 관련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일반인 대상의 PTSD 유병률 조사 결과로 Kessler 등(Kessler et al., 1995; Kessler, Berglund, et al., 2005; Kessler, Chiu, et al., 2005)의 미국 일반인 모집단 연구들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일반인 집단에서 6.8%(2005년)와 7.8%(1995년)가 PTSD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태안주민들의 PTSD 경험 정도는 미국 일반인들의 경험에 비해 약 8~10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한편, 사고 경험 후 가장 높은 PTSD 발병률을 보이는 강간을 당한 집단의 수치인, 65%(남자)와 46%(여자)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은 수치이다. 다른 스트레스 반응 지수들(예, 불안, 우울 등)은 척도의 표준화 과정에서 마련한 일반인 기준 자료가 있어 그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

<표 3> 지역별 사고 피해노출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2월 조사)

지역	N	M	SD	95% CI for M		Min	Max
				Lower	Upper		
원북면	68	1.82	1.34	1.50	2.15	0	5
소원면	72	4.76	1.34	4.45	5.08	0	7
근흥면	53	3.55	1.85	3.04	4.06	0	6
이원면	51	4.35	1.78	3.85	4.85	0	7
고남면	53	4.43	1.66	3.98	4.89	0	7
남면	52	3.73	1.96	3.18	4.28	0	7
태안읍	108	1.69	1.40	1.43	1.96	0	6

CI: Confidential Interval(신뢰 구간), 이하 동일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7명)는 제외된 결과임. 점수의 범위는 0점~7점 사이임.

<표 4> 지역별 사고 피해노출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8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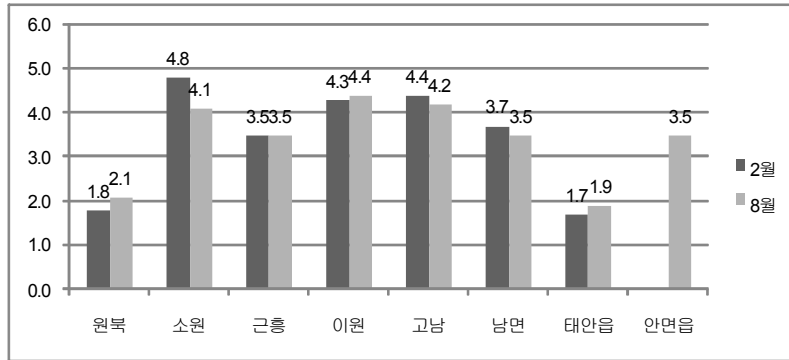
지역	N	M	SD	95% CI for M		Min	Max
				Lower	Upper		
원북면	82	2.10	1.47	1.77	2.42	0	6
소원면	51	4.12	1.66	3.65	4.58	0	6
근흥면	55	3.47	1.89	2.96	3.98	0	6
이원면	66	4.41	1.35	4.08	4.74	0	7
고남면	33	4.21	1.65	3.63	4.80	1	7
남면	33	3.52	2.21	2.73	4.30	0	7
태안읍	105	1.87	1.52	1.57	2.16	0	7
안면읍	61	3.49	1.46	3.12	3.86	0	6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14명)는 제외된 결과임.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과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노출 정도는 각 지역별로 안정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각 지역별로 두 시점 간 피해 수준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서 사고 피해노출 정도가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변화도 발견되었는데, 1차 시점에서 가장 높은 피해 노출 수준(M=4.76, SD=1.34)을 보고한 소원면의 경우는 2차 시점에서는 이원면(M=4.41, SD=1.35)이나 고남면(M=4.21, SD=1.65)에 비해 더 낮은 점수(M=4.12, SD=1.66)를 보였다. 이는 사고 후 2개월에 비해 8개월이 되면서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다소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원면, 이원면 및 고남면이 두 시점 모두에 걸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피해 수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평균 4점 이상), 원북면과 태안읍은 피해 수준을 상대적으로

로 낮게 평가했다(평균 2점 이하). 근흥면과 남면 및 안면읍은 중간 수준의 피해를 보고했다(평균 3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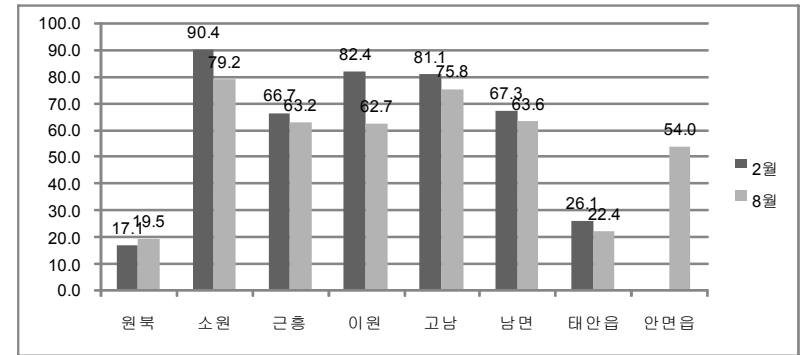
<그림 3> 거주 지역 및 조사 시점별 사고 피해노출 수준의 평균

사고 피해에 노출된 정도에 대한 지역별 양상은 사고 직후에 태안군에서 정한 4개 급지의 분류와는 다르다. 즉, 2급지로 지정된 이원면과 3급지로 지정된 고남면의 피해노출 정도가 1급지인 소원면과 유사하게 높고, 1급지로 지정된 원북면의 경우는 4급지인 태안읍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낮으며, 3급지로 지정된 남면과 안면읍의 경우도 2급지인 근흥면과 유사하다. 이런 반응양상은 피해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 급지를 지정 받은 데 대한 주민들의 반작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의 정도나 양상이 달라짐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즉, 만으로 보호되지 않고 기름이 유출된 바다의 해류에 직접 면해 있으며, 해안이 길이가 길거나 양식장이 많고 펜션 등의 관광시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사고 후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사고 피해노출에 대한 지역별 세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 문항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 백분율을 살펴보았다(아래의 그림 참조). 그 결과, 지역별로 피해노출 정도의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피해노출 점수를 보였던 이원, 소원 및 고남면은 주로 양식장 피해(58.8~67.2%)와 수산물 채취와 관련된 피해(84.7~86.6%)를 높게 호소하는 반면, 안면읍의 경우는 가게나 민박 혹은 펜션에 손님이 줄어든 피해(51.6%)를 상대적으로 높게 호소했다. “기름유출이나 방제작업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와 “가족들의 수산물 채취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문항에 대해 이원면 주민들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이 수치는 2월 조사에서보다 8월 조사에서 더 높아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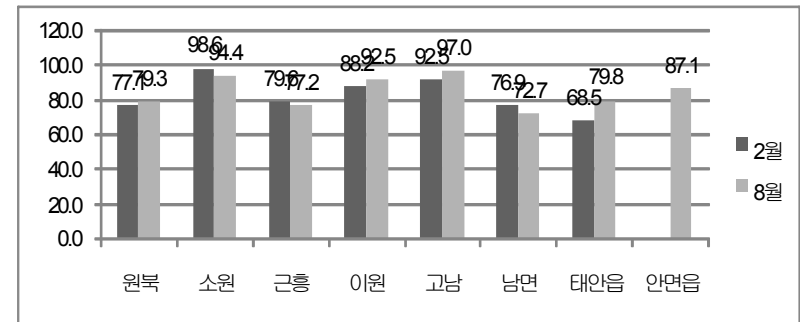
원면의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잡이에 대한 피해는 근흥, 고남, 소원, 남면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근흥, 남면, 원북면은 2월에서 8월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백분율이 높아졌다.

· 사고 전에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기름이 유출된 바다를 이용해서 직접 어업이나 관광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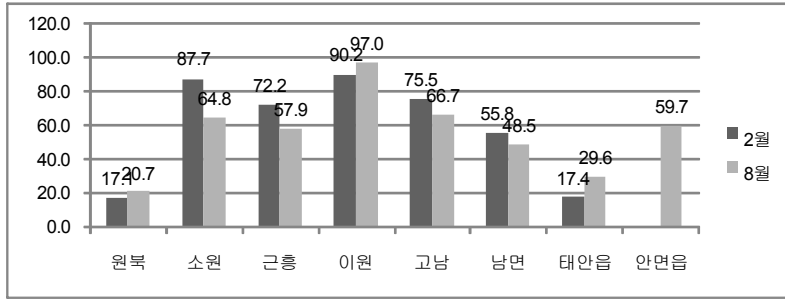
2월 $\chi^2=151.776, p<.001$, 8월 $\chi^2=100.660, p<.001$

· 사고 후 방제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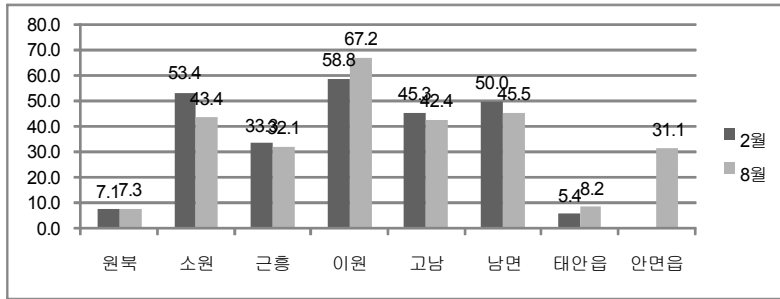
2월 $\chi^2=34.441, p<.001$, 8월 $\chi^2=20.748, p<.01$

· 기름 유출이나 방제작업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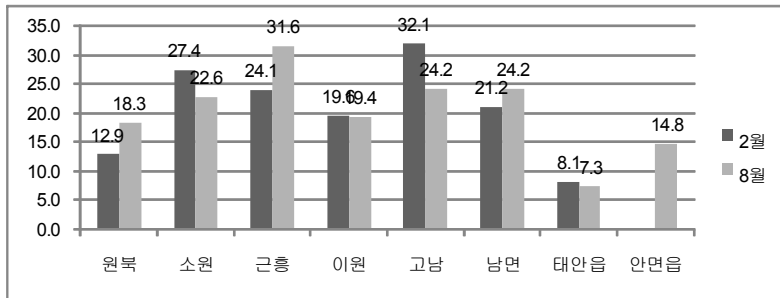
2월 $\chi^2=174.242$, $p<.001$, 8월 $\chi^2=116.000$, $p<.001$

· 기름 유출로 인해 귀하 가족의 양식장에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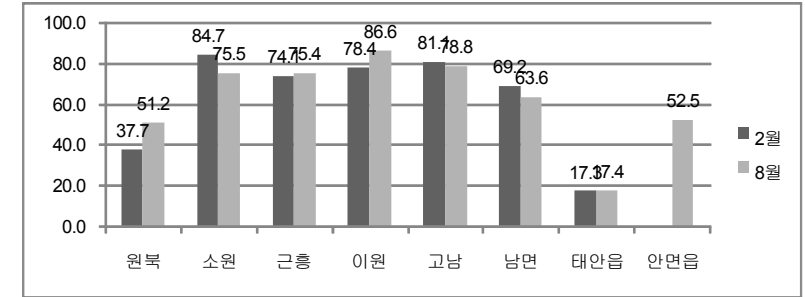
2월 $\chi^2=100.472$, $p<.001$, 8월 $\chi^2=99.767$, $p<.001$

· 기름 유출로 인해 귀하 가족의 고기잡이에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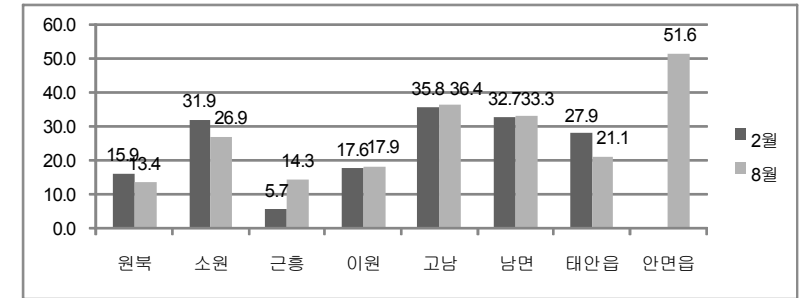
2월 $\chi^2=20.419$, $p<.01$, 8월 $\chi^2=18.208$, $p<.05$

· 기름 유출로 인해 귀하 가족의 수산물 채취에 직접 피해를 입었습니까?



2월 $\chi^2=136.005$, $p<.001$, 8월 $\chi^2=117.263$, $p<.001$

·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귀하 가족의 가게나 민박 혹은 펜션에 손님이 줄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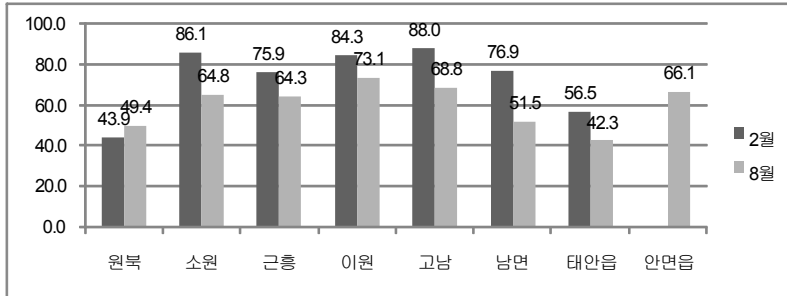


2월 $\chi^2=22.628$, $p<.01$, 8월 $\chi^2=39.098$, $p<.001$

2) 거주 지역과 시점별 스트레스 반응 증후군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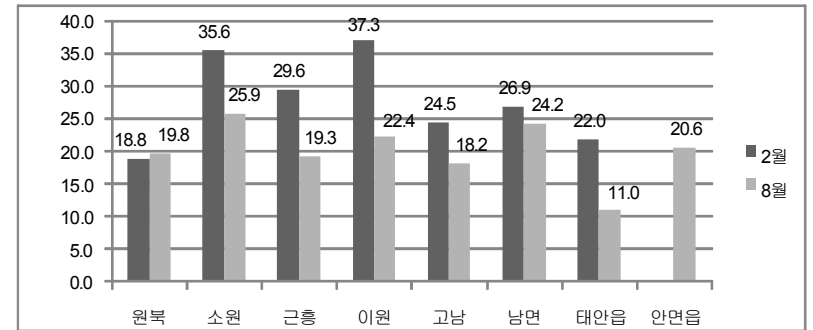
먼저 지역별 PTSD 증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시점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의미 있게 컸다. 2월 시점의 경우, 고남, 소원, 이원, 남, 근흥면 주민들이 원북면과 태안읍 주민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_{6,446}=10.112$, $p<.001$: 원북, 태안 < 근흥, 남, 이원, 고남, 소원; F 검정과 사후 검증 결과는 집단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것임, 이하 같음). 8월 시점의 자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관찰 할 수 있다($F_{7,486}=3.827$, $p<.001$: 태안 < 안면, 소원, 이원/ 원북 < 이

원). PTSD에 해당하는 절단점 이상을 보인 백분율은 아래의 그림 4와 같고, 이원, 고남, 소원면 등이 원북면이나 태안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백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월보다 8월 시점에서 그 정도가 낮아졌는데 원북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백분율이 낮기는 하지만 2월에 비해 8월에 오히려 조금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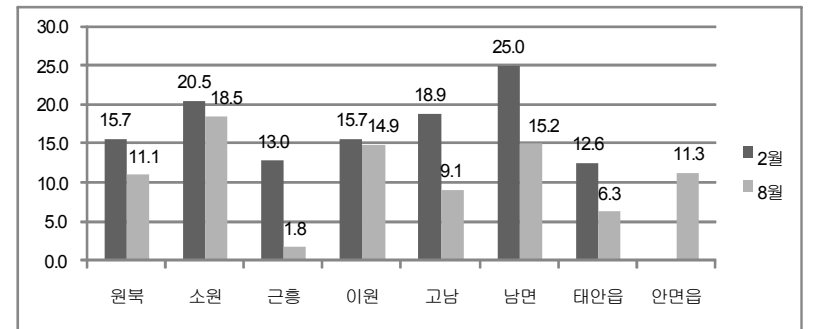
<그림 4> 거주 지역 및 조사 시점별 PTSD의 차이

불안증후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그림 5 참조), 2월 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지역별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소원과 이원면 주민들이 원북면이나 태안읍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불안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_{6,454}=3.925, p<.01$: 원북 < 소원, 이원/ 태안 < 이원). 그러나, 8월 시점의 조사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의미 있게 크지 않았다($F_{7,489}=2.124, p<.05$; 사후검증 *no sig*). 원북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불안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의 백분율이 2월에 비해 8월 시점에서 크게 떨어졌는데, 이런 경향은 이원, 근흥, 소원면과 태안읍에서 특히 그러했다. 이런 변화는 불안이 사고로 인한 피해의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해 8개월 후에는 사고 피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5> 거주 지역 및 조사 시점별 불안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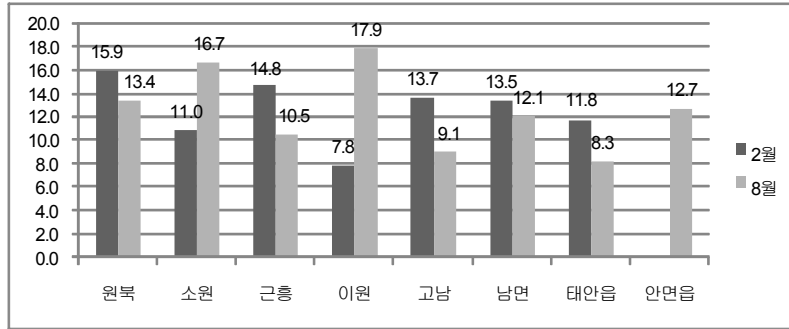
이웃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적대감 증후군을 살펴본 결과(그림 6 참조), 두 시점 모두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의미 있게 크지 않았다(2월 시점: $F_{6,457}=1.775, p>.05$ / 8월 시점: $F_{7,490}=1.250, p>.05$). 적대감 증후군에서 T점수 70점 이상을 나타내는 백분율의 시점별 차이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근흥이나 고남 및 남면에서는 2월에 비해 8월에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이원이나 소원면의 경우는 감소의 폭이 미미하다. 이런 차이는 사고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및 방제작업이나 근로사업 참여 등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6> 거주 지역 및 조사 시점별 적대감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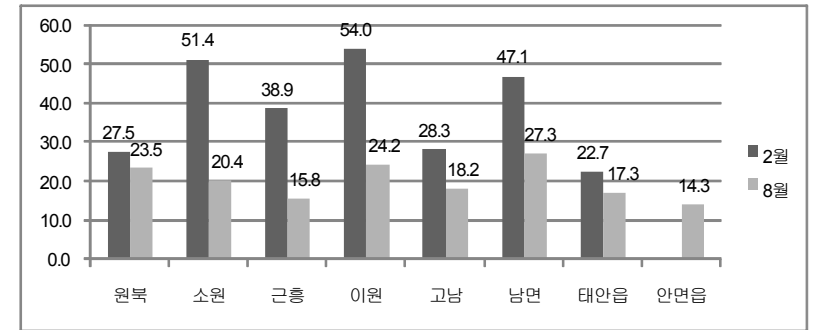
타인의 숨겨진 나쁜 의도를 의심하는 경향인 편집증의 지역과 시점별 차이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그림 7 참조), 적대감과 유사하게 두 시점 모두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의미 있게 크지 않았다(2월 시점: $F_{6,453}=426, p>.05$ / 8월 시점: $F_{7,490}=1.479, p>.05$). 그러나, 사고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원이나 소원면 주민들의 경우는 2월에 비해 8월 조사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의 적대감 수준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과 연관되는 듯하며, 이웃이나 마을간 갈등이 2월에 비해 8월에 오히려 더 높아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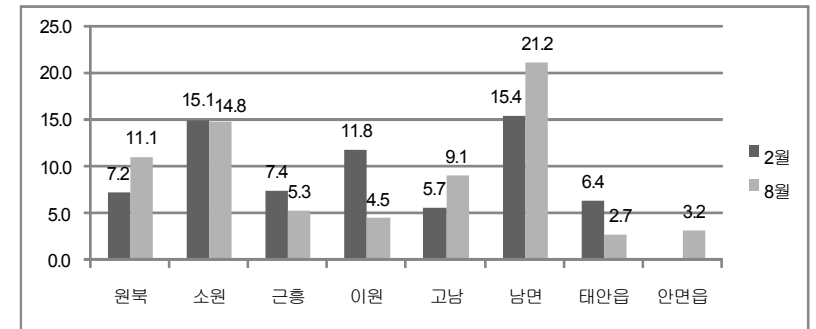
<그림 7> 거주 지역 및 조사 시점별 편견증의 차이

지역과 조사 시점별 우울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그림 8 참조). 2월 시점의 조사에서 지역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소원, 이원, 남면이 원북면이나 태안읍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의 백분율이 높고 평균 점수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F_{6,452}=7.549, p<.001$: 원북, 태안 < 남, 소원, 이원). 한편 8월 시점의 조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F_{7,489}=1.783, p>.05$). 2월 조사에서 매우 높은 우울증의 백분율을 보였던 이원, 소원, 남면 주민들은 8월에는 다른 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불안증과 유사한 양상으로 이를 통해 불안과 우울이 사고 후 급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의 전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8> 거주 지역 및 조사 시점별 우울증의 차이

끝으로, 자살위험 정도가 높음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8월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지역별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사후검증 결과 소원면과 남면 주민들이 태안읍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자살위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_{7,491}=3.341, p<.01$: 태안 < 남, 소원). 2월 시점의 표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F_{6,455}=1.695, p>.05$). 2월과 8월 시점 모두에서 소원면과 남면에서 자살위험도가 높는데, 현재 그 이유를 추정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남면이나 원북 및 고남면의 경우는 2월에 비해 8월의 조사에서 자살위험도가 더 높아졌는데, 그 이유도 추정하기 힘들다.



*지역별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에도 비울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원점수×2'를 했기 때문

<그림 9> 거주 지역 및 조사 시점별 자살위험의 차이

3) 거주 지역과 시점별 개별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

태안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을 보다 일상적인 수준의 언어로 직접 전달하기 위해 개별 문항에 대한 두 시점의 응답 반응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표 5, 6, 7 참조). 각각의 증후군을 구성하는 개별 증상(문항)³¹⁾ 중에서 피해노출 수준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증상들을 선별한 후, 재난경험의 지속과 회피, 감정, 생각, 신체적 반응 등의 묶음으로 재조직하여 시점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비교했다.

먼저 태안 주민들이 2월 조사에서 호소했던 재난 경험의 지속과 회피 행동 반응을 살펴보자(표 5와 6 참조). 피해노출 수준이 가장 적다고 보고했던 원북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기억이 종종 떠올라 괴로워했던 것으로($M \geq 2.25$) 보고했고, 아무런 단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고 기억이 떠오르는 플래시백 현상도 상당한 정도 경험한 것으로($M \geq 2.16$)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한 고통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는 시도를 통해($M \geq 2.06$) 오히려 마음의 병을 키우는 양상을 보였다.

8월 조사에서는 2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재경험 증상이나 회피 행동 반응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차이는 여전했는데, 사고 관련 단서에 의해 촉발되는 재경험에서 이원면 주민들이 원북면이나 태안읍 주민들에 비해 더 빈번했으며, 그러한 경험이나 기억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는 행동 또한 이원과 소원면 주민들이 더 많이 보였다.

<표 5> 재난 경험의 지속(사건의 재경험) 반응에 대한 지역별 차이

재난 경험의 지속(재경험)	M(SD)	
	2월	8월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단서(예, 바다 등)를 접하면 사고 당시 기억이 되살아남 (2월: $F_{6,457}=12.938, p<.001$ / 8월: $F_{7,492}=4.322, p<.001$) (2월: 원북<소원,이원,근흥,남면,고남,태안읍/ 8월: 원북,태안읍,고남<이원)	2.25(1.04)	1.69(1.18)
아무런 단서나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플래시백처럼 그 사고가 떠오름 (2월: $F_{6,457}=11.280, p<.001$ / 8월: $F_{7,492}=1.956, p>.05$) (2월: 원북<소원,이원,근흥,남면,고남,태안읍/ 8월: 차이 없음)	2.16(1.04)	1.77(1.13)
악몽과 같은 꿈을 통해서 그 때 사건이 재경험 됨 (2월: $F_{6,457}=3.097, p<.05$ / 8월: $F_{7,492}=1.197, p>.05$) (2월: 태안읍<소원,고남/ 8월: 차이 없음)	.80(1.08)	.62(0.97)

31) 문항 자체가 묻는 구체적인 내용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단일 문항을 사용해도 측정에 문제가 없다(Wanous, Reichers, & Hudy, 1997).

척도: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웬만큼 있다', 3 '꽤 심하다', 4 '아주 심하다'

<표 6> 회피 행동 반응에 대한 지역별 차이

회피 행동 반응	M(SD)	
	2월	8월
재경험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회피하고 억누르려 함 (2월: $F_{6,457}=8.181, p<.001$ / 8월: $F_{7,492}=4.049, p<.001$) (2월: 원북<소원,이원,근흥,남면,고남,태안읍/ 8월: 원북,태안읍<소원,이원)	2.06(1.11)	1.74(1.19)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노력함 (2월: $F_{6,457}=7.430, p<.001$ / 8월: $F_{7,492}=4.449, p<.001$) (2월: 원북,태안읍<소원,이원,근흥,고남/ 8월: 원북,태안읍<소원,이원,고남)	1.64(1.22)	1.52(1.22)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함 (2월: $F_{6,456}=3.000, p<.01$ / 8월: $F_{7,490}=1.740, p>.05$) (2월: 원북,태안읍<이원/ 8월: 차이 없음)	1.13(1.20)	1.13(1.17)
그 사건에 대한 대화를 피함 (2월: $F_{6,454}=1.474, p>.05$ / 8월: $F_{7,491}=2.139, p<.05$) (2월: 차이 없음/ 8월: 차이 없음)	1.25(1.20)	1.35(1.19)

척도: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웬만큼 있다', 3 '꽤 심하다', 4 '아주 심하다'

<표 7> 인지, 신체, 정서적 반응 증상에 대한 지역별 차이

	M(SD)	
	2월	8월
인지적 반응		
걱정과 근심(2월: $F_{6,457}=9.096, p<.001/$ 8월: $F_{7,492}=1.361, p>.05$) (2월: 원북,태안읍<소원,이원,근흥,남면,고남/ 8월: 차이 없음)	2.64(1.37)	2.21(1.41)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2월: $F_{6,457}=5.445, p<.001/$ 8월: $F_{7,492}=1.375, p>.05$) (2월: 원북,태안읍<소원,이원/ 8월: 차이 없음)	2.14(1.58)	1.76(1.53)
타인에 대한 불신(2월: $F_{6,457}=4.47, p>.05/$ 8월: $F_{7,492}=1.924, p>.05$) (2월: 차이 없음/ 8월: 차이 없음)	1.64(1.38)	1.42(1.39)
타인에 대한 피해의식(2월: $F_{6,457}=2.042, p>.05/$ 8월: $F_{7,492}=1.464, p>.05$) (2월: 차이 없음/ 8월: 차이 없음)	.68(1.11)	.68(1.09)
자살관련 생각(2월: $F_{6,456}=1.792, p>.05/$ 8월: $F_{7,492}=1.477, p>.05$) (2월: 차이 없음/ 8월: 차이 없음)	1.01(1.38)	.71(1.18)
자책(2월: $F_{6,457}=2.030, p>.05/$ 8월: $F_{7,492}=1.123, p>.05$) (2월: 차이 없음/ 8월: 차이 없음)	1.04(1.27)	1.02(1.24)
신체적 반응		
성욕감퇴 (2월: $F_{6,451}=5.28, p>.05/$ 8월: $F_{7,490}=1.927, p>.05$) (2월: 차이 없음/ 8월: 차이 없음)	1.80(1.55)	1.44(1.48)
수면곤란 (2월: $F_{6,457}=7.748, p<.001/$ 8월: $F_{7,492}=2.435, p<.05$) (2월: 태안읍<소원,이원,근흥,남면,고남/ 8월: 태안읍<이원)	1.57(1.26)	1.13(1.22)
신경과민 (2월: $F_{6,457}=4.029, p<.01/$ 8월: $F_{7,491}=2.616, p<.05$) (2월: 태안읍<소원,이원,남면/ 8월: 태안읍<이원)	2.34(1.46)	2.01(1.39)
긴장 수준 높고 자주 놀람 (2월: $F_{6,457}=3.776, p<.01/$ 8월: $F_{7,492}=8.58, p>.05$) (2월: 원북<소원,이원,근흥,고남/ 8월: 차이 없음)	1.56(1.36)	1.25(1.23)
조급하고 안절부절 못함 (2월: $F_{6,456}=6.622, p<.001/$ 8월: $F_{7,492}=1.521, p>.05$) (2월: 원북<소원,이원,근흥,고남/ 8월: 차이 없음)	1.30(1.41)	1.11(1.33)
심장이 마구 뛰고 몸이 떨림 (2월: $F_{6,457}=2.357, p<.05/$ 8월: $F_{7,492}=2.008, p>.05$) (2월: 원북<소원,이원, / 8월: 차이 없음)	1.31(1.36)	1.06(1.28)
정서적 반응		
외로움 (2월: $F_{6,457}=4.200, p<.001/$ 8월: $F_{7,492}=6.690, p>.05$) (2월: 태안읍<소원,이원,남면/ 8월: 차이 없음)	1.64(1.44)	1.37(1.39)
일상 관심 흥미 저하 (2월: $F_{6,457}=6.296, p<.001/$ 8월: $F_{7,492}=1.946, p>.05$) (2월: 태안읍<소원,이원,남면,고남/ 8월: 차이 없음)	1.99(1.48)	1.58(1.40)
허무 울적 침체된 기분 (2월: $F_{6,457}=4.910, p<.001/$ 8월: $F_{7,492}=2.245, p<.05$) (2월: 태안읍<소원,이원/ 8월: 태안읍<이원)	2.52(1.34)	1.97(1.39)
폭발적인 분노 경험 (2월: $F_{6,457}=3.107, p<.01/$ 8월: $F_{7,491}=1.724, p>.05$) (2월: 원북<소원/ 8월: 차이 없음)	1.95(1.52)	1.38(1.43)
사소한 일에 짜증 느낌 (2월: $F_{6,457}=2.623, p<.05 N.S/$ 8월: $F_{7,492}=1.600, p>.05$) (2월: 차이 없음/ 8월: 차이 없음)	1.94(1.45)	1.55(1.37)
두려움 공포 경험 (2월: $F_{6,457}=2.438, p<.05 N.S/$ 8월: $F_{7,492}=1.934, p>.05$) (2월: 차이 없음/ 8월: 차이 없음)	1.16(1.39)	.86(1.17)
비현실적 느낌 증가 (2월: $F_{6,456}=1.630, p>.05/$ 8월: $F_{7,492}=1.868, p>.05$) (2월: 차이 없음/ 8월: 차이 없음)	.97(1.21)	.80(1.19)

척도: 0 '전혀 없다', 1 '약간 있다', 2 '웬만큼 있다', 3 '꽤 심하다', 4 '아주 심하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 신체 및 정서 반응의 정도와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자(표 7 참조). 기름유출사고 2개월 후 태안의 모든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심리 및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비현실적인 느낌의 증가'에 대한 응답을 제하고는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이 "약간 있다"는 정도 이상이였다. 특히 긴장 수준이 높고 자주 놀라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몸이 떨리는 등의 신체 증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다. 또한 감정적으로는 허무하고 울적하며 침체된 기분 등으로 인해 일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저하되어 있었고,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하여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불쾌감을 느끼며 분노와 적대감을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움과 공포도 호소했으며 공격성과 충동성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들은 걱정과 근심이 많았고 타인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높아진 상태였으며,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태도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다.

이러한 고통 중 일부는 피해노출 수준이 높은 소원과 이원면 주민들이 원북면이나 태안읍 주민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특히 더 높은 수준의 과민성($M=2.73, SD=1.38$)과 불안정한 신체적 반응($M=1.86, SD=1.64$), 긴장($M=1.86, SD=1.23$), 항진된 심혈관계 반응($M=1.63, SD=1.34$) 등을 보였으며, 외롭고($M=2.20, SD=1.58$) 허무하며 울적한 기분($M=3.16, SD=.95$)을 원북면이나 태안읍 주민들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의 관심과 흥미 저하 수준($M=2.45, SD=1.33$)이 더 높았고, 걱정과 근심($M=3.24, SD=1.05$)을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M=2.73, SD=1.28$) 또한 더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조사에서는 증상의 경험 수준이 2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지역별 차이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원면 주민들은 태안읍 주민들에 비해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수면 문제($M=1.45, SD=1.20$), 신경과민 증상($M=2.37, SD=1.34$), 그리고 허무하고 울적하며 침체된 기분($M=2.48, SD=1.19$) 경험을 보고했다.

5. 맺음말

대형 기름유출사고를 경험한 태안주민들은 사고 후 8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고 후 2개월 시점에 비해 8개월 시점에서는 불안이나 우울 및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과 적대감이 많이 감소했으나, 그 정도는 여전히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자

살 생각과 편집증적 사고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이런 증후군 역시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심리적 불건강이나 부적응 지수들이 높게 나타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주로 기름유출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불만한 증거가 있다.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 지수들의 심도가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사실이 2008년 2월과 8월의 두 시점에서 조사한 연구 모두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용량-반응’ 관계는 많은 역학 연구에서 인과적 증거로 해석하는 강건한 자료에 해당한다.

지역별 차이를 종합해 보면, 2월과 8월 두 시점의 조사 모두에서 이원과 소원면 주민들이 사고로 인한 피해노출 수준을 높게 보고하고,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적응 증상들을 경험한다고 호소하며, 타인의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는 등의 불신 수준이 높았다. 이에 반해, 원북면과 태안읍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피해노출 수준과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고남, 남, 근흥면 및 안면읍 주민들은 중간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명시도와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가 조사 시점이나 부적응 종류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서론에서 언급한 스트레스 연구 틀과 환경재난의 관점이 태안주민들의 다친 마음과 지속적인 고통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태안 지역민들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반 질병 모형에 따른 의학적 치료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즉, 원인이 분명하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지역사회 및 생태계와 밀접하게 상호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사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염으로 인한 환경 생태계의 복원이나 개인의 문화적 생태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정책적 접근이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려는 접근보다 큰 효과성을 보이고 비용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증상의 유지를 차단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장애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주민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사고의 배상이나 보상과 관련해서 비교적 확실성이 높은 부분과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을 가려내고, 확실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분명하게 전달하여 그 한계 내에서 어떤 노력이 가능한지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과의 면접 과정에서 사고의 배상이나 보상과 관련해서 사실과 매우 다른 소문이나 기대가 무성하였고 관련 정보의 보

유나 소통에서 주민 간 격차가 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가 개인과 지역사회의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이런 예측불가능성이 태안주민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을 키우거나 유지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신뢰를 회복하거나 증진하는 작업은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결정을 어떻게 정한다는 결정규칙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며 실제로 지켜나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마을이나 행정 단위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에서 사고 후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결정과 집행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욕구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를 도와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개입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외부 전문가로서 주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speak for’)가 아니라, 태안주민들의 문제를 공감하며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speak with’)를 견지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측불가능성과 주민들 사이의 신뢰부족 문제가 태안주민들의 심리적 문제를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세진, 김교현 및 권선중(2008)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심층면접 과정에서 태안주민들이 호소한 가장 직접적인 어려움은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웃이나 가까운 동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불신이나 다툼이었다. 현실적이고 타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며, 주민들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택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해 보는 기획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태안의 지역들 사이에 상존하고 있는 차이를 감안하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나 사고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에서 각 지역은 고유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원면 주민들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양식장이나 수산물 채취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지각하는 정도나 “기름유출이나 방제작업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하는 정도가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보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더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편집증적 증상 경험도 높아졌다. 이런 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감안한 정책과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들은 태안의 각 지역사회가 재난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이 만들어가야 할 이상적인 사회 재생의 방향은 ‘생산성의 증가’와 ‘공정성의 확립’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구성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사회 및 경제적 대접을 공정하고 형평 되게

나눌 수 있고, 현재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도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는 방향을 뜻한다. '생산성(productivity)'과 '공정성(justice)'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상호 배타적인 가치로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라는 상위 체계(system)의 수준이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 가치가 밀접하게 상호 융합되어야 비로소 함께 달성가능하며 어느 하나만으로 홀로 달성되기 어렵다. 재난은 여러 가지 불행을 초래하지만 다른 한편 이런 극심한 변화가 없다면 인식하고 개혁하지 못할 큰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개인과 지역사회에 제공해 주기도 한다. 장차 태안의 재난 복구 노력은 생산성과 공정성 및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기획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차 개선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주민들의 심리적 고통이 상당부분 경제적 피해에 의해 촉진되는 만큼, 해결되지 않은 보상 문제는 2차 이상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8개월 시점에 감소한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들이 추후에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결과해석 및 활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화조사가 갖는 한계로 인해 외부 접촉을 거부할 만큼 심리적 고통이 큰 사람들이 표본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이라는 특정 조건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의 양상을 평면적 수준에서 기술하는데 머물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고통에 대한 피해노출 수준의 설명력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다양한 조건 등을 탐색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태안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부모에 해당하는 성인들의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력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 또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 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교현. 2008. 기술/환경 재난과 심리적 삶의 변화.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
- 김교현, 권선중.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ECO」 12: 83-107.
- 김세진, 김교현, 권선중. 2008. 재난을 경험한 태안주민들의 적응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2008 한국건강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7-9.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 PAI 표준화 연구: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311-329.
- 노진철.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전문가 관점에 대한 근거이론 방법론적 접근. 「2008 태안국제환경포럼 초청세미나 자료집」 50-69.
- 박재묵.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ECO」 12: 7-42.
- 이선미, 은현정. 1999. 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8: 501-513.
- 이시재.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향연구. 「ECO」 12: 109-144.
- 조성겸. 1990. 전화조사 응답자의 표집방법으로서 CNU방법과 비례확률 표집방법의 비교연구. 「언론정보연구」 27: 93-106.
- Aldwin, C. M. 2007.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An integrative perspective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 513-524.
- Hobfoll, S. E.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 307-324.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Horowitz, M., Wilner, M., &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 209-218.

- Kessler, R. C., Berglund, P., Delmer, O., Jin, R., Merikangas, K. R., & Walters, E. E.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 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 593-602.
- Kessler, R. C., Chiu, W. T., Delmer, O., Merikangas, K. R., & Walters, E. E. 2005. "Prevalence, severity, and comorbidity of 12-month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 617-627.
- Kessler, R. C., Sonnega, A., Bromet, E., Hughes, M., & Nelson, C. B. 199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2, 1048-1060.
- Lazarus, R. S. 1984. "Puzzles in the study of daily hassl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7, 375-389.
- Lazarus, R. S. 1993. "From psychological stress to the emotions: A history of changing outlook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21.
- Lazarus, R. S. 2000. "Toward better research on stress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65-673.
- Palinkas, L. A., Petterson, J. S., Russell, J., & Downs, M. A. 1993. "Community patterns of psychiatric disorders after the Exxon Valdez oil spill."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1517-1523.
- Rubin, D. C., Berntsen, D., & Bohni, M. K. 2008. "A Memory-based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valuating basic assumptions underlying the PTSD diagnosis." *Psychological Review*. 115, 985-1011.
-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 Selye, H. 1982.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L. Goldberger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pp. 7-17). New York: Free Press.
- Wanous, J. P., Reichers, A. E., & Hudy, M. J. 1997. "Overall job satisfaction: How good are single-item measu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247-252.

] 메모]